

# 통일정책연구



‘비핵·개방·3000’하 남북경협 해법으로서 자원공동개발 •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 종소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비교 • 구매력평가이론에 근거한 북한 가격 및 환율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 김정일 시대(1998~2007) 북한당  
국의 통일담론 분석: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북한 시에 나타난 ‘진  
달래’를 중심으로 •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 ■ 일반논문

‘비핵·개방·3000’ 하 남북경협 해법으로서 자원공동개발 / 홍성국 □ . . .	1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 / 박병광 □ . . . . .	31
□중소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비교 □□ / 이상숙 □ . . . . .	53
□구매력평가이론에 근거한 북한 가격 및 환율 분석 / 문성민 □ . . . . .	83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년 패널 연구 / 유시은 · 엄진섭 · 윤덕룡 · 전우택 □ . . . . .	117
□김정일 시대(1998 ~ 2007) 북한당국의 통일담론 분석: □□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 김석향 · 권혜진 □ . . . . .	155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 를 중심으로 / 이상숙 □ . . . . .	183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 김학성 □ . . . . .	203



□ General Articles

**Joint Exploitation of Resources as a Solution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 □  
□ *Song-Kuk Hong*

**China’s Standpoint on the North Korea-America Relationship Improvement After February 13 Agreement** □ *Byung-Kwang Park*

**A Comparative Study on Self-reliant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 *Sang-Sook Lee*

**An Empirical Analysis on North Korean Prices and Exchange Rates: Employing th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 *Sung-Min Moon*

**Determinant Factors for Increased Income Level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 7-year Panel Study** □ *Shi-Eun Yu, Jin-Sup Eom, Deok Ryong Yoon and Woo-Taek Jeon*

**North Korean Official Discourses on the Issue of Reunification during the Kim Jong-il Era (1998-2007)** □ *Seok-Hyang Kim and Hye-Jin Kwon*

**The Changing Image of Azalea in Literary Works and Its Implications** □ *Sang-Sook Lee*

**Thinking about Methodology of the Unification Research : Evolution, disputed Issues and Subjects** □ *Hak-Sung Kim*

# ‘비핵·개방·3000’하 남북경협 해법으로서 자원공동개발

홍 성 국\*

- I. 서설
- II. ‘비핵’과 ‘개방·3000’의 상호관계
- III. 남북 자원공동개발의 필요성
- IV. 남북 자원공동개발의 효과성
- V. 결론

## 국문요약

‘비핵·개방·3000’하에서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 개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 자원공동개발이 남한의 경우는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효과, 투자수익효과 등을,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내수보장효과 등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북한광업생산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경우 2006년 24.1억 달러의 생산에서 10년 뒤 54.2억 달러로 증가될 수 있다. 이는 광업생산을 2.2배 증대시키는 것이며 연평균 8.4% 생산증가율을 지속하는 셈이 된다. 또한 자원공동개발은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상호성 또는 쌍방향성에 기초한 남북경협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남한 일방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불균형성을 시정하고 정상적 남북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남북한 모두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정상적인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공동개발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가운데 ‘3000’ 실현을 위한 선도부문이 될 것이다.

**주제어:** 비핵·개방·3000, 남북 자원공동개발, 남북 경협 효과

## I. 서설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비핵·개방·3000’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한 ‘비핵’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방’ 실시와 동시에 소득수준 향상책인 ‘3000’도 지향할 핵심적 정책 내용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 특히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문제는 ‘비핵’과 ‘개방·3000’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간에는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경협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구조적으로 기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은 기형성이 그대로 굳어져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최근 당국간 남북경협은 물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데,<sup>1</sup> 이것은 남한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냉각 분위기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 기본정책이 알려지면서 북한 역시 민간단체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sup>2</sup>

본 논문의 목적은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하에서 남북경협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관련된 해법과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정책 본연의 목적인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도 맞물린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먼저 ‘비핵·개방·3000’이 담고 있는 기본적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즉, ‘비핵’, ‘개방’ 그리고 ‘3000’의 상호관계의 개략적인 윤곽을 짚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하에서의 유효적 남북경협의 모색의 일환으로 남북 공동자원 개발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더 나아가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 정치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sup>3</sup>

특히 본 논문에서는 남북 자원개발협력시 기대되는 경제효과의 측정을 구체적으로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위 10대 광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sup>1</sup>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08년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북교역 및 협력업체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0%가 개성공단 진출에 소극적이거나 관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2007 남북교역 조사보고서』(2008), p. 26.

<sup>2</sup>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3월 1일 “남측 민간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으며 대북 구호사업과 평양 빵공장 지원사업차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나눔과 평화재단」과 「어린이 재단」을 비롯, 황해도 개풍군 양묘장 조성 협의회차 3.10 개성을 방문하려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도 북한으로부터 연기통보를 받았거나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중앙SUNDAY』, 2008년 3월 9일.

<sup>3</sup> 남성욱,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전망,” 『Strategy 21』, 제20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pp. 138-163 참조.

다.<sup>4</sup> 그리고 자원 개발효과의 정량적 측정결과를 통해 새로운 남북경협의 유효적 해법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 II. ‘비핵’과 ‘개방·3000’의 상호관계

### 1. ‘비핵’과 ‘개방’을 둘러싼 관점

현 정부는 핵시설의 불능화가 이루어지면 비록 완전한 핵 폐기가 안 된 상태라 해도 북한의 30만 산업인력 양성과 같은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미완(未完)의 상태에 있더라도 ‘개방·3000’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테면 핵 폐기 과정이 30% 쯤 진전되면 남북경협 협의체와 국제지원 메커니즘을 만들고 다시 30% 진전이 되면 프로그램에 돈을 투입하고 100% 완료되면 5대 프로그램 전체가 가동하는 식의 접근방법이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김하중 통일부장관도 “비핵·개방·3000에서 ‘3000’도 중요하다”고 피력하면서도 핵신고 문제로 멈춰선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sup>6</sup> 이후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 합의 등 4가지 원칙하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7</sup>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김영운 박사는 북핵문제보다 북한의 개방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심한 거부감으로 남북경협이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sup>8</sup> 또한 북한 대학원의 양문수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남 경제교류협력은 개방이나 다름없으며 타 외국보다 남한에 대하여는 개방에 따른 흡수통일의 우려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그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며…, 남한 사람과 접촉하고 남한기업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경제

<sup>4</sup> 북한의 상위 10대 광종은 생산액면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

<sup>5</sup> 이는 2007년 12월 18일 인수위 소속 현인택 교수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제시되었다. 『중앙일보』, 2007년 12월 18일.

<sup>6</sup> 통일부 기자 간담회, 2008년 3월 13일.

<sup>7</sup> 통일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2008), p. 24.

<sup>8</sup> 김영운,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수는 북한경제』, 범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pp. 58-59.

<sup>9</sup> 양문수,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통일연구원, 2007), p. 43.

를 학습하게 하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sup>10</sup>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보다 북한 개방이 훨씬 용이하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개방 문제가 국제적 문제, 특히 북·미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정상화 없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sup>11</sup>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 개방의 실마리를 북핵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대외관계에서 찾고 있다. 또한 극동문제연구소의 홍성국 박사는 북핵문제는 태생 자체가 북한 체제 고수의 수단이어 왔으므로 북핵문제 해결이 없는 한 북한 체제의 개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sup>12</sup>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개방 확대는 북핵문제가 진전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논점은 북핵문제와 개방을 둘러싼 접근방법상의 미묘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북핵문제는 북한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따라서 남북간 협력으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체제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문제를 북한 개방의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 체제는 그대로 고수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 개방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 ‘비핵’과 ‘개방·3000’(경협사업)의 연계문제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정책기조는 9·19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비핵’과 ‘개방·3000’을 순차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대북정

<sup>10</sup> 이런 점에서 양문수 교수는 남한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핵심적 요소가 시장화라면, 그것은 상품, 화폐, 경쟁, 재산권 계약, 경제적 합리성 추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요소들을 북한 주민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위의 글, p. 43.

<sup>11</sup> 남성욱,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전망,” p. 146.

<sup>12</sup> 홍성국, “북핵문제가 북한의 체제내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개혁 가능성: 핵실험이후 정책 전개를 중심으로』 (日本 聖學院大學 総合研究所·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제하의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07.9.21).

책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을 완성시킨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방·3000’을 추진해 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와 같은 순차적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극단적인 화해협력론자들의 경우 ‘비핵’과 ‘개방·3000’의 상호관계가 순차적 관계라고 힘주어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이 맞다면, 남북경협은 제한적인 조건부 남북경협이 되며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첫째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2007년 2·13합의 이래로 북핵문제의 해결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투명한 국제정치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북한이 핵 불능화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집착은 오히려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 지연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 복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13</sup> 그러나 북한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경제난이라는 커다란 현실적인 부담과 제약이 뒤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만큼 무한정 핵문제에 매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중심에 놓고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며 남북경협 역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접근과 속도를 같이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과 ‘개방·3000’의 상호 관계는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연계적 관계’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대북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된 동태적 문제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한 단절되어서도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중요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남북관계 개선이 국가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맹목적인 사안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sup>13</sup> 『조선중앙통신』, 2008년 8월 26일.



이다. 지난 남북간 경험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별개 문제인 것처럼 취급해 온 접근방식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기간 발생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내 ‘경제난’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따라서 대북정책의 지속성이란 과거 대북정책의 답습이나 연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언제든지 시기와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발전하도록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개방’은 내부 개혁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을 정책적으로 포괄하여 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 개혁과 개방이 성질상 서로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적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데 연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의 개방과 내부 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개방’은 개혁이 내포된 포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북한 변화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남북협력은 남한 일방의 대량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어떤 방식이든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하에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시기에는 북한 측의 체제 변화 차단을 위한 반사적 조치나 행동에 대해 애써 외면하거나 등한히 함으로써 남북협력이 기형적으로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개방’에 부합되는 가장 큰 근거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상호 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남한이 개발 투자하여 상응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경우에 지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측 역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종전과 같이 비용 최소화, 이익 최대화 등의 기업적 책임과 위험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은 곧 북한의 체제 변화를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남북경협은 북한의 ‘3000’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3000’ 구상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호응해 온다면 향후 10년 동안에 1인당 GNI 수준을 3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NI는 1,108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므로,<sup>15</sup> 이것은 남한이 2006년 대비 약 2.7배로 올려놓겠다는 장기 목표이다. 바꾸

<sup>14</sup>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평가,” 『수은 북한경제』,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어 말하면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를 이후부터 매년 10.5%씩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3000’ 구상은 경상가격 기준인지 불변가격 기준에 입각한 것인지 아직 명료하지는 않지만, 경상가격 기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1인당 GNI는 시계열분석을 위한 특수 분석목적은 제외하고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10.5%는 경상증가율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베이스로 환산하면, 최근 북한의 높은 물가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3000’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 성장률은 5~6%의 지속적으로 보장하여 주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성장목표는 199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할 이래 연평균 3% 미만에서 맴돌고 있는 북한의 저성장을 최소한 배가시키겠다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는 남한의 경제력으로 볼 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비핵·개방·3000’은 진정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적극적인 방향성이 함축되어 있다. 남북경제협은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때 그 의의가 있다. 이질적인 북한경제체제와 남한경제체제가 남북협력을 통해 상호 수렴하면서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최우선적으로 만족해야 할 조건은 남북 공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남북한 모두에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은 항상 숙제로 남게 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비핵·개방·3000’은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른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겠다는 북한의 개방의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sup>15</sup>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p. 48.

### Ⅲ. 남북 자원공동개발의 필요성

#### 1.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북경협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남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금·아연·마그네사이트·철 등 20대 광종에 대한 금액 표시 잠재가치 총계가 남한은 95조 원, 북한은 2,2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6</sup>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북한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그것에 비해 24배에 이르는 규모로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남한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20대 광종 가운데 북한보다 남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 고령토, 활석, 석면 등 4개의 광종을 제외하고 남한이 모두 약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무연탄은 70년대 말 이후 남한의 청정연료화 정책에 따라 국내석탄수요가 격감하면서 수입의존도가 55%~60% 수준으로 낮을 뿐이다. 이로 볼 때 적어도 북핵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되면서 한반도가 비핵화로 진전된다면, 현 정부는 우선 먼저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 남북경협을 도모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남북 당국간에는 2005년 7월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4개의 광종에 대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2006년 6월에는 우선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2개 광종의 광산을 공동 조사한 후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이 이들 광종의 공동 개발에 합의한 이유는 북한 지역에 이들 광종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북한 당국 스스로도 공동 개발을 바라기도 하였지만, 아연과 마그네시아 크링커의 국내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광종의 국제시장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여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도 민간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자원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8년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대북한 자원개발사업은 투자 2건, 계획 4건이며 또한 협의 중인 사업도 3건이 있다. 총 9건의 사업이 투자하거나 계획 또는 협의 중에 있는 셈이다.

<표 1>에서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을 보면,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의 광명성 총회사와 합작하여 정춘후연광산개발사업에 뛰어들었고 (주)태림은 2006년 4월 민간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개선총회사·아리랑회사 등과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룡강석산(화강석) 개발사업을 추진, 동년 9월 개성에 석재가공공장을 준공하고

<sup>16</sup>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05) 참조.

2007년 초부터 자연석(조경석)을 반입해 오고 있다. 이들의 투자규모는 대한광업진흥공사는 600만 달러이고 (주)태림은 390만 달러이다. 투자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현재 4건이다. 아스트라(주), 굿네이버스, 광진공, (주)원진 등이 북한의 명지총회사,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광명성총회사 등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1> 남한기업의 대북한 자원개발 추진사업 현황

구분	추진업체	사업대상자	추진내용	투자방식	비고
투자 (2건)	광진공	광명성총회사	정촌흑연광산 개발	합작	600만 달러
	(주)태림	개선총회사	룡강석산(화강석)개발 개성석재가공공장 운영	합영	390만 달러 (200만 달러 계획)
투자계획 (4건)	아스트라(주)	명지총회사	무연탄 반입 광산 개발	합작	300만 달러 (추정)
	굿네이버스	아·태평화위원회	아연제련소 증설	합작	500만 달러 계획
	광진공	광명성총회사	풍천흑연광산 조사	미정	'07.11 시추탐사
	광진공·원진	광명성총회사	이양석회석광산 조사	미정	'08 시추탐사
협의 중 (3건)	남해화학	민경련	인회석광산 개발	미정	
	대성자원개발	민경련	석회석광산 개발	미정	
	(주)원진	민경련	마그네사이트광산 개발	미정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新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2007), p. 8 재인용.

## 2. 남한의 수입규모와 북한의 수출규모

2006년 남한의 KOTRA가 추정한 북한의 수출 실적은 총 9.5억 달러이며<sup>17</sup> 남한의 반입액(5.2억 달러)을 포함하게 되면 14.7억 달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WTS 자료<sup>18</sup>는 같은 해 북한의 수출 규모를 21.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양자간에 6.8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규모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에 있어서도 대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여기에서 북한의 총 무역 통계는 남

<sup>17</sup> 한국무역협회, KOTRA;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2007), p. 44.

<sup>18</sup> World Trade Search, *D.P.R.Korea Export & Import* (Kyoto, Japan: WTS Co., Ltd. 2007)에 기초하여 산출.

한 자료를 활용하되 대북한 반출입액을 포함시키고, 북한 광산물 수출통계는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편의를 위해 일본 WTS 측 자료에서 광산물 수출 비중을 활용하여 역산출, 관련 통계를 완성하였다.

남한의 광물 총 수입액은 2002년 69.4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동년대비 2.3배로 늘어 157.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 기간 중 남한의 광물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으로 22.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해 온 셈이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광물가격 상승 및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남한의 광물 총 수입액 비중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4~5%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sup>20</sup>

북한의 경우 주요 광산물과 그 제품의 총 수출액이 남한을 포함하여 2002년에 7백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82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북한의 광산물과 그 제품 수출 규모가 지난 5년 사이에 11.7배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남한의 수입증가율(2.3배)보다 훨씬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의 경우 북한의 광산물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규모(14.7억 달러)의 5.6%로서 2002년 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에 있어서 광산물 수출이 외화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남한의 광물 수입규모와 북한의 광물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2년에 북한은 남한 수입규모(69.4억 달러)의 0.1%에 불과한 7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2006년에는 남한 수입규모(157.9억 달러)의 0.5% 수준으로 올라갔다. 기간 중 북한의 광산물 수출액이 광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나름대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수출규모는 아직 남한 수입 수요에 크게 기여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광산물에 대한 남한의 수입규모와 북한의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그러나 북한 수출 물량 증가의 한계는 북한 지역에 광물 매장량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다. 북한의 광물 생산역량과 수출역량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통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광물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높일 때, 남한은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남한의 광물 수입

<sup>19</sup> 통일부 내부 분석자료.

<sup>20</sup> 한국지질자원연구원·산업자원부,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7), p. 252.

규모 급증 추세에 맞물려 북한의 광물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광물자원공동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광산물에 대한 남한의 수입규모와 북한의 수출규모

구분	총 액(억 달러)		그 중 광산물(억 달러)		비 중(%)	
	남한 수입 <sup>1)</sup>	북한 수출 <sup>1)</sup>	남한 수입 <sup>2)</sup>	북한 수출	남한 수입	북한 수출 <sup>3)</sup>
2002	1,521.3	10.1	69.4	0.07	4.6	0.7
2003	1,788.3	10.7	86.0	0.13	4.8	1.2
2004	2,538.4	12.8	121.7	0.50	4.8	3.9
2005	2,612.4	13.4	122.8	0.80	4.7	6.0
2006	3,093.8	14.7	157.9	0.82	5.1	5.6

자료: 1)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pp. 44, 83.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산업자원부,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7), p. 252.

3) World Trade Search, *D.P.R.Korea Export & Import* (Kyoto, Japan: WTS Co. Ltd., 2007), p. 12에서 산출.

주: 북한 수출액은 남한의 반입액을 포함한 것이며 그 중 광산물 수출액은 일본의 광산물 수출비중으로 역산한 것임.

### 3. 북한산 광물 가격차 문제

남한의 광산물 수입가격은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남한의 수입가격은 곧 국제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무역은 대외시장과 상대하여야 하므로 광산물 수출가격이 기본적으로 국제가격의 변동에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등 일부 주요 국가들<sup>21)</sup>에 대해서는 정치역학적인 수요나 전통적 교역관례 등 경제외적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수출가격이 국제가격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가격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에서의 수출이 아직도 수입을 위한 자력갱생의 보조수단이라는 소극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수출산업, 수출정보, 마케팅 등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북한의 수출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출발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개되기

<sup>21)</sup> 이들 국가들을 북한은 전통적으로 소위 친선국가로 취급하여 왔으며 무역구조상으로 이들 국가의 교역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KOTRA의 연도별 북한 무역 추정 자료 참조.

때문에 수출조건이 아주 불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의 최대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수출 행태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광산물의 수출가격은 다른 품목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산된 광산물의 질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외적 이유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광산물 수출이 대부분 상대국의 수입대금 결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수출가격은 ‘국제가격+경제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통계상에 나타난 북한의 수출통계는 상대국 대북한 수입통계를 그대로 전환한 것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수출통계는 수출국의 본선인도가격인 F.O.B 가격을 적용하는데 도착가격인 C.I.F 가격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보다 현실적인 광물 수출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DOT방식을 활용되는데, 이에 의할 경우 북한의 광물 수출가격은 조사된 상대국의 수입가격보다 10% 정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광물 수출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광산물 평균 수입가격과 북한의 광산물 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북한 가격의 저렴한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무리가 따른다. 광종마다 품위가 다르고 HS 코드상 광산물 품목군의 가공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평균 가격 비교는 분석 상 많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가격으로는 남북간의 횡적 비교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계열 통계도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남북교역에서 마그네사이트의 평균 반입단가는 톤 당 2002년 77.9달러 → 2003년 86.6달러 → 2004년 88.1달러 → 2005년 94.9달러의 변화를 보였다.<sup>22</sup> 2006년 마그네사이트의 반입실적은 없었다. 기간 중 반입 물품은 천연탄산 마그네슘은 없었고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내지 기타 1차 가공물을 반입하였다. 또한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는 2004년의 경우 톤당 222달러까지 올라갔다. 당시 남한의 반입량은 전년대비 99.1% 격감하였으며 대신 값이 싸고 안정세를 보인 기타 제품 반입이 8.3%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마그네사

<sup>22</sup> 무역협회 자료.

이트의 평균 반입단가가 톤 당 88.1 달러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규칙한 변동은 꼼꼼히 따져보면 여타년도에도 마찬가지이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추세로 보면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평균가격이 안정적 오름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반입된 마그네사이트 품목군이 다른 광물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수입한 마그네사이트의 국제 평균 가격은 국가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2006년 기준으로 톤 당 24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4</sup> 얼핏 보면 북한산 가격은 100달러 미만이므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가격이 국제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지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물의 품질이나 세부적인 품목군이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정치적 요인, 마케팅 능력 결여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북한의 광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 4. 북한의 광물 생산능력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 광업부문의 현존 생산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각급 기업소의 운영난으로 현존능력만큼도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 생산량은 현존 능력 대비 30~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존 생산능력과 실질 생산량의 현저한 차이는 다른 산업부문에도 발견되는 공통하는 북한의 구조적 현상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광업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광업 비중은 2002년의 7.8%에서 2006년에는 10.2%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 광공업의 주도산업이었던 중화학 공업은 아직도 12%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sup>23</sup> 통일부 자료.

<sup>24</sup> 한국지질자원연구원·산업자원부,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7), p. 10.



<표 3> 북한의 주요 광산물 생산능력과 실질 생산량

구분	연간 생산능력(A)	연간 생산량(B)	생산 비율(B/A)
아연	10만 톤	-	(50.0%)
마그네사이트	300만 톤	정광 100만 톤	33.3%
인회석	150만 톤	50만 톤	33.3%
석 탄	5,350만 톤	2,468만 톤	46.1%
철광석	1,000만 톤	504만 톤	50.4%
금	-	2 톤	-
중석	2,700톤	금속 기준 600톤	22.2%
흑연	-	25,000 톤	-
평균 수준			39.3%

자료: 통일부 및 국내 연구추정자료와 UN, JETRO 조사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재작성

북한 광업부문의 생산액 규모는 2002년에는 13.3억 달러이던 것이 2006년에는 26.1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북한의 광업부문 생산량이 현존 생산능력의 30~5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표연도인 10년 후까지<sup>26</sup> 100%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한다면, 목표연도의 광업부문 생산액은 2006년 가격기준으로 52.2억~87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때 광업 비중이 200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당시 GNI는 511.8억~852.9억 달러로, 1인당 GNI는 2,216~3,656달러로 산출된다. 이는 북한의 소득수준이 2006년(256억 달러)보다 2.0~3.3배 증가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광업부문의 현존 능력만 정상화하여도 '비핵·개방·3000'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표 4> 북한 전체경제에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광업 (생산액)	7.8% (13.3억 달러)	8.3% (15.3억 달러)	8.7% (18.1억 달러)	9.9% (24.0억 달러)	10.2% (26.1억 달러)
제조업 (중화학공업)	18.0% (11.0%)	18.5% (11.5%)	18.5% (11.8%)	19.0% (12.4%)	19.5% (12.8%)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p. 52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sup>25</sup> 한국은행의 각 연도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참조.

<sup>26</sup>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과 맞물리기 위함이며 분석목적에 따라 3년, 5년, 20년 등으로 달리 설정될 수도 있다.

## 5. 북한의 생산량과 남한의 생산증대 목표

북한의 생산량은 거의 전 산업부문이 현존 능력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의 광업부문 역시 광종이나 광산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이 대체로 현존 능력의 30~50%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러므로 광업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자원 공동개발이 착수될 경우에는 북한 광업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기본 목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북한의 각급 광산의 현존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의 광물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그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남한의 투자비용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구상으로 끝나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남한의 대북한 자원 개발 목표가 ‘북측 광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있음을 대전제로 한다.

또한 개발 협력기간에 따라 대북 투자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부담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방향인 ‘비핵·개방·3000’에 입각하여 자원공동개발을 위한 대북투자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0개 유망 광종에 대해 북한은 2006년 총 3,13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24.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같은년도 북한 GNI(256억 달러)<sup>27</sup>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같은 해 북한에서 생산한 광업 총생산 비중은 전체에서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sup>28</sup>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검토한 10개의 유망 광종의 생산액이 북한의 광물총생산액 가운데 92.1%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광물 생산은 석탄을 비롯한 10개의 주요 광종에 편중되어 있다. 분석자에 따라 유망 광종을 다소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북한생산액 규모 평가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향후 10년 동안에 북한의 현존 능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목표 연도에 가면 상기 10개 광종의 생산량은 도합 6,817만 톤에 이를 것이며 이 때 생산액은 2006년 불변가격으로 54.2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2006년에 비해 광물 생산량이나 생산액이 공히 2.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sup>27</sup> 한국은행;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p. 48.

<sup>28</sup>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p. 52.

<표 5> 현 북한의 생산량과 남한의 생산량 증대 목표

(단위: 톤, 천 달러, 2006년 기준)

구 분	현 북한의 생산		경협시 생산 증대 목표		합 계	
	생산량	생산액 <sup>1)</sup>	생산량	생산액 <sup>1)</sup>	생산량	생산액 <sup>1)</sup>
아연광	50,000	54,045	50,000	54,045	100,000	108,090
마그네사이트	1,000,000	218,273	2,000,000	436,546	3,000,000	654,819
인광석	500,000	36,182	1,000,000	72,364	1,500,000	108,546
석탄(무연탄)	24,680,000	1,774,716	28,820,000	2,072,420	53,500,000	3,847,136
철 광	5,040,000	248,335	4,960,000	244,393	10,000,000	492,727
금 <sup>2)</sup>	2	34,526	4	69,052	6	103,578
동 <sup>2)</sup>	7,000	14,385	7,000	14,385	14,000	28,770
몰리브덴	650	17,991	550	15,223	1,200	33,214
중 석	600	4,603	2,100	16,111	2,700	20,714
흑 연	25,000	12,919	25,000	12,919	50,000	25,838
합 계	31,303,252	2,415,975	36,864,654	3,007,458	68,167,906	5,423,432

자료: 통일부 및 국내 연구추정자료와 UN, JETRO 조사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재작성

주1): 생산액은 남한의 광종별 수입가격을 DOT방식에 의거 북한의 수출가격을 산출한 다음 계산한 것임.

주2): 금과 동은 북한의 수출액을 감안한 자체 추정치임.

이와 같은 광물 생산 증가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남한이 북한 광산 개발에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판단이 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관련하여 남한이 북한 광업 부문 개발에 개입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광업 생산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생산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될 경우 남한이 기간 중 증대시켜야 할 광업부문 생산량은 총 3,68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생산액 측면에서 보면, 남한이 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목표액은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 30억 달러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의 생산 증대가 실현될 때 비로소 북한 광업 생산이 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표는 일시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10년 이후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는 경우 북한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남한의 목표는 연평균 3억 달러 수준으로 과도한 것이 아니며 실현 가능한 합리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IV. 남북 자원공동개발의 효과성

### 1. 남한이 얻는 경제효과

#### 가. 수입대체효과

남한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반입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더라도 남북간 교역이 내국간 거래로 실시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나 물류 이동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남한 수입업자들은 도입선을 북한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남한은 수입대체효과(무역전환효과)를 얻게 된다.

남한은 철 및 비철금속 광물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 국제 자원시장 불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매우 취약한 수급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 수급여건도 그 불안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이 계속 증가하여 남한의 지하자원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액은 원광기준으로 물량증가가 크지 않음에도 2002~2006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무엇보다도 광물자원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6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광물 수입액이 석탄을 포함하여 총 157.9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10개 광종의 수입액은 138.3억 달러로 전체 광물 수입액의 87.5%를 넘어서고 있다.

<표 6>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 규모	69.4	86.0	121.7	122.8	157.9
전년비 증가율	0.5	23.8	41.5	1.0	28.6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2007), p. 252.

또한 남북 자원공동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반입가능규모는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9</sup> 이것은 남한의 투자에 힘입어 늘어나게 되는 생산증가분 전체 규모의 50% 수준이 남한 반입 가능규모라고 간주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간주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두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존재한다.

<sup>29</sup> <표 5> 참조.

첫째로는 북한은 현재 능력 미비로 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의 일정부분을 자체 소비수요 충당에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어려운 경제현실에 연유하고, 둘째로는 남북협력이 대부분 합영·합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남북간의 지분이 대체로 50:50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이 생산 증가량을 모두 확보하기 보다는 전체의 5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 연도에 가서 남북간 자원공동개발로 연계 되는 남한의 수입대체효과 규모는 시초년도 대비 총 1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수입대체효과는 연평균으로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이며 남한 수입수요의 1.4%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하겠다.

<표 7> 남한의 수입대체효과

(단위: 억 달러, %, 2006년 불변가격)

구 분	남한 수입수요 <sup>1)</sup> (A)	반입가능규모 <sup>2)</sup>	수입대체효과	
			개발기간 평균	목표연도 이후
합 계	138.3	15.0 <sup>3)</sup>	1.5	15.0 <sup>3)</sup>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7), pp. 9-10.

주: 1) 2006년도 남한의 수입금액임.

2) 남북 경협시 남한의 북한지역 광물 생산증대목표(금액)의 50%를 반입규모로 가정

3) 반올림에 의해 수치가 불일치함.

## 나. 원가절감효과

남한의 광산물 평균 수입가격과 북한의 광산물 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북한 가격의 저렴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는 무엇보다도 광종마다 품위가 다르고 HS 코드상 광산물 품목군의 가공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유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 정치적·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가격 차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북한의 수출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단순화하여 가정하기로 한다. 일단 경제외적,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우리는 북한 수출가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관적 또는 자의적 판단을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한의 평균적인 광물 수입단가를 도출한 다음, 이를 다시 북

한의 수출단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즉, 남한의 C.I.F 가격을 할인(10%)하여 F.O.B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환산할 때는 DOT 방식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북한산 광물이 국제산 광물과 품질 면에서 유사하여 국제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므로 북한산 광물의 품질이 국제 수준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산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특히 자원공동개발의 이점을 고려하고 북한의 경제외적 가격 저하 요인을 감안한다면 광물자원의 가격 수준은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다.

<표 8> 남한 수입단가와 북한 수출단가의 차이

(단위: 달러/톤, 2006년 기준)

구 분	남한 수입단가(A)	북한 수출단가(B)	단가 차이(A-B)
아연광	1,189	1,081	108
마그네사이트	240	218	22
인광석	80	72	8
석탄(무연탄)	79	72	7
철광	54	49	5
금	18,989,025	17,262,750	1,726,275
동	2,260	2,055	205
몰리브덴	30,447	27,679	2,767
중석	8,439	7,672	767
흑연(인상)	568	517	51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2007), pp. 9-10에서 산출.  
 주: 단가는 광종별 평균 단가이며 실제 시세는 아님. 북한의 수출단가는 DOT 방식으로 계산하였음.

DOT 방식으로 산출된 북한의 수출단가는 실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다른 수출상대국의 수출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교역의 경우에는 내국간 거래로 인해 수입관세, 수송비 등이 사실상 면제되므로 이들을 제외한 가격이 실질적인 남한의 수입(반입)단가가 되며 따라서 남한 기업은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북한산 광물을 공급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표 8>를 보면, 광산물의 남한 수입단가와 북한 수출단가의 차이는 금, 동, 몰리브덴, 중석, 아연 등 상대적으로 값비싼 금속광물에서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광물로부터 비례적으로 원가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광물에 대한 북한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그네사이트, 인광석, 석탄, 철광 등 북한지역에 풍부한 금속광물이나 비금속광물의 가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들 광물의 연간 생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남한이 얻게 되는 원가절감의 규모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자원 공동개발로 얻는 남한의 원가절감효과는 북한의 생산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9>는 북한지역의 광물자원에 대한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이 얻게 되는 원가절감효과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10개 광종의 총 반입가능량은 1,843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반입가능량에 해당하는 광물의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을 경우, 남한은 총 16.5억 달러의 수입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남북간 자원 공동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5억 달러에 불과하여 적어도 1.5억 달러(연평균 15백만 달러)의 원가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9> 남북경협으로 남한이 얻게 되는 원가절감효과

(단위: 톤, 백만 달러, 2006년 기준)

구 분	반입가능량	남한수입기준(A)	북한반입 기준(B)	원가절감규모(A-B)
합 계	18,432,327	1,652.3	1,503.9	148.4
아연광	25,000	29.7	27.0	2.7
마그네사이트	1,000,000	240.0	218.0	22.0
인광석	500,000	40.0	36.0	4.0
석탄(무연탄)	14,410,000	1,138.4	1,037.5	100.9
철광	2,480,000	133.9	121.5	12.4
금	2	38.0	34.5	3.5
동	3,500	7.9	7.2	0.7
몰리브덴	275	8.4	7.6	0.8
중석	1,050	8.9	8.1	0.8
흑연(인상)	12,500	7.1	6.5	0.6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2007), pp. 9-10과 <표 5> 및 <표 8>를 종합하여 작성

남한의 원가절감효과를 광종별로 보면, 석탄의 경우가 1억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이 마그네사이트(0.2억 달러), 그리고 철광(0.1억 달러)로 3위를 차지한다. 이

들은 북한지역에 매장량이 풍부하면서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광물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남한 수입가격과의 단위당 가격차가 다른 광종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간 자원공동개발은 이상과 같은 산출결과보다 훨씬 큰 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제약이나 계산의 편의상 여타의 경제내외적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이상과 같이 산출된 원가절감효과는 최소치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원가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다. 기업의 투자비용 및 수익효과

남북경협을 통해 광업부문에서 북한이 생산 정상화를 실현할 경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총 15억 달러의 광산물(10개 광종) 반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반입은 남한이 이에 상응하는 투자비용을 투입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산 광물 반입 자체가 기업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투자비용과 관련하여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우선 광산 당 평균 500만 달러씩 투자하여 10개의 광종에 총 50개의 주요 광산을 개발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과 합영으로 공동개발 시 통상 500만 달러 내외의 수준을 투입해 온 투자 경험에 기초한다. 남한의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일부 기업도 같은 수준에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sup>31</sup>

또한 북한에 광산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0개의 주요 광산 개발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것은 1개 광종의 평균 5개 광산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당 광종의 핵심적인 광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광종 당 5개 광산을 성과적으로 개발한다면, 북한의 생산 정상화의 목표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비핵·개방·3000' 구상의 100대 기업 육성과도 맞물리며 연쇄효과에 의해 북한 나머지 광산들도 생산 정상화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가정 하에서 50개 광산에 대한 남한의 투자비용은 총 2.5억

<sup>30</sup> 앞의 <표 8> 참조.

<sup>31</sup>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의 정춘혁연광산 개발을 위해 총 투자액의 50%인 51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정춘혁연광산 투자는 이렇게 하였다』 (2007), p. 8.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에 비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은 15억 달러로서 투자비용의 6배에 달한다. 따라서 광업분야의 남북간 공동 개발은 남한 기업에 있어서 채산성이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동태적으로 보면, 공동개발 초기부터 기업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위험요인, 제도적 장치 미비, 수송, 인프라 문제 등 애로요인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수익이 투자비용을 밑돌아 기업적 수익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중기를 지나면서 남북협력이 성숙되는 경우 기업의 대북 투자 이익은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 기간 중에도 광산 개발의 진척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체로 남한기업의 채산성은 투자 착수 3~4년 이후가 되면 흑자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0~13억 달러 이상의 투자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0년 뒤 공동 개발이 일단락 짓는 목표 연도 이후부터는 남한 기업은 새로운 투자비용 없이도 매년 15억 달러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남북 자원공동개발은 국내기업의 투자수요 증가 →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 → 경제성장 촉진 등의 경로를 거침으로써 남한경제에 직접·간접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낮은 생산력을 향상시켜주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남북간 자원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성격이 뚜렷한 협력분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2. 북한이 얻는 경제효과

### 가. 소득창출효과

앞의 <표 5>에서 산출된 바와 같이 10개 광종에 대한 공동개발로 얻게 되는 생산 증가분 합계는 30.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 증가분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 협력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북한의 지분만큼 그대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증가분의 북한지분은 곧 북한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소득효과가 된다. 북한은 그동안의 관례상 남북간간에 통상 5:5의 지분 비율로 공동개발에 임할 것이며,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해 얻어진 생산 증가분의 50%가 북한의 소득으로 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남한의 몫으

<sup>32</sup> 북한경제에서 소득의 의미는 주민에 대한 분배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는 생산경제이므로 생산증가분을 편의상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얻게 되는 소득창출효과  
의 규모는 총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간 자원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의 소득창출효과는 북한이 얻게 되는 직접적  
인 경제효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있어서도 석탄을 포함한 광  
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생산(소득)유발효과가 큰 산  
업이다. 생산(소득)유발효과는 남북한간 자원공동개발로 얻어지는 간접효과이지  
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소득창출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생산유발효과까지 감  
안한다면, 북한에서 기대되는 소득창출효과는 계산된 값 15억 달러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 나.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성증대효과

남북한 간 자원공동개발에 따라 얻어지는 소득의 창출은 곧 고용창출로 이어진  
다. 북한은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경제(labour economy)이므로 특히 로 북한이  
얻게 되는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공동개발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그대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해  
방 이래로 축적(accumulation)<sup>33</sup>을 높이는 대신 소비를 제약하는 축적 위주의 정  
책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축적률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대체로 7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4</sup> 그러므로 시  
장경제에서 30% 정도가 투자이고 약 70%가 소비 몫이라는 분배구조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소비로 돌려지는 노동배분 몫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  
은 북한의 고용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배 몫이다. 나머지 70%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정치사상적 상징물 건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기계·장비의 구입비 등  
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 광산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000북  
한원(200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 수준은 타 업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탄·광산의 노동이 유해노동일 뿐만 아니  
라 중노동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달러 표시로 200달러<sup>35</sup>에 이른다고 하여 국제적

<sup>33</sup> 북한에서의 축적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sup>34</sup> 홍성국, 『자력갱생의 기로: 북한경제 이론과 실제』 (피씨라인, 2005), pp. 112-114 참조.

<sup>35</sup> 1달러 : 150 북한원 기준.

으로 그만한 구매력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환산된 달러 표시 북한 임금은 단순히 북한당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환율에 입각하여 북한 원화를 환산된 것일 뿐이다. 북한 내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암시세 환율이 대단히 높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60달러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화폐가치의 괴리를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표 10>은 남북한이 10개 광종의 공동 개발을 10년 동안 추진하였을 경우 최종년도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한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공동 개발 종료시 기준년도인 2006년 대비 총 22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으며 연평균으로 22만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셈이 된다.

북한경제는 잠재실업의 형태로 수많은 유향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장·기업소, 탄·광산, 협동농장 등 각급의 경제단위는 모두 적정 노동력을 훨씬 초과한 과잉노동을 배치하여 노동력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에 따른 북한의 고용 창출은 곧 과잉노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표 10> 10개 광종 공동 개발에 따른 북한의 고용창출효과

(2006년 가격기준)

소득 증가분 (억 달러)	노동배분 몫 <sup>1)</sup> (억 달러)	평균 임금 <sup>2)</sup> (달러)	고용창출효과(천 명)	
			총 규모	연 평균
15.0	4.50	200	2,250	225.0

자료: <표 5>의 경험시 생산증대 목표를 토대로 산출

주: 1) 전체 소득의 30% 기준

2) 대미 환율 1달러 : 150북한원 적용

이로 볼 때 남북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많은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지만 이와 함께 생산성증대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성의 변화를 구체적인 지표로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광업 부문의 생산성과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는 더 더욱 어렵다. 다만 남북경협 후 10개 광종 생산액의 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유추해 볼 뿐이다.

북한의 10개 광종의 현재 생산액이 24억 달러인데, 10년 후에는 남북간 공동개발로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년도의 2.2배인 53.9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sup>36</sup> 이 때 북한의 투하노동력 규모는 현재 과잉노동의 상태에 있으므로 목

표연도에 가서 광산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과잉노동이 해소되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가 기준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 볼 때 남북간 자원공동개발의 경우 광업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적어도 2배 이상 제고될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다. 수출증대효과와 내수보장효과

<표 11>을 보면, 북한의 총 수출액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2년 남한을 포함하여 9.8억 달러이던 것이 2006년에는 14.7억 달러로 5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광물자원 수출은 총 수출액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의 광물 수출액은 2002년 0.8억 달러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4.4억 달러로 동년 대비 5.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액 가운데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에 8.2%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의 광물자원 가격 상승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표 11> 최근 5년간 북한의 광물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수출액	9.8	10.7	12.8	13.4	14.7
광물 수출액	0.8	1.2	2.2	3.2	4.4
수출 비중	8.2	11.2	17.2	23.9	29.9

자료: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2007), pp. 44, 83과 World Trade Search, *D.P.R.Korea Export & Import*, pp. 88-90을 종합하여 재작성

주: 총 수출액 및 광물 수출액은 남한의 반입규모를 포함.

그러나 북한의 광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도 내수를 잠식하면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재 자원 및 원자재가 절대 부족한 북한의 상황에서 각급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광물자원 내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북한 광물 수출 증가도 각종 원자재 및 장비 수입을 위해 출혈 수출하고 있는지 모른다. 광물에 대한 북한의 내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북한의 광물 생산액과 그 수출을 생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매

<sup>36</sup> <표 5> 참조.

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생산액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수출규모는 생산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은 전체 광물 생산액(26.1억 달러)의 16.9%인 4.4억 달러만을 해외에 수출하였을 뿐이다.<sup>37</sup> 북한은 생산광물의 80% 이상을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하는 것인데, 하나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경제운동을 자력갱생에 바탕을 두고 수출은 수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광물 생산이 내수 충족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출여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자원공동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은 수출증대효과보다는 내수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령 북한의 경제정책노선이 자력갱생에서 벗어나 수출지향적으로 변화하더라도 기존의 뿌리 깊은 관성 때문에 획기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박사는 자원공동개발의 경우, 생산 증대에 따른 북한 몫이 대부분 수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sup>38</sup> 이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한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북한의 내수용과 수출가능규모

(단위: 억 달러, 2006년 기준가격)

북한생산 합계	현재 생산	북한지분 생산증가 <sup>1)</sup>	내수용	수출가능규모
39.2	24.1	15.1	32.7	6.5

자료: <표 5>를 기초로 다시 산출.

주 1): 생산 증가액의 50% 기준.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남한과의 자원공동개발을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수출증대효과와 내수보장효과를 종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에 힘입어 북한의 광물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10개 광종에 대한 북한의 수출규모는 수출 : 생산의 비중이 불변이라면 39.2억 달러의 생산에 대해 32.7억 달러의 내수보장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수출규모 증대효과는 6.5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남북간 자원협력으로 북한의

<sup>37</sup>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2007), pp. 44, 83; World Trade Search, *D.P.R.Korea Export & Import*, pp. 88-90.

<sup>38</sup> 정우진, “신경협사업모델- 북한 지하자원개발사업의 의미,” 『신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발전과제』(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2007), p. 27.

광물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내부 수요에 충당할 것이며 수출 증가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 V. 결론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다준다. 남한의 경우는 수입대체효과, 원가절감효과, 투자수익효과 등을,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내수보장효과 등이 지대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때문에 남북간 자원공동개발은 남북경협에 있어서 어느 산업부문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유력한 사업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자원공동개발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가운데 ‘3000’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추진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남북 자원공동개발은 현 정부의 ‘3000’ 구상 실현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3000’ 구상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해 온다면 향후 10년 동안에 1인당 GNI 수준을 2006년 대비 2.7배로 올려놓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대북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는 1,108달러로 추정되고 있다.<sup>39</sup> 이것은 2006년의 1인당 GNI를 이후부터 매년 10.5%씩 증가시켜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물가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3000’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 증가율은 6~7%의 지속적으로 보장하여 주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성장목표는 199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한 이래 연평균 3% 미만에서 맴돌고 있는 북한의 저성장을 최소한 배가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측정·분석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북한광업생산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경우 2006년 24.1억 달러의 생산에서 10년 뒤 54.2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광업생산을 2.2배 증대시키는 것이며 연평균 8.4% 생산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경상가격 기준인 1인당 GNI 증대목표와는 달리 200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치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연평균 6~7%(경상가격 기준 10.5%)

<sup>39</sup>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p. 48.

인 반면 광업 생산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간 자원공동개발은 북한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3000’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의 선도 부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한 자원공동개발은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비핵·개방·3000’ 가운데 ‘개방’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의 변화 즉, 체제 개혁과 개방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것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개방이 확대되려면 이에 상응한 내부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 정부가 말하는 ‘개방’은 개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효율적인 대북한 변화정책은 남북협력이 상호성 또는 쌍방향성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이 대북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일방의 대북 정책 추진이었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 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데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방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정상적인 남북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간의 자원공동개발은 국가안전보장에 위해요소가 없으면서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경제에도 이익을 주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것은 북한경제와 시장경제인 남한경제가 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을 통해 상호 체제가 상호 수렴되면서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남북한 간에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남북경협의 발전은 물론 북한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남북한 모두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정상적인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0월 8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 참고문헌

-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수는 북한경제』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신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2007.
- 남성욱.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전망.” 『Strategy 21』. 제20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겨울.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05.
- \_\_\_\_\_. 『광물요람 2002~2006』. 2006.
- \_\_\_\_\_. 『북한 정춘혁연광산 투자는 이렇게 하였다』. 2007.
- 양문수.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통일연구원, 2007.
- 정우진. “남북 광물자원개발 협력방안과 과제.” 『수는 북한경제』.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07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7.
- 통일부. 『북한개요』. 2003.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 자료집』. 1995.
-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2008.
- 한국무역협회. 『2007 남북교역 조사보고서』. 2008.
- 한국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상)』. 2005.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산업자원부. 『2006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7.
-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평가”, 한국수출입은행, 『수는 북한경제』. 여름호, 2008.
- \_\_\_\_\_. “북핵문제가 북한의 체제내구력에 미치는 영향.” 日本 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국문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한·중·일국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07.9.21.
- \_\_\_\_\_. 『자력갱생의 기로; 북한경제 이론과 실제』. 피씨라인, 2005.
- 『경제사전』 제2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5.
- 『조선대백과사전 2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 년판.
- World Trade Search, *D.P.R.Korea Export & Import*, Kyoto, Japan: WTS Co. Ltd., 2007.
- 『조선일보』.
- 『조선중앙통신』.
- 『중앙SUNDAY』.
- 『중앙일보』.
- KOTRA의 연도별 북한 무역 추정 자료.
- 통일부, 내부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Joint Exploitation of Resources as a Solution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Song-Kuk Hong*

South Korean current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is based on three target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With the mis-understanding on the policy, some people are concerned about doing nothing for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 so far as the south’s overemphasizing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North. Nevertheless, this paper asserts that it is actually not right. The current policy seeks the targets to b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This paper bring up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as a solution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South’s current policy. The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oduces some economic effects. South Korea may gain import-substitution effect, cost-cutting effect, investment-returns effect and so on. The North can enjoy income-creation effect, employment-promoting effect, domestic supply-increasing effect, and export-enlarging effect.

After all, the South and North could together relieve the structural shortage of supply problem and promote economic growth under the influence of the joint exploitation of resources. Accordingly, South Korean government, pursuing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should push ahead with the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as an effective approach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s.

**Key Word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Effec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박 병 광\*

- I. 들어가는 말
- II. 북미관계 진전의 내용과 흐름
- III. 북미관계 진전의 배경과 요인
- IV. 북미관계 진전을 보는 중국의 시각
- 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글은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의 내용 및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대해 중국은 북미 양측에 의한 ‘중국 따돌리기’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 진전과 북중관계 진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을 중심

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주제어:** 북한 핵문제, 북미관계, 2·13합의, 북중관계, 6자회담

## I. 들어가는 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북미관계 진전의 시발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2·13합의’를 기점으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5년간 지속되어온 완강한 대북 강경정책의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2007년 10월 미국 해군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북한 선박 ‘대홍단’호를 구출하였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애하는 위원장께”로 시작하는 친서를 보낸 바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07년 북미관계에 대해 “현상타개에 그치지 않고 ‘밀월’이라 불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방향이 전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되어갔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1</sup>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momentum)은 2008년 초에도 이어져 2월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평양공연이 실현되었다. 세계 언론은 뉴욕 필의 평양공연을 미·중 관계정상화 당시의 ‘핑퐁외교’에 견주어 ‘오케스트라외교’로 비유한 바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event)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리들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거나 또는 제3국에서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구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국 정부사이 소통기제의 정착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북미 양국은 2008년 6월 마침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sup>3</sup> 왜냐하면 그 동안 북미관계의 진전은 마치 ‘물러코스터’와 같은 부침(浮沈)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13합의 이후에도 북미관계는 BDA문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다양한 쟁점들로 인해 팽팽하게 맞서 왔으며 양국관계 개선의 가능성 역시 수차례 암운을 드리운 바 있다. 가까운 예로 핵 프로그램 신고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불이행을 이유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핵시설 불능화조치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임을 주장한바 있다.<sup>4</sup> 다행히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오바마(Barack H. Obama)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과 대응이다. 북미관계 진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동안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테러구 지원 해제에 반대하는 등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북미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sup>1</sup> 『조선신보』, 2007년 12월 13일.

<sup>2</sup> Reuters, February 22, 2008; New York Times, February 26, 200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6, 2008.

<sup>3</sup>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미, 일의 관계정상화 관련 조건 및 시나리오는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69-101 참조.

<sup>4</sup> 관련 성명의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선신보』, 2008년 8월 27일.

지만 내부적으로는 잔뜩 긴장한 채 북미관계 개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對북한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를 바라보는 내심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물론 향후 북미관계 진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의지 및 정책이다. 그러나 양국관계 진전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인식과 대응 역시 북미관계 개선의 주변 환경이라는 변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특히 그 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이 2·13합의와 그에 따른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중국의 행위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이익 또는 북미 양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다만 이 글에서는 북미관계의 진전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과도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시사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의 내용 및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II. 북미관계 진전의 내용과 흐름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오랫동안 깊어가는 불신감 속에서 팽팽한 적대적 대립상태를 유지해 왔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등장 초기부터 클린턴 시기에 이루어진 ‘제네바 합의’를 부정했으며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03년 1월 발표한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무법정권(outlaw regime)’으로 지칭했으며 2004년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거론하는 등 대북 압박위주의 ‘강압외교’를 추진해왔다.<sup>6</sup>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강압외교

<sup>5</sup> ‘전략적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그것의 적용에 관해서는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2008), pp. 63-85; 최운도, “미·중·일 삼각관계와 그 역학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2003), pp. 175-195;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pp. 485-515를 참조.

에 결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비난과 압박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저항해 왔다. 북한은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응해 부시를 “불망나니”, “도덕적 미숙아”라고 맞받아 치면서 “애당초 상대할 대상이 못 된다”고 규정하였다.<sup>7</sup> 또한 북미관계의 악화 속에서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선언’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켰으며 2006년 10월에는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즉 북한은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자극적 성명과 이를 과시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벼랑끝 전술’을 채택해 왔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대립과 불신을 지속했으며 현실적으로 양국관계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불신하던 북미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핵 실험 이후 오히려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이 줄곧 요구하던 양자대화를 받아들여 2007년 1월 6자회담장 바깥인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의 양자접촉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만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깨고 사전에 북미간 합의를 토대로 6자회담 내에서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진전의 돌파구를 열었다. 베를린 접촉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BDA 해결카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비핵화 1단계 구상에 합의했다. 북미 양자접촉을 통한 거래(deal)는 결국 ‘9·19공동성명’ 이행의 초기조치를 담은 ‘2·13합의’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 ‘2·13합의’ 직후 북미관계 진전은 예상처럼 순조롭지 못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이 돈세탁 은행으로 낙인찍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측 자금을 송금받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 모두 예기치 못한 것으로서 특히 북한의 경우 내심 중국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BDA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상호신뢰와 인내의 토대를 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

<sup>6</sup> 미국의 대북 강압외교에 관해서는 신성호, “북핵과 강압외교,”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43-67; Victor D. Cha,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2002), pp. 40-78 참조.

<sup>7</sup> “불망나니무리와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로동신문』, 2005년 5월 10일.

히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직접 BDA송금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BDA송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상호이해와 신뢰를 회복한 북미 양측은 정식으로 상대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BDA문제 해결 직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차관보가 2007년 6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한다는 징표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행동에 화답하여 힐 차관보의 방문 한 달 뒤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 착수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단을 맞아들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사실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sup>8</sup> 즉 북한은 북핵 폐쇄조치의 시작을 미국에게 가장 먼저 통보할 정도로 정부차원에서의 양자관계 진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직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측 대표는 전례 없이 양국 대사관을 오가며 직접 대화를 진행했다.

한편 '2·13합의' 도출과 BDA문제 해결을 거치면서 진전되기 시작한 북미관계는 마침내 양측의 공식 대표단이 2007년 9월 초 제네바에서 만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미관계정상화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두 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같은 달 말에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남북정상회담이 한창이던 10월 3일 공개된 이른바 '10·3합의문'은 북한이 핵 폐기 2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시한도 연말까지 명기한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side understanding)' 문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sup>

그러나 2008년에 들어서면서 전년도 말까지 예정되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양국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은 4월에 싱가포르에서 대표회담을 통해 핵심

<sup>8</sup>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동아일보』, 2007년 7월 15일.

<sup>9</sup> 『The Washington Post』, October 4, 2007.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에 도달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통해 2·13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5월에는 북한이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고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이 50만 톤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미간 화해분위기는 다시금 정상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sup>10</sup> 그 결과 북미 양측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6월 26일 마침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였다.

<표 1> ‘2·13합의’ 전후 북미관계 전개 과정

시 기	내 용
2007년 01월	크리스토퍼 힐 미국대표와 김계관 북한대표의 베를린 양자접촉
2007년 02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2·13합의’ 도출
2007년 03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뉴욕 방문, 북미회담 진행
2007년 06월	미국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평양방문, 북미회담 진행
2007년 07월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 베이징의 양측 대사관을 오가면 회담
2007년 09월	북·미 대표단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개최
2007년 10월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대표단 ‘10·3합의’ 도출 북한 태권도대표단 미국 시범공연 및 인공기 게양
2007년 11월	북·미 대표단 뉴욕에서 금융관계 정상화 위한 ‘금융실무회의’ 개최
2007년 1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공연 공식 발표 부시 미국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 전달
2008년 0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공연 거행
2008년 04월	북·미 양측대표 싱가포르 ‘잠정합의’로 핵 신고 문제를 돌파
2008년 05월	북한 영변원자로 가동일지 미국 측에 제출 미국 국무부 50만 톤 대북식량지원계획 발표
2008년 06월	북한 핵 프로그램신고서 제출 및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2008년 08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시설 불능화조치 중단 및 원상복구 가능성 표명
2008년 10월	미국 국무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2008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북미 양자접촉을 주장해온 오바마(Obama) 후보 당선

<sup>10</sup>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미 국무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발표 다음 날 신속하게 이를 보도하면서 미국의 식량지원이 “부족한 식량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북·미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중앙통신』, 2008년 5월 18일; 『평양방송』, 2008년 5월 18일; 『중앙방송』, 2008년 5월 18일.

그러나 2008년 10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정식으로 발표되기까지 북미관계는 예상대로 순조롭지 못했으며 다시금 대립과 위기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즉 미국은 북측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내용에 있어서 자국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상당 기간 미루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및 원상복구를 밝히면서 대미압박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 진전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마침내 테러지원국문제는 해결되었다. 한편 2008년 11월 초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오바마(Obama)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향후 북미 양국 간의 관계진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sup>11</sup>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접근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III. 북미관계 진전의 배경과 요인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첫 자리에 놓고 있는 북미관계는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조성된 위기 이후 오히려 6자회담 성과와 함께 오랜 반목을 털어내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13합의' 이후 북미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실험은 위기국면의 절정이자 또한 미국이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급반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미관계 개선은 먼저 미국의 대북인식과 태도변화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측 변화의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누적되어온 대북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작용하였다고 하겠다.<sup>12</sup> 무엇보다

<sup>11</sup> 오바마(Obama) 당선인은 지난 2007년 7월 CNN과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발표되고 있는 각종 정책제안서에서도 북·미 직접대화와 다자협상틀(6자회담)의 병행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sup>12</sup>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Charles L. Prichard,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참조; 반면



다도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패배이후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대북 강경파인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과 볼튼(John Bolton) 駐유엔대사 등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던 강경론자들이 사임함으로써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추구하던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과 국무부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었다.<sup>13</sup> 그 결과 부시 행정부는 과거 북한에 대해 ‘채찍’만을 강조하였으나 중간선거 이후 ‘당근’도 함께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화당정권의 중간선거 패배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인식 및 태도변화를 불러일으킨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지적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그 위력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강제한 것이다.<sup>14</sup>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핵(核)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미국 지도부에게 있어 북핵폐기와 북미관계 개선의 교환은 그들 말대로 윈-윈(win-win)게임, 즉 상생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라크전쟁에서 실추된 위신과 확산되는 안팎의 위기를 감안할 때 미국 지도부에게 있어 북미관계 개선은 득(得)이 되면 되었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계산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보상불가”라는 원칙을 천명하지 않게 되었으며, 테러지원국 지정철회와 적성교역법 적용제외 등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허물어뜨릴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 진전에 나서게 되었다.

둘째,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게 된 데에는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엄밀

빅터 차(Victpr D. Cha) 前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성과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꾸준히 전개해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주장한다. “빅터 차 前백악관 아시아담당보좌관 인터뷰,” 『중앙일보』, 2007년 5월 7일.

<sup>13</sup> David E. Sanger, “Sensing Shift in Bush Policy, Another Hawk Leaves,” *New York Times*, March 21, 2007.

<sup>14</sup> 배성인, “2·13합의에서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정책적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2007), p. 112.

한 의미에서 볼 때 냉전시기를 포함하여 북미 양자관계에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북미관계 개선을 요구해온 쪽은 북한이었다.<sup>15</sup>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관계 회복을 회피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 진전의 움직임은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북미관계를 돌아볼 때 매우 흥미롭고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이러한 호응은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안보와 경제난 해결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미 핵실험을 한 마당에 더 이상의 초강수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북 제재가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북한경제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미국의 태도변화에 부응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3월 뉴욕 북미실무회담 직전 열린 비공식 회동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前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前 대북정책조정관 등 민주당 인사들은 김계관 부상에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차기 행정부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sup>16</sup>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 이후 다시 찾아온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리를 포함한 대미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셋째, 북미관계 개선이 진행되어 나가는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건설적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들 수 있다. 물론 북한과 미국 양국이 서로에게 득이

<sup>15</sup> 북한의 대미관계개선 시도에 관해서는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2004), pp. 29-54;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p. 165-169;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참조.

<sup>16</sup> 『중앙일보』, 2007년 5월 7일.

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추구하게 된 상호 정책변화가 오늘날 북미관계의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미관계진전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미국을 꾸준히 설득했다. 즉 BDA문제를 넘어서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놓고 ‘빅딜’을 해보자는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을 끈질기게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의 전환을 가져온 ‘젤리코 구상’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백악관에 관리를 파견하여 평화체제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7</sup> 송민순 前외교부장관 역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숨은 역할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sup>18</sup>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유명환 외교부장관 역시 “한국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해 공화당 부시 정권 하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sup>19</sup> 향후에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우여곡절 속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 이익이 만나는 전략적 공통점을 찾아내고 제시함으로써 북미관계 진전의 추동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IV. 북미관계 진전을 보는 중국의 시각

### 1. 최근 북중관계의 흐름

북한 핵실험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을 보인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북중관계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중관계가 과거 오랫동안 표면적으로는 ‘형맹관계’ 또는 ‘순치관계’ 등으로 표현되며 특수 관계를 유지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냉전시기부터 이미 협력과 우호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갈등이 내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북중관계는 이데올로기적인 동맹관계의 이면으로 상호 비대칭적인 관계 및 우선순위가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상

<sup>17</sup> 『중앙일보』, 2007년 10월 6일.

<sup>18</sup>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인터뷰,” 『중앙선데이』, 2007년 7월 15일.

<sup>19</sup>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인터뷰,” 『중앙일보』, 2008년 5월 12일.

태에서 전략적 필요에 입각해 형성된 이해관계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sup>20</sup>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정체상태에 머물거나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탈냉전기 들어 기본적으로 양국의 혁명세대가 사망하고 국가건설 노선의 차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중간 ‘인적 유대’와 ‘이념적 연대’의 약화는 양국관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벗어나 양국관계를 ‘당대당관계’가 아닌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실리증심의 ‘정상국가관계’로 변화를 시도해온 것 역시 양국관계가 소원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물론 이보다 앞서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양국관계가 소원해지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중·미 전략적 관계의 진전과 파장 역시 북중관계 변화에 점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담론이 증대되었으며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된 전략적 딜레마를 느끼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식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sup>22</sup>

그러나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는 데에는 역시 북한 핵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핵실험은 조금씩 변화의 관성을 보이던 북중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sup>23</sup>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던 대북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sup>20</sup>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최근의 글로는 이상숙, “테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3호 (2008), pp. 439-456;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pp. 119-147; 박종철, “북중관계의 구조적 특징: 긴장된 동맹”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북중관계전문가 집중토론회 발제문, 2008.9.25) 참조.

<sup>21</sup> 박두복,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7.25); 김홍규,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12.3) 참조.

<sup>22</sup> 중국의 대북 딜레마와 부담론에 관해서는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pp. 175-199; 대북인식의 다원화에 관해서는 Andrew Scobell and Michael R. Chambers, “The Fallout of a Nuclear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104, No. 683 (September 2005), pp. 292-293 참조.

<sup>23</sup>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pp. 29-54;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8期, pp. 36-38.

은 북한에 대한 부담론이 증대되어 왔다. 이런 외중에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체면(面子)’을 여지없이 구겨버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례 없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돌아보면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정부는 매우 예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쾌감과 배신감을 직접 토로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sup>24</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엔(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도 찬성함으로써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대북태도를 취하였다. 북한 역시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국관계는 한동안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핵실험 이후 6자회담에서 발표된 ‘2·13합의’는 북미관계 진전 뿐 아니라 북중관계의 회복에도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2·13합의’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3월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전격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대사관 방문은 2001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그의 이례적 방문은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그 결과 3월 하순에는 안영기 인민무력부 외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4월에는 중국의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방북하는 등 양국관계는 ‘2·13합의’ 이후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북중 양국은 이미 북한 핵실험을 전후한 과정에서 서로가 더 이상 ‘혈맹’을 내세우던 과거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을 ‘중립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이는 북중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sup>25</sup> 실제로 북한은 ‘2·13합의’를 전후하여 북미관계 개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을 소외시키는 듯한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북한은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 이후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월 힐 차관보의 초청으로 방미한 김계관은 뉴욕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를 너무 이용만 하려 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 미국은 핵문제

<sup>24</sup> 중국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2시간 만에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성명 전문은 중국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75346.htm>> (검색일: 2006.10.9).

<sup>25</sup> 박병광, “북한 핵실험과 북-중관계” (2006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12.7).

해결을 위해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26</sup> 이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치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북한 판문점 대표부는 2007년 7월 13일 “북미·유엔간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0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종전 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음으로써 중국의 의혹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27</sup> 이와 같은 북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중국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소극적 자세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으며 일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sup>28</sup>

한편 흥미로운 것은 2008년 들어서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 및 검증문제를 놓고 북미간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다시금 중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08년 3월 티베트에서 발생한 反중국시위 당시 중국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데 반해 북한은 거의 유일하게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티베트사태의 여파로 베이징(北京) 올림픽 성화 봉송이 국제적 반발과 비난여론에 직면하였음에도 북한에서는 성화 봉송 과정이 전국에 중계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여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구두친서와 따뜻한 인사”를 전달하였다.<sup>29</sup> 또한 2008년 6월 중순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로 거명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는 등 양국간 친선관계 회복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sup>30</sup>

<sup>26</sup> “김계관, 힐에게 핵시설-핵무기 모두 폭발시켜 없앨테니 곧바로 수교하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OD&sch\\_key=key&sch\\_word=장성민&seq=13546](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OD&sch_key=key&sch_word=장성민&seq=13546)> (검색일: 2007.3.21).

<sup>27</sup>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제4항에서 표현된 종전선언 관련 3자의 범위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中, 정전협정 당사국 빼고 무슨 평화논의?,” 『조선일보』, 2007년 10월 8일.

<sup>28</sup> 上海國際問題研究所 및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의 전문가 인터뷰 (2007년 9월 1일; 2007년 10월 7일).

<sup>29</sup> 『조선중앙방송』, 2008년 5월 6일.

<sup>30</sup>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평양방문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미관계 강화에 대응하여 남북한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對중국 유화정책은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문제로 북미관계 진전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다분히 전략적이고 한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적극적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신고지연으로 야기된 북미관계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회담 장소가 베이징이 아닌 제네바 및 싱가포르 등이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핵 신고서 제출과정에서도 북한은 미국에게는 1만 8천 쪽이 넘는 방대하고 상세한 내용의 신고서를 넘긴 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는 단 50쪽의 신고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이다.<sup>31</sup>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중국은 최근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데 과거처럼 적극적이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북중관계를 북미관계의 하위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 대응 속에서 양국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sup>32</sup> 결국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조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과의 핵협상을 진행하거나 북미관계가 급진전 된다면 북중관계 역시 앞으로 ‘굴곡(up and down)’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겠다.

## 2. 북미관계 진전을 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은 그 동안 일관되게 북미관계 진전의 필요성과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그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북한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북·미공동커뮤니케’를 발표하였을 때에도 이를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적극 지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sup>33</sup> 또한 중국은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본격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보이던 2007년 가을에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쌍방이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상호관심사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8년 봄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로 북미관계와 북핵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했을

<sup>31</sup> 魏志江, “朝鮮棄核背景下的中國對北核政策”(한국국방연구원(KIDA)주최 제1회 북한군사포럼 발제문, 2008.11.20), p. 155.

<sup>32</sup>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 (2007), p. 81.

<sup>33</sup> 『人民日報』, 2000年 10月 13日.

<sup>34</sup> 『新華社』, 2007年 9月 5日.

때에도 1972년 미중관계 정상화 당시의 ‘상하이 코뮤니케’를 참고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열기 위해 중재역할을 시도했다.<sup>35</sup>

중국이 이처럼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일관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중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할 때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 양국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긴 시간을 요하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중국은 북한 역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국의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36</sup>

주목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합의’ 이후 최근의 북미관계 진전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과거처럼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기만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북미관계 진전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내심 우려의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2·13합의 이후 북미해빙 분위기를 비롯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3합의의 물꼬를 튼 북미회담은 전격적으로 베이징이 아닌 베를린과 뉴욕에서 양자간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황이었다.<sup>37</sup> 때문에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과연 어느 정도(how far)까지 얼마나 빠르게(how fast) 진전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sup>38</sup>

<sup>35</sup> 『연합뉴스』, 2008년 3월 14일.

<sup>36</sup> 虞少華, “朝核問題轉圜與六方會談前景,” 『國際問題研究』, 2007年 第3期, pp. 51-55; 孫茹, “中美在朝核問題上的合作與分歧,”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10期, pp. 15-16, 21; 崔志鷹, “朝美接近: 發展前景及對東北亞局勢的影響,” 『中國論壇』, 2007年 7月, p. 89.

<sup>37</sup> 이동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북중관계전문가 집중토론회 발제문, 2008.9.25).

<sup>38</sup>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시각은 USIP와 CSIS의 전문가들이 중국내에서 행한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북미관계 진전을 바라보는 중국의 우려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북중관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내심 ‘중국 따돌리기(China passing)’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소외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된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중국은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이명박 신정부 등장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공동대응 약속을 파기하고 인도의 핵무기를 인정해 준 것처럼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surrender)해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sup>39</sup> 더욱이 북미관계 진전과 북중관계의 조정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일방적인 북미관계 개선은 중국의 우려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은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간 빅딜(big deal)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 해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국간 관계개선이라는 대원칙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양국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적대적 관계가 소멸되고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은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sup>40</sup> 중국은 향후 주한미군의 임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역할이 감소한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미관계 진전을 전적으로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다. Bonnie Glaser, Scott Snyder, John S. Park,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7), pp. 9-10.

<sup>39</sup> 石源華, “六方會談面臨的新挑戰與東北亞安全合作,” 『現代國際關係研究』, 2007年 第8期, p. 12.

<sup>40</sup> 중국의 이러한 관심을 보여주는 글로는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2003年 第7期, pp. 7-12; 石源華·汪僞民, “美日, 美韓同盟比較研究,” 『國際觀察』, 2006年 第1期, pp. 61-68 참조.

작용하고 있다.<sup>41</sup>

셋째,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할 경우 한반도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북영향력의 상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중관계의 유지가 첨예한 전략적 이익의 문제라는데 기인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을 이완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사회주의 방어벽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북미관계 진전의 추세와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대중봉쇄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그 동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對한반도정책의 중요한 기조 가운데 하나로 삼아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할 경우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대한반도 전략의 지렛대 상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sup>42</sup>

요컨대 중국은 현재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지지입장과 우려의 입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다만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 입장의 목소리가 새롭게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향후 북미관계 진전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중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네 가지 이유 외에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정책을 통해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중미관계가 현재처럼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한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중국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반대 입장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 V. 맺음말

2007년 '2·13합의' 이후 북미 양측은 BDA문제와 핵 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중대한 고비를 넘기며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왔다. 물론

<sup>41</sup> 실제로 북한은 1992년 초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pp. 62-63 참조.

<sup>42</sup> Gary Samore, "China uneasy about U.S.-North strides," *JoongAng Daily*, August 6, 2007.

현재에도 양측은 핵관련 시료채취 등 검증문제를 놓고 다시금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른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북미 양측 모두 일종의 ‘숨고르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Obama)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북미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양국 사이에 밀고 당기기로 인한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진전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13합의’의 중요한 지향점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비핵화의 핵심적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가 북미관계 진전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미 양측은 ‘2·13합의’ 이후 직면해 온 다양한 난관 속에서도 결국은 북핵 불능화 1단계와 관계개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현 단계의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과거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2·13합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간 직접 접촉과 관계개선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6자회담의 기능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북미관계 진전은 물론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체면을 건드리면서 자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림수에 집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북미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북미관계 진전과 북중관계의 진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하나는 북미관계 진전을 방해함으로써 균형 잡기에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중국은 북미관계 진전을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대북접근에 나서면서 북한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향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을 축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첫째, 양측의 전략적 필요성 둘째, 상대에 대한 전통적 고려 셋째, 실용적 국가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시기상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당분간 중국과 미국 양자 사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진전 및 중국과의 공조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 진전 움직임과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미관계 그리고 대중관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일방적인 북미관계의 진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후퇴를 장기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북미 합의 이행의 비용만 뒤집어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이 의도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늪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기회손실'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침체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미관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미국 오바마(Obama) 정부의 대북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하려 들지만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의 미국은 한국의 지난 10년과 닮은 행보를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간 원활한 소통구조의 유지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변화 등 국제정세의 흐름을 인식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감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또 다른 고립(isolation)과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미관계 개선은 우리의 대중관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일 미국 신정부의 의도대로 북미 양측 간 직접대화가 활발해지면 6자회담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회의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던 중국은 북한, 미국 등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결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와 6자회담 사이에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접수: 10월 8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 참고문헌

-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 2007.
- 김홍규.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12.3.
- 박두복.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7.25.
- 박병광. “북한 핵실험과 북-중관계.” 2006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12.7.
-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 박종철. “북중관계의 구조적 특징: 긴장된 동맹.”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북중관계 전문가 집중토론회 발제문, 2008.9.25.
- 배성인. “2·13합의에서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정책적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2007.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 .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2008.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 신성호. “북핵과 강압외교.”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 이동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북중관계 전문가 집중토론회 발제문, 2008.9.25.
- 이상숙.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3호, 2008.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 최운도. “미·중·일 삼각관계와 그 역학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2003.
-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2004.
- 孫 茹. “中美在朝核問題上的合作與分歧.”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10期, 2007.
- 石源華. “六方會談面臨的新挑戰與東北亞安全合作.” 『現代國際關係研究』. 2007年 第8期, 2007.
- 石源華·汪僞民. “美日, 美韓同盟比較研究.” 『國際觀察』. 2006年 第1期, 2006.

虞少華. “朝核問題轉圜與六方會談前景.” 『國際問題研究』. 2007年 第3期, 2007.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8期, 2006.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向.” 『現代國際關係』. 2003年 第7期, 2003.  
 崔志鷹. “朝美接近: 發展前景及對東北亞局勢的影響.” 『中國論壇』. 2007年 7月, 2007.

Cha, Victor D.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2002.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Glaser, Bonnie. Scott Snyder, John S. Park.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7.  
 Prichard, Charles L.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Samore, Gary. “China uneasy about U.S.-North strides.” *JoongAng Daily*. August 6, 2007.  
 Sanger, David E. “Sensing Shift in Bush Policy, Another Hawk Leaves.” *New York Times*. March 21, 2007.  
 Scobell, Andrew and Michael R. Chambers. “The Fallout of a Nuclear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104, No. 683, September 2005.

『동아일보』.  
 『로동신문』.  
 『연합뉴스』.  
 『중앙통신』.  
 『중앙방송』.  
 『중앙선데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선신보』.  
 『평양방송』.  
 『人民日報』.  
 『新華社』.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oongAng Daily.*

*Reuter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 Abstract

# China's Standpoint on the North Korea-America Relationship Improvement After February 13 Agreement

*Byung-Kwang Park*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China's standpoint on the North Korea-America relationship improvement after February 13 Agreement. Now that the North Korea and America have developed a direct line of communication, China is no longer at the center of the action for nuclear disarmament. Although China will continue to host the six-party talks, China is feeling sidelined. Furthermore recently we can find the steps towards normal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As a result, China afraid of 'China passing' among North Korea and America and 'weakening influence' to Korean peninsula during the improvement between two countries.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Issues, North Korea-America Relationship, Six Party Talks,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 중소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비교

이 상 숙\*

- I. 서론
- II. 자주외교의 지정학적·역사적 공통성
- III. 자주외교 형성의 배경
- IV. 자주외교의 비교
- V. 결론

## 국문요약

북한과 베트남은 약소국으로서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의 분쟁 시기에 중소 양국으로부터 등거리 외교를 추구한 공통성이 있다. 양국은 중소분쟁 시기에 중소 양국에 어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자주외교를 추구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추구의 공통적 원인을 찾고, 자주외교 형성 및 그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의 공통적 요인으로 지정학적 환경, 강한 민족적 자부심, 피지배 경험, 정치통합의 추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자주외교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비교하였다.

1950년대까지는 북한과 북베트남 모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후 1962년부터 중소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국가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입장에 따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자주외교를 공식화한 반면, 북베트남은 중소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는 중소와의 안보조약 체결 여부, 북한의 친중관계와 북베트남의 친소관계 중시, 효과적 대외지원 확보의 성공 여부에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어:** 자주외교, 북한외교, 북베트남외교, 중소분쟁, 지정학적 환경, 피지배 경험

## I. 서론

북한과 베트남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의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약소국으로서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의 분쟁 시기에 중소 양국으로부터 등거리 외교(equidistance diplomacy)를 추구한 공통성이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있다.<sup>1</sup>

대외정책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등거리외교에서 나타나는 자주적 성격을 ‘자주노선(Self-reliance Doctrine)’, 또는 ‘자주외교(Self-reliant Diplomacy)’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자주외교는 당시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자국의 실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외교전략이다. 약소국은 일반적으로 외세에 안보를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세와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외교목표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자주성이란 자국의 국방과 외교 분야의 정책결정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북한과 북베트남<sup>3</sup>은 중소분쟁 시기 자주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이 자주외교를 선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자주성을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과 북베트남이 동일한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자주외교를 선택했다면, 양국이 가진 공통적 원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발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주외교는 일정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 통일 이전의 북베트남은 유사한 대내외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양국의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20세기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경험이 있고, 민족국가건설과정에서 전쟁을 통해 분단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단 구조가 북베트남과 북한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역사적 경험과 대내외적 환경이 자주외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를 비교분석하여 자주외교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자주외교 추구의 공통 원인을 지정학적·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추구가 국가수립 이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추구 요인을 지정학적 환경, 강한 민족적 자부심, 식

<sup>1</sup> 북한의 등거리외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Chung Chin O,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o-Soviet Dispute, 1958-1975*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8)를, 북베트남의 등거리외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Donald S Zagoria, *Vietnam Triangle-Moscow, Peking, Hanoi* (New York: Western Publishing Company, 1968)를 참조.

<sup>2</sup> 이석호, “약소국 외교정책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p. 459.

<sup>3</sup> 베트남 통일 이전 북부의 호치민(Ho Chi Minh)에 의해 세워진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을 지칭하여 북베트남(North Vietnam)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북베트남이 분단 상태에 있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민지배 경험, 정치적 통합 추구과정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sup>4</sup>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비교의 접근법으로서 비교외교정책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교외교정책은 국가의 외교정책행위(foreign policy behavior)가 특정국가의 특유한 외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유형에 따라 국가행위의 특정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한 국가의 외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공통 요인과 특수 요인을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외적 행위를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를 지양시킨다. 비교론적 분석을 통하여 어떤 외교행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그 특정국가 뿐 아니라 타국의 행위에도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북한과 북베트남이 걸어온 자주외교를 비교해봄으로써 공통성과 차별성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소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에서 나타난 자주외교의 지정학적·역사적 기원을 밝힘으로써, 양국의 자주외교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자주외교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약소국이 중소분열과 분단국이라는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자주외교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II. 자주외교의 지정학적·역사적 공통성

### 1. 지정학적 환경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는 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 대표적 반도이다. 지리학적으로 반도는 대륙과 해양, 해양과 해양세력들 간에 분리 및 결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sup>6</sup>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결합시키는 완충지역이면서,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역이기도 하다.

두 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득(得)’과 ‘실(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

<sup>4</sup> Han S. Park and Kyung A. Park, “Ideology and Security: Self-Reliance in China and North Korea,” Edward E. Azar & Chung-in Moon,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Aldershot: Gower Publisher, 1988), pp. 107-109.

<sup>5</sup> 김기정, “외교정책이론과 외교사 연구,” 김달중 편,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8), pp. 77-78.

<sup>6</sup> 김한식, 『동남아시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pp. 19-20.

다. 두 세력이 만나는 접점지역으로서 대륙문화를 해양으로, 해양문화를 대륙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대륙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주변 국가의 전달함으로써 문화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는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여 해양 세력(일본)에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은 중국의 문물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전파하였다.

주목할 것은 두 지역의 지형이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문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두 지역 모두 중국과 인접한 북부지역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분단 이후 북부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그 정권이 중국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것 역시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남부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 문화와 유사한 반면 북부 지역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인 두 지역은 대륙국가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해양국가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며, 전략상의 요충지로 간주되어왔다. 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고대 시기부터 끊임없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침략과 약탈을 경험해야 했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 두 지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웃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침략에 목표가 되었다.

두 지역에 있어서 중국 대륙은 북방 이민족의 통로였으며,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중국은 통일 왕조를 이루기 이전 북방민족들과 빈번한 무력 충돌에 직면하였다. 중국 대륙의 통일 왕조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 통일 왕조의 세력이 강성하면 상대적으로 두 지역의 안보가 안정적이었고, 통일 왕조의 세력이 약하여 이민족이 대륙을 위협하면 지역 안보도 불안정해지는 구조를 이루었다. 즉, 대륙의 안보 상황과 두 지역의 안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항상 외부강국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어 독립항쟁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2. 강한 민족적 자부심

한국과 베트남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공통성이 있다. 한반도는 단일민족으로서 북부를 제외하고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이민족이 정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다민족국가이지만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경(京, Kinh)민족이 전체 국민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경민족은 북쪽에 중국의 황하와 베트남의 메

콩강(Red River) 주위에 자리잡고 문화적 중심을 차지하여 비옥하고 농토가 풍부한 지역에 밀집되어 거주하여 베트남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소수민족은 산간지역이나 국경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국가의 중심부는 대부분 경민족으로 구성된다.<sup>7</sup> 냉전 시기 분단 이후 양국은 민족국가의 복원이라는 열망이 컸으며 이것은 통일의 염원으로 이어졌다.<sup>8</sup>

이들 양국의 높은 민족적 자부심의 원인은 선진 중국문화의 빠른 수용과 그로 인한 문화적 자부심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페어뱅크(Fairbank)에 따르면 고대 중국적 세계질서를 중화권(中華圈: Sinic Zone), 내륙아시아권, 외부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9</sup> 그 중에서 지리적으로도 가장 근접하고 문화적으로도 동질적인 조공국가들을 포함하는 중화권에는 한국, 베트남, 류큐<sup>10</sup>가 여기에 속했으며, 일본은 몇 차례 일시적으로 이 범주에 속할 때가 있었다. 중화권은 중국과 가장 많은 교류가 있어 중국과 가장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지역이다.

가장 중요한 공통성은 유교적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과거제를 통한 유교 엘리트의 양성이다. 유교 엘리트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의 사회 내에서 유교적 질서를 지탱하는 신분제를 유지하였다. 신분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과거제도였고 이를 통하여 유교 질서는 재생산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중국 조공 무역체제라는 커다란 틀 안에 그들 자신의 또 다른 소규모 조공체제를 만들었다. 남북조 시대의 고구려가 남북 양조로부터 모두 책봉을 받으며, 자국을 천제의 아들인 천손국(天孫國)으로 상정하고 신라를 ‘동이(東夷)’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 또한 베트남 역시 10세기 이후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참파왕조에 대하여 일찍부터 조공관계를 강요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소중화의 세계를 형성한 사례이다.

북베트남과 북한의 민족적 자부심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의식으로 표현되었고, 독립 욕구를 강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sup>7</sup> Brantly Womack,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1.

<sup>8</sup> 호치민은 “우리 민족은 하나요 나라도 하나입니다. 우리 인민은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 재통일을 완수해서 북부와 남부를 다시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표현하였다. 호치민, “베트남노동당 제3차 전국대회 개막연설,” 버나드 폴 편, 『호찌민의 베트남혁명론』 (서울: 거름, 1987), p. 364.

<sup>9</sup> 존 K. 페어뱅크·에드윈 O. 라이샤워·앨버트 M. 크레이그, 김한규·전용만 옮김, 『동양문화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1), pp. 325-328.

<sup>10</sup>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던 옛 왕국으로, 류큐는 현재 오키나와[沖繩]의 옛 지명이다. 1879년에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 450년간의 왕조를 끝내고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민족국가 수립과정에서도 이러한 저항의식은 강대국에 의한 분단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 형성 이후 이러한 저항의식은 대외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 3. 외국 지배 경험

고대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했던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장기간의 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인도차이나 반도와 한반도의 국가들은 가장 저항 의식이 높은 민족들이었다. 618년 이후 당(唐)왕조는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 대체로 자치를 허용하였지만, 상당히 강력한 몇몇 민족에 대하여는 자치에 맡길 수 없어 도호부를 설치하고 이들을 감시하였다. 주요 도호부로서 고구려에 두어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비롯한 여섯 개가 존재하였는데, 안남(An Nam: 安南)에 있었던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이 중의 하나였다.<sup>11</sup>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 대륙의 민족들로부터 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대 이후 제국주의 시대에 양국은 모두 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지가 그 어느 국가보다 높게 되었다. 한반도의 식민지배는 서양의 문물로 무장한 일본이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과 ‘한성조약’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면서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인들에게 뼈아픈 시련의 역사였다. 한국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역사와 문화 수업을 금하게 하였다. 한국의 민족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때문에 한국 독립정신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1919년 3·1운동처럼 공공연한 폭력 행동으로 폭발되기도 했으며 이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났다.<sup>12</sup> 이러한 식민지배 시기 동안 일어난 한국인들의 투쟁은 독립의식을 고취시켰고 민족의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서방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들어왔고 베트남에 대한 식민 지배를 시작하였다. 1860년 9월 프랑스 군대는 베트남군을 격파하고 포위망을 풀었다. 1862년 베트남 응우옌(阮)왕조가 제1차 ‘사이공조약’에 서

<sup>11</sup> 이러한 도호부의 설치에 중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들은 저항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sup>12</sup> 맥마흔 불, 손증기 역,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1), p. 69.

명하면서 베트남 서부의 빈 롱, 안 장, 하띠엔 등의 3성을 점령하였다. 1874년 프랑스와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가 이른바 ‘제2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면서 코친차이나의 6성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해주었다.

이후 1883년 8월 프랑스 관무관 아르망(Francois Jules Harmand)과 응우옌 왕조의 쩌딘퉁(Tran Dinh Tuc, 陳廷肅) 및 응우옌 쩡 헵(Nguyen Trong Hop, 阮仲合) 사이에 체결된 ‘아르망 조약’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인정하고 대외관계는 프랑스를 통해서만 하기로 약속하였다. 1885년 2월 프랑스가 1만여 군대를 베트남에 보내어 공격을 하였고, 그해 6월 9일 리홍장과 프랑스 공사가 ‘중국-프랑스간 베트남조약(中法會訂越南條約)’에 서명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다.<sup>13</sup>

곧 이은 일본의 베트남 진출은 베트남의 오랜 식민지배 기간을 연장시켰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동남아시아와 일본 본토가 격리되었다. 1945년 3월 일본은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행정부를 강제로 제거해 버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각기 군주를 중심으로 한 준독립 정권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베트남에서 민족주의적 열망을 더욱 뽑어내도록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두 지역의 오랜 외국지배 경험은 향후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높였다. 북한과 북베트남은 서양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의 혁명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피지배 경험은 자본주의 세력을 제국주의로 상징하고 완전한 통일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최우선하는 대외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분쟁 시기 중국과 소련의 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입장은 중소 양국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4. 정치적 통합 추구

북한의 경우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를 목표했던 한국전쟁이 분단으로 끝나자 북한 지도부에게는 전후복구를 통한 경제 재건과 당내 통합이 우선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전쟁과정

<sup>13</sup>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pp. 287-297 참조.

에서 연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를 제거했고,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박헌영, 이승엽 등의 남로당세력을 ‘반당 반혁명적 음모책동’을 한 간첩 종파도당으로 숙청하였다.

1955년 4월 당내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내 종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노동자와 같이 고수할 것”을 지적하여 당내 파당적 투쟁을 경고하였다.<sup>14</sup> 1955년 12월 연안파 중 하나인 박일우를 반당 종파행위를 한 혐의로 당에서 축출시켰다. 당의 중요 정책문제들을 외부에 왜곡해 누설했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연계를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연설에서 소련파인 박창옥이 사상사업 부문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심화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하는 대립을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하였다.<sup>15</sup>

이후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가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당시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을 비롯한 연안파가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당내 독주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1957년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당내 통합을 강도높게 진행시켰다.<sup>16</sup>

일련의 당내 문제를 통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주체’라는 자주적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복구에 주력해야 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정치 통합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내 정치세력이 중국이나 소련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북한의 정치 통합추구과정은 자주노선의 모티브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베트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1월 북베트남 주둔 프랑스군의 전면공격개시를 계기로 하여 12월에 양국간 전면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1954년 여름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독립국가 형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독립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분단된 불완전한 승리였다. 곧 시작된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베트남은 중국과 프랑스

<sup>14</sup>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 73.

<sup>15</sup>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서울: 중심, 2000), pp. 207-208.

<sup>16</sup> 위의 책, pp. 214-215.

의 타협을 전제로 하여, 인도차이나에 대한 제네바 협정은 1954년 7월 20일에 조인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1954년 10월 하노이(Hanoi)에서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1950년대 후반 베트남 공산당이 설정한 과제는 사회주의적 개조와 통일이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공산당 내부에 중국과 같은 무력투쟁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이들도 있었고, 소련과 같은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1957년 북베트남이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베트남 공산당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한 그룹은 소련의 지지를 받는 북부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중국의 지지를 받는 남부 혁명투쟁을 중심하는 그룹이었다.<sup>17</sup> 이러한 당내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베트남 공산당은 강력한 정치 통합이 필요하였다.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회담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자 북베트남은 남부까지 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북베트남의 정권 수립은 혁명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북베트남에 사회주의 체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정치 통합의 과업을 달성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북베트남에서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건은 강한 리더십과 정치 통합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과 북베트남은 지정학적 환경, 강한 민족적 자부심, 외국 지배의 역사적 경험, 정치통합 추구의 필요성에서 자주적 특성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양국의 자주적 정체성은 중소분쟁 시기에 대외적 지원의 확보와 통일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주외교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자주외교는 자주적 특성을 가진 아시아 사회주의 약소국이 선택한 외교 전략이다.

### Ⅲ. 자주외교 형성의 배경

#### 1. 중소분쟁과 사회주의권의 분열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ev)에 의한 스탈린(Stalin) 격하는 중소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대회는 자본주의 진영과

<sup>17</sup> Donald Zagoria, *Vietnam Triangle: Moscow, Peking, Hanoi* (New York: Pegau, 1972), p. 103.



의 평화공존 제창과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으로 상징된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평화공존노선, 전쟁가피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다원적 형태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오쩌둥은 ‘제국주의’와의 일대 결전은 불가피하는 입장이었고 개인숭배 비판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 반대를 표명했다. 스탈린 격하는 다른 공산국가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는데 폴란드, 헝가리 사태는 이를 입증했다. 중국에서도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이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부터 마오쩌둥 노선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 그러한 예이다.

소련 제20차 당대회에서 평화공존 노선이 주장되었을 때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1956년 6-7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을 방문한 후 1956년 7월 16일의 “세계 모든 나라 의회들에 보내는 군비축소에 관한 소련 소비에트의 호소”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1957년 2월 중근동의 평화 및 안전문제와 이 지역 제국의 내정불간섭 문제에 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18</sup> 중소분쟁 초기에는 중소간의 대립이 심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소련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당시 북한은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련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57년 7월 소련을 방문하고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7천 5백만 달러의 무상 원조와 4천 2백 5십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다.<sup>19</sup>

북베트남 역시 당시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데탕트를 추구하여 베트남을 미국과의 데탕트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목적 때문에 베트남 통일에 대하여 “남북 베트남의 평화공존이 베트남의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식”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20</sup> 1956년 4월 24일 베트남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차 회기 폐막연설에서 베트남은 결국 소련의 관점을 수용하여 남부의 무장투쟁 과업보다 북부의 경제회복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전쟁광들의 음모를 간파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

<sup>18</sup>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p. 52.

<sup>19</sup> 구분학, “북한의 외교정책,”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5), p. 216.

<sup>20</sup> 黃文歡, 『越中戰鬥友誼的事實不容歪曲』 (北京: 人民出版社, 1979), p. 7.

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sup>21</sup> 이를 베트남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서 “평화적 수단  
에 의한 베트남 통일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인민의  
주요한 적은 우리나라 절반을 점령한 채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와  
그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하며, “평화의 깃발을 굳건하게 높이 치  
켜들고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상황  
에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한 해석을 보였다.<sup>22</sup>

북베트남은 내부적으로 노동당 내부 역량을 집중시켜 전후 경제 복구를 이뤄내  
야 하며, 1955~1956년 북부 토지개혁 중 나타난 좌경의 착오를 극복하여 사회주  
의 개조를 준비해야 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북베트남은 소련에  
대한 경제 및 안보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여 1957년 5월 하노이  
를 방문했을 때 북부 경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약속받았다.<sup>23</sup>

1958년 여름 중국은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  
하였다. 1958년 8월 흐루시초프와 마리노코프스끼(Marinokovskii) 국방상이 북  
경으로 가서 중국에게 공동방위체제를 제안하였다. 중국이 연합 함대를 만들고,  
소련이 도와주는 것으로 하여 8월 3일에 양국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8월  
25일 타이완의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군은 소련과 사전 합의도 없이 먼저 포격을  
했고 미국은 제7함대를 출동시켜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중국을 비  
난 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였다. 결국 1959년 6월 20일 소련이 ‘국방 신기술에  
대한 협정’을 돌연히 파기하고, ‘중국에 원폭의 모형과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1960년 7월 16일 소련정부는 중국에서 소련 기술고문단을 철수  
할 것을 통보하였다.<sup>24</sup>

1960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대회에서 중국 덩샤오핑 총서기가 소련  
의 평화공존을 비난하였다. 1961년 10월 제22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중소간의 갈  
등이 확대되었는데,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유고슬라비아를 비난하고 소련은  
중국에 합류한 알바니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후 1962년부터 중소분쟁은 국경  
분쟁으로 확대되어, 1963년 9월 중국은 우름치(Ouromtchi)와 쿨자(Kouldja)에  
설치된 소련영사관을 폐쇄시키기까지 이르렀다.<sup>25</sup> 이후 중국과 소련은 이념논쟁

<sup>21</sup> 버나드 B. 폴 편, “베트남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차 (확대)회기 폐막연설,” 『호찌민의 베트남 혁명론』 p. 315.

<sup>22</sup> 위의 글, p. 327.

<sup>23</sup> Albert Parry, “Soviet Aid to Vietnam,” *Military Review* (June 1967), pp. 20-21.

<sup>24</sup> 모리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pp. 67-69.

<sup>25</sup> 프랑스와 주와이요, 이창순 옮김, 『중국의 대외정책』 (서울: 탐구당, 1989), pp. 62-66.

과 국경분쟁의 지속으로 갈등이 확대되었다.

중소간의 대립 중에서 주변 국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다른 국가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원 문제였다. 1959년 소련공산당의 제 21차 전당대회 결의문에서 “세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전, 세계의 일부에서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인류사회에서 세계전쟁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흐루시초프의 주장을 중국은 반박하였다. 중국은 제국주의가 약화되긴 하였지만 변하지는 않아 자신의 착취 대상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아직도 가능하고,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식민주의 전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따라서 식민지에 대한 전쟁은 혁명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만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이론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이젠하워와의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평화공존을 선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알제리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드골대통령과 휴전협상을 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화 ‘공세’를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투쟁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와 비슷한 평화 ‘외교’는 혁명투쟁 형태를 일시적이지만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1960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제 18회 공산주의자 및 노동당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는데 중국과 베트남이 협력하여 소련지도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고 소련으로부터 제3세계 혁명투쟁 지원을 이끌어냈다. 회의 마지막에 ‘모스크바성명’을 발표하여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피압박민들의 식민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961년 1월 흐루시초프는 연설 중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보편적 민족해방전쟁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허용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지체 없이 이 전쟁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27</sup> 따라서 1961년까지는 북한과 북베트남은 중소갈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중립적

<sup>26</sup> 리차드 로웬탈, “외교와 혁명, 분쟁의 변증법,” G. F. 허드슨·리차드 로웬탈·로데릭 맥휘퀴, 『중·소분쟁: 자료와 분석』 (고양: 인간과 사회, 2004), p. 25.

<sup>27</sup> Lu De'an, “The Cold War and the Origin of the Vietnam War,” 『東南亞縱橫』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5), pp. 45-46.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의 경우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한 한미일 삼국의 관계 강화가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보 균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북베트남의 경우 1954년 7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수년간 총 1조 5천 3백억 동<sup>28</sup>을 원조받기로 하는 등 전후복구 자금을 전적으로 중소 양국에 의존하였다.<sup>29</sup> 북베트남은 소련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안보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

중소분쟁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대외정책의 혼란을 야기했고 안보상의 위기의식을 초래하였다. 분단국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통일 혁명을 이루어야 하는 북한과 북베트남은 자국의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초래될 경우 어느 한 국가를 지원할 수도 없으며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북베트남은 모두 사회주의 형성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받았으며, 전쟁과 전후시기에 물질적 지원을 중소 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과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의 원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이 때문에 중소 양국중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 2. 베트남전쟁과 중소분열

1960년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가장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곳이 베트남이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은 베트남에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1965년 7월 미국 존슨(Johnson) 대통령은 전쟁의 ‘미국화’를 결정하여 1965년 말 미군의 수는 18만 4천 명 이상에 달하였다.

베트남에서의 무력충돌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 베트남에 대항한 북부의 베트남 공산당 및 남부의 인민혁명당의 대결로 나타났다. 미국의 지원을 입은 남부 베트남의 공세에 대해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즉 북베트남

<sup>28</sup> 옛날 통화에 따른 수치로, 1980년대 말의 약 15억 3천만 동, 4억 3,420만 달러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sup>29</sup> 호치민, “베트남민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일,” 버나드 폴 편, 『호치민의 베트남혁명론』, p. 312.

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소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간의 불신은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해 북베트남은 대외적 의존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은 북한의 대외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1965년 김일성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남조선 괴뢰군이 베트남에 파병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단이건 군단이건 파병되는 병력 수에 해당하는 인원과 장비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파병과 관련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과 국제공산주의 이름으로 미제 타도를 외치면서 “우리는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언제나 지원병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하였다.<sup>30</sup> 그해 1월 17일에는 북베트남과 무상원조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베트남 지원에 나섰다.

북한의 이러한 베트남전 지원 언명은 베트남전의 결과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국제혁명역량 강화에 중심 사건이었고 북한의 남한 무력 도발은 베트남전쟁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북한은 당시 쿠바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민족해방 투쟁 중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냈다. 북한 지도부는 베트남전쟁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상징으로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베트남 문제에서 중국과 소련의 분열 상황이 전체 국제 공산주의 진영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피압박민족의 혁명투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혁명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투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의 상황을 아시아 사회주의 전체의 향방으로 가늠하는 했던 것만큼 베트남의 미래는 같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게 중요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베트남전쟁의 발발과 이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대립은 전쟁 당사자인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대외전략에서 중소 양국의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통일과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국가의 지원이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자주노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sup>30</sup> 국방부,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629.

### 3. 문화혁명과 중국의 대내적 혼란

중국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중국의 대내적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 대외환경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이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정치에 집중하여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중국의 대내 문제로 주변국가와의 충돌도 빈번하였다.

문화혁명은 1966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의 공표를 시작으로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하고 혁명을 주도한 사인방(四人幫)이 체포된 1976년 10월 까지의 10여 년간 지속된 중국의 정치운동이다. 중국 현대 역사에서 문화혁명 시기는 극단주의와 혼란으로 상징된다. 지도자와 대중 모두가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논쟁에서 반대편의 견해가 완전하고 평화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정체(polity)의 능력은 없었던 상태였다. 문혁의 결과로 공산당의 권위가 손상되고 합법성이 무너졌으며, 사회구조가 와해되고 모든 형태의 권위가 무너진 시기였다.<sup>31</sup>

문화혁명은 중국의 국내정치를 일시에 반전시키기도 하였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이 수정주의인 소련에 대하여 중국만이 유일한 ‘사회주의의 보루’임을 자처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조반외교(造反外交)’라 불리는 혁명수출활동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의 보루를 지키는 전쟁이야말로 중국혁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간주하였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국가적 고립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1967년 마오쩌둥은 중국을 “세계혁명의 정치적 중심”이라고 불렀으며 “세계혁명의 군사적·기술적 중심<sup>32</sup>”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문화혁명 기간 중국 외교는 대외적으로 심각한 고립 상태에 있었다. 1967년과 1968년 초의 과격한 외교행태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중국의 우방국가들도 이에 해당되었다. 당시 중국의 인접국가이면서 우방국가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국가들과도 관계가 악화되었다.

문화혁명으로 인한 중국의 혼란은 중국 지도자들을 대내 문제에 집중하게 함

<sup>31</sup> 장윤미, “毛澤東 시기의 사회주의와 그 유산,” 유세희 편, 『현대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2005), p. 47.

<sup>32</sup> Jean Daubier, *A History of th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74), pp. 307-313 참조.

으로써 대외적 고립을 가져왔다. 이러한 중국의 국내문제로의 집중은 북베트남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양국에게 자주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 IV. 자주외교의 비교

### 1. 북한의 자주외교 형성과정

1950년대 후반 중소분쟁에서 중립노선을 취하던 북한은 196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상황에 대하여 “1960년대 들어와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상이는 사상리론적 범위를 벗어나 국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에 저애를 주었다”고 진단하였다. 북한은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 (중략) …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국가나 혹은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을 다 같이 옹호한다는 것<sup>33</sup>”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분열에 대한 자국에 입장을 “형제 당, 형제 나라들 사이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전제로 간주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협조하며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일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갔다”고 주장하였다.

1961년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 소련과 중국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는데, 각기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소련의 코즈로프(Frol L. Kozlov)는 우주선 스푸트니크(Sputnik)의 발사성공을 자랑하고, 서독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등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였다. 중국에서는 소련과 이념 논쟁에 참여하였던 덩샤오핑이 평화공존론을 반박하였다. 그는 평화공존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으나, 아시아에는 타이완 문제, 한반도 및 베트남 문제가 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시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였다.<sup>34</sup>

1961년까지 북한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며 1961년 7월에 소련 및 중국과 각각 체결한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6월과 7월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sup>33</sup>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8.

<sup>34</sup>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99.

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해 7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당 및 정부 대표단과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은 양국간의 우호, 협조 및 원조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와 당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회담하였다. 이 회담 결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sup>35</sup> 중국 및 소련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지원을 보장받고, 양국이 충돌할 경우 북한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1961~1962년 사이에 쿠바 미사일 사태와 라오스 사태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북한이 친중노선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962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1962년 3월 소련의 군비축소 제안에 분명히 반대하는 논조를 표방하는 중국의 보도기사들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sup>36</sup>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념 노선에 치우쳤다.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 있던 북한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상정하는 중국의 노선과 일치하였다.

중국이 1963년 3월 30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서한에 대하여 6월 14일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총노선에 대한 제안’이라는 반론을 공표하며 소련과의 전면적인 이념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북한은 1963년 6월 최용건의 중국 방문시 양국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함과 동시에 교조주의 역시 반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존재하는 분열은 내부 평등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이후 조선로동당은 1963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의 사설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 원인을 ‘현대수정주의’라고 지적하며, 소련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소련을 비난하였다.<sup>38</sup> 이후 1964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아시아경제회의에서 북한은 대소 비난을 더욱 강화했으며 중국과 북한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맞서 소련은 이 회의가 아시아 여러 나라가 소련식의 경제 발전보다 중국식의 경제 발전을 따르라는 중국의 주장을 위한 자리였다고 혹평하였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소련의 경제 원조가

<sup>35</sup>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 160.

<sup>36</sup> “중국 공산당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1963년 4월 8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서울: 선인, 2006), pp. 56-57.

<sup>37</sup> “劉少奇主席和崔庸健委員長聯合聲明,” 『崔庸健委員長訪問中國』 (北京: 人民出版社, 1963), p. 10.

<sup>38</sup>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



그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치 선동을 했다고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였다.<sup>39</sup>

1965년 당창건 2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수정주의를 겨냥한 비판을 주로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환상을 퍼뜨리는 것을 가장 큰 폐해로 꼽았다. 또한 ‘아시아경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 로선’을 강화한 이후 이를 비난한 소련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sup>40</sup> 북한의 이러한 친중노선은 소련의 압력을 수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단절시키고 말았다.

이후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논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대외관계에서의 자주적 입장 견지를 주창하였고, 그해 10월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현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sup>41</sup>라고 밝혀 자주노선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였다.<sup>42</sup>

특히 이즈음에 베트남전쟁에 대해 북한은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을 획정해야만 한다는 중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북베트남 지원을 위한 소련의 연합전선결성제의를 중국이 수락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요구되어지는 ‘단결된 행동’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공산당들 간의 견해 차이는 국제적 반제공동투쟁과 연합전선결성을 위해 잠시 동안 유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sup>43</sup> 결국 북한은 연합전선결성에 관한 중국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중국의 이론적 경직성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 문제에서 중국과 소련의 분열 상황이 전체 국제 공산주의 진영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피압박민족의 혁명투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혁명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투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의 상황을 아시아 사회주의 전체의 향방을 가늠하게 했던 것만큼 베트남의 미

<sup>39</sup>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pp. 104-105.

<sup>40</sup> “조선로동당창건 스무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1965. 10. 10),” 『조선중앙년감 1966-19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p. 12.

<sup>41</sup>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334-335.

<sup>42</sup>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pp. 87-88.

<sup>43</sup>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5), pp. 143-144.

래는 같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게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없음을 판단하고, 국방과 경제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자주노선’을 선택하였다.<sup>44</sup>

## 2.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형성과정

1956년 중반 소련이 ‘두개의 베트남’이라는 개념을 유엔(UN)에서 사용한 데 대해 북베트남은 반발하였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1957년 7월 호치민과 레두안(Le Duan)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남부에서 무장투쟁 수행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였다.

당시까지 북베트남은 중소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나타내며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해 모두 비판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치민은 1957년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며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의 극복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는 형제국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국가의 경험을 배우면서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오류, 즉 교조주의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형제국가의 위대한 기본적 경험이 갖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은 심각한 수정주의의 오류를 초래합니다. (중략) 우리는 교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수정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sup>45</sup>

이러한 호치민의 논의는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모두 경계하며 북베트남에 적합한 혁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때부터 북베트남은 중소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북베트남은 1959년부터 남베트남 혁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해 1월 베트남 당 중앙위 제15차 확대회의에서 남베트남의 연립 민주 정부를 형성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sup>44</sup>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제3권 2호 (2007), pp. 151-161 참조.

<sup>45</sup> 호치민, “우옌 아이 꾸옥 학교의 첫 번째 이론과정 개설에 즈음한 연설,” 버나드 폴 편, 『호치민의 베트남혁명론』, p. 338.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특히 이 회의에서 남베트남의 혁명은 반드시 무력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sup>46</sup>

1960년 남베트남의 지엠이 선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호치민은 독자노선의 필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흐루시초프가 정권을 잡은 소련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베트남 문제로 미국과 갈등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 역시 제네바 회담을 다시 열자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은 베트남의 분단으로 남쪽 국경이 안전해졌다고 여기고 미국과의 공연한 전쟁으로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려 하였다.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베트남의 분할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보다는 10년 혹은 100년의 시간까지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문제<sup>47</sup>”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소 양국의 입장에 대해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 모두를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1960년 11월 레두안은 베트남인들이 국제적인 전략에 관한 중국과 소련의 견해 모두를 비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쟁방지와 평화공존의 문제에 대해 “평화수호의 가능성을 적절히 강조하지 못할 경우”에 “현재 대중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응하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로 평화수호와 평화공존을 편협하게 강조할 경우”에 “제국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고 그 압제를 제거하기를 열망하는 대중과의 소외를 야기하고, 궁극에는 평화의 사명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48</sup>

1960년에서 1961년까지 중국은 제네바 협정과 베트남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했으나, 당시 북베트남은 중국의 정책적 의도와 목적에 대해 점증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1961년 12월 하노이 당국은 베트남전에 대한 게릴라전의 구성과 훈련을 돕기 위해 군사시설단을 이끌고 하노이에 파견된 예젠잉(聶劍英)이 제시한 중국과의 군사동맹 관계 제의를 거절하였다. 중국이 베트남에 대하여 전쟁에서 정규군을 사용하지 말고 지구적이고 무한적인 게릴라전을 펼치도록 종용했는데, 베트남은 이를 거절하였다.<sup>49</sup>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은 신속히 마무리 되었는데, 1961년과 1962년 초 라오스

<sup>46</sup> 더글라스 파이크, 『베트남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 녹두, 1985), p. 148.

<sup>47</sup>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김종욱 역, 『베트남공산당사』 (서울: 소나무, 1989), p. 106.

<sup>48</sup> 가레스 포터, “베트남 사회주의의 성격,” 윌리엄 뒤이커 외, 『베트남혁명 연구』 (서울: 세계, 1996), p. 81.

<sup>49</sup> Nguyen Mahn Hung, “Sino-Vietnamese Conflict : Power Play Among Communist Neighbors,” *Asian Survey*, Vol. 19, No. 11 (November 1979), p. 1038.

에서 일어난 내전에 대한 입장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친소입장에서 친중입장으로 전환하였다. 1962년 7월 제네바에서 라오스 내전이 라오스의 중립화로 종결되었다. 하노이의 지도를 받는 라오스 공산주의자들과 파땃 라오(Pathet Lao)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은 라오스의 중립화에 동의하였다. 라오스 휴전협상에 대하여 소련이 일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동의를 강요하자 베트남 지도부는 이에 반발하였다. 이러한 라오스의 중립화 모델은 하노이에게 남부 베트남의 중립화도 동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주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쪽으로 선회하였고 소련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북베트남의 대중관계 강화는 1963년 4월 레두안이 무력을 통한 평화를 언급하고 류샤오치가 북베트남을 방문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북베트남은 소련에 대한 비판을 점차 강화하였다. 같은 해 8월 중국과 함께 “소련 이외의 사회주의 국가도 자위의 수단들은 보유해야만 한다”<sup>50</sup>는 것을 근거로 미국과 소련의 부분적 핵실험 규제협정 조인을 반대하였다. 이후 1963년 12월 중앙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발표한 레두안의 연설에서 모스크바와 하노이의 균열이 나타났다. 레두안은 “투쟁의지와 혁명정신이 없는 이들을 비난하고 혁명의 무한한 측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뒤이어 수정주의자들이 최근 수년 간 마르크스-레닌 이론의 발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마오쩌둥의 업적은 농촌혁명의 기반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농민들을 동원시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수정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일부 동지들은 현대 수정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의 수는 적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51</sup>

그러나 베트남의 친중노선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베트남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는 찬성하였지만 모스크바와 완전히 단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 베트남은 소련의 정책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면서도 소련과의 ‘결속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 이후의 소련 지도부가 세력을 장악한지 몇 주도 안되어 지원을 약속하자 베트남측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1964년 중국은 소련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아시아 공산주의 정당들의 회합을 제안하였지만 베트남측이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up>50</sup> 가레스 포터, “베트남 사회주의의 성격,” p. 85.

<sup>51</sup> Donald S. Zagoria, *Vietnam Triangle-Moscow, Peking, Hanoi* (New York: Pegasus, 1967), pp. 110-111.

다. 또한 베이징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반제국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고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전개함에 따라 하노이와의 균열을 더욱 확대시켰다. 1965년 1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Sukarno)가 유엔에서 탈퇴하자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조직으로서 CONEFO(Conference of New Emerging Forces)를 염두에 두고 베트남의 참가를 원하였으나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였다.<sup>52</sup>

1965년 초 사이에 미국이 직접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965년 6월 1일 베트남 리칭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대베트남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했다.<sup>53</sup> 6월 9일 중국은 베트남에 부대를 파병했다. 참전 부대의 규모는 총 32만 여명에 이르고 평균 매년 13만에서 14만여 명, 1967년에는 최고 17만 명에 달했다. 중국은 1965년에서 1973년까지 2만 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30만 병력의 군대로써 북베트남을 원조했다. 주로 방공, 공사, 후방지원이었고 일부는 수송을 담당했다. 중국군의 대부분은 소위 ‘중국인민지원공정대’로서, 그들은 베트남에서 철로나 방호시설의 보수 및 건설과, 비행장 건설 임무를 수행했다. 1965년 초 7개 사단의 중국인민지원공정대가 순차적으로 베트남에 투입되었다. 모든 중국인민지원공정대부대는 고사포 부대를 동반했다. 이 시기 중국군은 5천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들 가운데 1천 명 이상이 베트남 현지에서 묻혔다.<sup>54</sup>

이와 동시에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의 물자지원도 병행하였는데, 전투기 170대, 군함 140척, 탱크 500대, 기차 1만 6천량, 화포 3만 7천문, 각종 총기 216점, 각종 포탄총 12억 8천만 발 등이다. 중국의 물자지원 총가치는 당시 국제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2백억 미국 달러 정도이고, 그중 군사물자지원이 42억 위안, 2백만 명에 대한 장비였다. 그 외 광시(广西), 광둥(广东), 윈난(云南), 후난(湖南) 등에서 200여 만 위안(元)을 지원했다.<sup>55</sup>

소련 역시 베트남 지원을 적극화하였다. 1965년 2월 코시긴의 하노이 방문시 소련은 군사와 경제 양면에 걸쳐 아낌없는 원조를 약속했다. SAM-2 미사일, 항공기 감시체제, MiG-21 전투기 등의 고가 무기가 소련으로부터 지원되었다.<sup>56</sup> 소

<sup>52</sup> A. D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p. 319.

<sup>53</sup> 『中華人民共和國外交大事記：第三卷(1965-1971)』(北京：世界知識出版社，2002)，p. 31.

<sup>54</sup> 자오찬성, 김태완 옮김, 『중국의 외교정책』(서울: 오름, 2001), p. 82.

<sup>55</sup> 姜長斌, 『從對峙走向緩和』(北京：世界知識出版社，2000)，pp. 278-279.

<sup>56</sup> 더글라스 파이크,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 연구』, p. 188.

련은 이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권을 되찾고 베트남에 대한 이익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북베트남과 소련 관계는 긴밀해진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북베트남은 수정주의에 대한 비난을 격감시키고, 1965년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아 온 이탈리아공산당을 초청하였다.

1965년 4월 3일 소련은 중국 정부에 보낸 비밀서한에서 베트남 원조에 관한 중국, 소련, 북베트남의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거절하였고 4월 8일 베트남 공산당과의 단독 회담을 가지고 중국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sup>57</sup> 그러나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중국의 파병과는 별개로 소련의 항공기를 비롯한 안보물자의 지원과 소련군의 파병 역시 필요했다. 이 때문에 2주 후 4천명의 소련군이 중국을 통과할 것을 중국측에 요청함과 동시에 소련 공군기의 중국 남서부 비행장 사용 및 중국 영공 통과권 등을 요구하였다.<sup>58</sup> 그러나 중국은 1965년 11월 11일 소련의 제의를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에 대해 어느 한 측도 비난하지 않고 유연성 있는 정책을 폈다. 1966년 소련의 베트남에 대한 무력지원통로 제공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중국은 소련에 그 책임을 전가하였으나, 북베트남은 이를 반박하였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67년 초 중소 국경 근처에서 수하물을 받아서 중국 영토를 통하여 인도받는 것에 대하여 중소 양국의 협정을 얻어내 중국을 통하여 소련의 무기와 물품을 전달받았다.<sup>59</sup> 이 합의로 북베트남은 무기 선적에 대한 중소간의 분열을 축소시켰고, 중소 모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간의 분쟁에서 레버리지(leverage)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북베트남은 중소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년간 이들 두 경쟁국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의 갈등에 너무 깊숙하게 말려 들어가는 것을 피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확대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등거리정책을 유지하였다.

### 3. 자주외교의 비교

195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소련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중소분쟁 초기

<sup>57</sup> 姜長斌, 『從對峙走向緩和』, pp. 272-274.

<sup>58</sup>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p. 238.

<sup>59</sup> Eugene K. Lawson, *The Sino-Vietnamese Conflict* (New York: Praeger, 1984), pp. 306-307.

에 북한과 북베트남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양국 모두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재건에 집중하려 노력하였고 경제 건설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상태였다. 북한은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5년이라는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한 상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획득에 집중하였다. 북베트남 역시 1956년 4월부터 남부의 혁명보다 북부의 경제 재건에 중점을 둘 것을 결의한 상태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소 양국은 자국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였는데, 특히 중국은 북한과 북베트남에 대하여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했으나, 양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1961년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등거리 외교를 적극화하면서 자주외교를 추구할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북한과 북베트남은 쿠바 미사일 사태 및 라오스 중립화에 대한 소련의 입장 표명 이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4년 소련 코시긴(Kosygin) 수상의 북한과 북베트남의 방문 전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자주외교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화하였으나, 북베트남은 중소 모두로부터 대외지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에서 가장 단적인 차이는 안보조약 체결의 여부이다. 양국이 모두 중소로부터 안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체적인 안보조약을 체결한 것은 북한이다. 1961년 북한은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북한 안보 위기사 안보에 대한 의무를 중소에 부담하는 안보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부터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소련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북한의 친중노선은 소련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중국에 대외원조의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내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중소 모두로부터 대외지원의 급격한 감소

를 경험하였다.

반면 북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안보조약 체결 제의에 중국의 남부혁명 방식에 대한 개입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북베트남에서는 남부 혁명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안보조약의 제도화는 중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북베트남도 미국의 베트남 개입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안보지원 조약을 체결하였다. 베트남과 미국과의 전쟁중에 중국과 거의 매년 ‘경제기술원조 협정 및 군사지원의정서’ 또는 ‘경제, 군사 보충지원협정’을 맺었고, 소련과도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과 상관없이 안보의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안보 레짐(regime)으로 보긴 어렵다. 이처럼 안보조약이 제도화되지 않음으로써 베트남 통일 이전까지는 명시적 안보동맹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조약 체결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북베트남은 북한보다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자주외교 추진에서 북한은 소련보다 중국에 대해 더 편향되어 있었던 반면, 베트남은 중국보다 소련에 대해 더 편향되어 있었다. 양국의 국가형성 과정을 보면, 모두 초기에는 소련식의 사회주의를 수용했으나, 전쟁을 통한 국가형성 시기에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전후복구 시기에는 중소 양국의 지원을 모두 받았으나 중소분쟁의 이념 논쟁에서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자주외교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자주외교를 취하면서도 중국에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문화혁명 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북베트남은 국가 수립 과정에서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나, 자주외교를 취하면서 소련에 더 편향되었다. 북베트남은 베트남전 속에서 중소 양국으로부터 모두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외교를 나타내었으나,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북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경계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소분열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인이 하나의 국가로 등장한 이래 1천 년간 한인(중국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베트남을 정복 또는 통치했고, 이러한 역사는 베트남인들에게는 독립의식을 키우는 동시에 중국에 대



한 깊은 피해의식을 남겨두었다. 또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소련의 중국에 대한 협력지원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북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북베트남은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점차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셋째,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중소 양국을 모두 비판하는 자주외교를 나타낸 반면,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의 손을 모두 들어주면서 중소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냈다. 북한과 북베트남은 중소분쟁 시기에 안보 위기감을 완화하고 대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외교의 대외노선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6년 자주노선을 천명하고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면서 중소 양국의 지원이 모두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베트남은 형식적인 수사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데에 소련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베트남이 전쟁 중이었던 사실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북베트남 지원에 대한 중소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것은 대외지원 확대를 가져온 것은 북베트남 자주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추구의 공통적 원인을 찾고, 자주외교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자주외교 추구의 요인으로 지정학적 환경, 강한 민족적 자부심, 외국지배 경험, 정치통합의 추구 필요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북한과 북베트남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자주외교 형성의 기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과 북베트남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라는 지정학 요인, 높은 민족적 자부심, 고대 및 근대 시기 식민지배 경험, 전쟁과 분단 이후 당내 정치통합의 필요성이 공통적 자주외교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적 특성은 195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중소분쟁과, 1960년대의 베트남전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대외적 상황에서 자주적 대외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분쟁 시기의 자주외교는 중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왔던 북한과 북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약소국이 대외적 위기에서 취한 공통적 실리외교 전략이었다.

양국의 자주외교 형성과정을 비교해보면, 양국 모두 1950년대 중반부터 중소분쟁으로 인한 당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의 각 분파가 갈라지는 상황을 겪은 후부터 자주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식이나 소련식을 그대

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의 수용을 주장하면서 자주외교가 시작되었다.

중소분쟁의 시발이 된 소련의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에 대해서 북한과 북베트남은 지지를 표하였고, 1950년대까지는 북한과 북베트남 모두 중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1962년부터 중소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국가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입장에 따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주외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첫째, 중소와의 안보조약 체결 여부이다. 북한은 1961년 중국과 소련의 양국으로부터 안보지원을 약속받는 안보조약을 체결했으나, 북베트남은 중국의 안보조약 제의를 거부하였다. 둘째, 북한은 자주외교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반면 북베트남은 소련과의 협력에 더 무게를 두었다. 셋째, 효과적인 대외 지원 확보의 성공 여부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중소 양국을 모두 비판한 반면, 북베트남은 중소 양국의 손을 모두 들어주면서 중소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냈다.

이와 같이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는 공통적인 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외정책 노선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국의 자주외교는 경제 복구와 남부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단국가가 사회주의 강대국의 분열 속에서 취했던 외교 전략이었다. 자주외교의 추구는 공통적이었으나, 자주외교를 추구하면서 북한은 명분을 내세워 실리를 감소시켰고, 북베트남은 전쟁 상황에서 실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결국 양국 자주외교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 접수: 10월 2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 참고문헌

- 구본학 외.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5.
- 국방부.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김달중 편.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8.
- 김달중·스칼라피노 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중국·북한·베트남』. 서울: 법문사, 1989.
- 김한식. 『동남아시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 더글라스 파이크. 『베트남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 녹두, 1985.
- 맥마흔 불, 손중기 역.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1.
- 모리카즈꼬.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 버나드 폴 편. 『호찌민의 베트남혁명론』. 서울: 거름, 1987.
-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김종욱 역. 『베트남공산당사』. 서울: 소나무, 1989.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오코노기 마사오 편. 『김정일과 현대 북한』.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윌리엄 뒤이커 외. 『베트남혁명 연구』. 서울: 세계, 1996.
- 유세희 편. 『현대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2005.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제3권 2호, 2007.
-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서울: 중심, 2000.
- 자오찬성.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 2001.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5.
-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 존 K. 페어뱅크·에드윈 O. 라이샤워·앨버트 M. 크레이그. 『동양문화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1.
- G. F. 허드슨·리차드 로웬탈·로데릭 맥화퀴. 『중·소분쟁: 자료와 분석』. 고양: 인간과 사회, 2004.
- 최원식·백영서.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화과지성사, 1997.
-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서울: 심산, 2004.
-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서울: 선인, 2006.
- 프랑스와 주와이요. 『중국의 대외정책』. 서울: 탐구당, 1989.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조선중앙년감 1966-19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 Azar. Edward E. & Moon Chung-in.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Aldershot: Gower Publisher, 1988.
- Barnett. A. Doak.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 Chung Chin O.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o-Soviet Dispute, 1958-1975*.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8.
- Daubier. Jean. *A History of th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74.
- Huynh Kim Khanh. "The Vietnamese August Revolution Re-interprete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 1970-1971.
- Lawson. Eugene K. *The Sino-Vietnamese Conflict*. New York: Praeger, 1984.
- Lu De'an. "The Cold War and the Origin of the Vietnam War." 『東南亞縱橫』.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5.
- Nguyen Mahn Hung. "Sino-Vietnamese Conflict: Power Play Among Communist Neighbors." *Asian Survey*. 1979, Vol. 19, No. 11, November 1979.
- Womack. Brantl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Zagoria. Donald. S. *Vietnam Triangle: Moscow, Peking, Hanoi*. New York: Pegasus, 1967.
- 姜長斌. 『從對峙走向緩和』.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0.  
 黃文歡. 『越中戰鬥友誼的事實不容歪曲』. 北京: 人民出版社, 1979.  
 『崔庸健委員長訪問中國』. 北京: 人民出版社, 1963.  
 『中華人民共和國外交大事記: 第三卷(1965-1971)』.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Self-reliant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ang-Sook Lee*

The major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self-reliant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common characters of two states- geopolitical environments, strong national pride, historic colonial experience, political unification.

This study insists that two states stressed neutral position in foreign diplomacy in order to reconstruct economy and unify whole nation until 1950s. In the early 1960s, two states supported China in Sino-Soviet conflicts. However, the effects of self-reliant diplomacy is different. First, North Korea contracted security treaty with China and Soviet but North Vietnam refused the security treaty proposal of China. Second, North Korea more depended on China than Soviet whereas North Vietnam more depended on Soviet than China. Third, North Vietnam could get more economic aid from Sino-Soviet than North Korea.

**Key Words:** Self-reliant Diplomacy, North Korea's Diplomacy, North Vietnam's Diplomacy, Sino-Soviet Discord, Geopolitical Environments, Colonial experience

# 구매력평가이론에 근거한 북한 가격 및 환율 분석

문 성 민\*

- I. 머리말
- II. 북한의 가격 및 환율
- III.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및 가격·환율의 특징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LOP)」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이론」에 근거하여 이원화된 북한의 가격과 환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과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에 대한 입수 가능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과 주변국(중국 등)의 쌀 가격에 대한 LOP 성립여부를 검정하였으며 PPP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 환율의 고평가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은 LOP가 성립하지 않으며 PPP 이론에 근거해 계산된 균형환율로 회귀하지도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은 비록 가격 자료

가 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자료상의 제약이 있으나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로 회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이 북한경제나 국제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은 이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가격, 환율, 일물일가의 법칙, 구매력평가이론, 균형환율

## I. 머리말

북한의 가격 및 환율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정가격 및 환율'과 '시장가격 및 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가격구조는 국가가 임의로 낮게 정한 국정가격으로 배급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낮은 국정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차장

가격에 의한 배급제가 수요초과현상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며 이 암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환율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이다.

임의로 낮게 설정된 국정가격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격에서도 많은 왜곡이 나타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의 왜곡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의 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국정환율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Pryor(1963), Holzman(1968), Wolf(1980) 등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국정환율이 주로 회계단위로만 사용되어 재화의 가격이나 무역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sup>

이에 반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의 경우 가격자료에 대한 제약 등으로 실증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많은 연구에서 왜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Berg & Sachs<sup>2</sup>는 폴란드 체제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암시장 가격을 시장청산가격으로 가정하였으며 Culbertson & Amacher<sup>3</sup>는 동구 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에서 국정가격 대신 시장환율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북한도 이원화된 가격 및 환율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계획경제 부문에서 낮은 가격으로 물자를 구입하여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가 확산되어 계획경제부문에서의 초과수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정가격 및 환율을 시장가격 및 환율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시장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국정가격과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이원화된 가격구조에 따른 문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sup>1</sup> Thomas Wolf, A, "Exchange Rate Systems and Adjustment in Planned Econom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Vol. 32, No. 2 (1985), pp. 211-247 재인용.

<sup>2</sup> A. Berg, and J. Sachs, "Structural Adju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Economic Policy*, No. 14 (1992), pp. 118-173.

<sup>3</sup> W. P. Culbertson, and Ryan C. Amacher, "Inflation in the Planned Economies: Some Estimates for Eastern Europ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5, No. 2 (1978), pp. 380-393.

이처럼 북한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격 및 환율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경제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체제전환 과정에서 거시경제변수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 수립 등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경제통계의 부족<sup>4</sup>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이전에 대한 연구는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체제전환 과정이나 체제전환 이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화된 북한의 가격 및 환율의 특성을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LOP)」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쌀 가격 및 환율 시계열을 구축하였으며 동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LOP 성립여부와 PPP 이론에 근거한 환율의 고평가여부를 분석하였다. LOP가 성립할 경우 두 국가의 재화시장이 통합되어 재정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북한 가격 및 환율의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구축된 가격 및 환율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이들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 북한의 가격 및 환율

### 1. 개요

#### 가. 가격 및 환율 제도

북한의 ‘국정가격 및 환율’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다. 북한에서는 상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 등 모든 국정가

<sup>4</sup> 북한은 국가예산 이외에는 경제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수치에 대한 정확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sup>5</sup> LOP와 PPP가 성립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시장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LOP와 PPP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LOP와 PPP가 성립할 경우 그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격이 내각의 ‘국가가격제정국’에서 결정된다. 또한 국정환율은 재정성이 결정하여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발표된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식량배급소 또는 국영상점에서 국가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조선무역은행에서 국정환율로 외화를 북한 원화로 환전한다.

북한의 ‘시장가격 및 환율’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및 환율로서 1990년 이후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시장경제부문이 확산<sup>6</sup>되면서 북한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가가격 및 환율’과 ‘시장가격 및 환율’의 괴리가 확대되고 계획경제부문이 더욱 위축되는 등 이원적 경제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커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국가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가격제정 원칙도 변경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가격과 임금은 각각 평균 25배, 20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국가가격 결정도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적용하여 10일에 한 번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sup>7</sup> 또한 식량(쌀)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쌀 연동가격결정방식이 채택되었다. 국정환율은 70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환율 결정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통화가 그동안의 미달러화에서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로 변경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11월경 미달러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대외결제의 기본 수단을 미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하였다.

만약 북한의 가격결정이 발표된 바와 같이 결정된다면 국가가격 및 환율이 시장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시장가격 및 환율은 7.1조치의 후속조치로 2003년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여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 더 폐쇄적이라는 북한경제의 특성 등을 근거로 북한의 시장가격 및 환율이 북한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sup>6</sup> 문성민·남성욱은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전체의 27.1%로 추정하였으며, 양문수(2006)도 북한에서의 사적 고용인구가 30~50%일 것으로 추정. 문성민·남성욱,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pp. 149-215;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2006), pp. 7-43.

<sup>7</sup> 그러나 7.1조치 이후 실제 쌀 국가가격이 변경되었다는 보도는 없었던 점을 근거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가격 및 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나. 가격 및 환율 자료

북한은 국가예산 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통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가격 및 환율 시계열 자료 역시 공식자료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종합한 가격 및 환율자료는 대부분이 연구소나 언론 등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집, 발표한 자료들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북한 내부 자료이다.

북한 국정가격은 남성욱(2003)<sup>8</sup>과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각년호) 등에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였으며, 국정환율은 독일 Bundesbank의 『Exchange rate statistics』 각월호<sup>9</sup>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북한의 쌀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은 좋은벗들의 『오늘의 북한소식(North Korea Today)』 각호와 데일리엔케이(The Daily NK)의 보도내용 등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였다.

북한 이외 국가의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sup>10</sup>과 아시아 국가 통계정보(CEIC)<sup>11</sup> 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국정가격 및 환율

### 가. 국정 가격

북한의 국정가격은 2002년의 7.1조치에 의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가격이 종전보다 평균 25배 인상되었으나 알려져 있는 국정가격 정보를 종합, 계산한 결과 80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sup>8</sup> “노동자 생활비 표준표,”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3년 하반기호 (2003), pp. 108-109 재인용.

<sup>9</sup> <[http://www.bundesbank.de/statistik/statistik\\_veroeffentlichungen\\_beiheft5.en.php](http://www.bundesbank.de/statistik/statistik_veroeffentlichungen_beiheft5.en.php)>.

<sup>10</sup> <<http://ecos.bok.or.kr/>>.

<sup>11</sup> <<http://www.ceicdata.com/>>.

<표 1> 7.1조치시 물가인상 주요 내역

품종	품 목	단위	가격(원)		B/A(배)	품종별 평균변화
			변경전(A)	변경후(B)		
음·식료품	쌀	kg	0.08	44	550	185
	옥수수	kg	0.06	24	400	
	돼지고기	kg	7	170	24	
	된장	kg	0.2	17	85	
	콩기름	kg	4	180	45	
	담배	갑	0.35	2	6	
생필품	남자운동화	켤레	3.5	180	51	23
	세수비누	개	3	20	7	
	칫솔	개	1.5	15	10	
공공요금	시내버스	회	0.1	2	86	82
	철도여객(평양→청진)	회	17	590	100	
	전기사용료	1kWh	0.035	2.1	60	
원자재	석탄	ton	34	1500	44	49~51
	베어링	개	2~5	20~100	10~20	
	디젤유	ℓ	40	2800	70	
	휘발유	ℓ	40	2800	70	

자료: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하여(북한 내부자료),”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2003), p. 89 재인용.

7.1조치 이후의 국정가격에 대해서는 일부 곡물가격 정보밖에 없어<sup>12</sup>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알려져 있는 이 시기의 가격정보는 2008년 3월까지 쌀과 옥수수 국정가격이 각각 1kg당 44원<sup>13</sup>과 24원으로 7.1조치 당시 국정가격과 변화가 없다는 정도이다. 쌀과 옥수수 국정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7.1조치 이후 시행된 쌀 연동가격결정방식에 근거하면 여타 제품

<sup>12</sup> 일부 곡물 이외의 국정가격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인에 대한 배급이 일부 식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되어 국정가격(또는 배급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일부 식량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up>13</sup> 한편, 일부 조사에서는 쌀 가격을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쌀의 종류가 다른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분도 쌀은 46원, 8분도 쌀은 44원, 장립종 쌀은 35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 분도는 쌀의 도정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분도 쌀은 일반적으로 백미 또는 정백미라고 불리는 쌀이며 현미에서 겨 층과 씨눈이 거의 제거되어 현미 중량의 10%정도가 감소된 쌀이다. 8분도 쌀은 백미와 현미의 중간정도 도정한 쌀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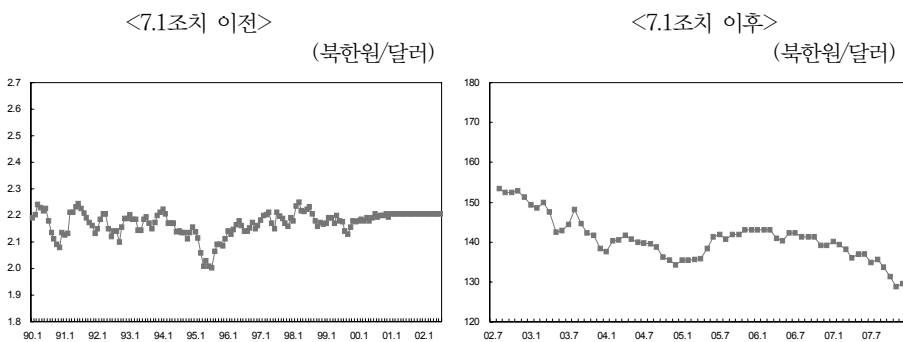
의 국정가격도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7.1조치 이전의 국정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던 점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국정가격의 변동이 매우 적었던 점을 근거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부터 2002년 7.1조치 직전까지 0.08북한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여타 국정가격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Portes (19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 이내였다(자세한 내용은 <부표 2> 참조).

### 나. 국정 환율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은 2002년 7.1조치에 따라 달러당 2.2북한원에서 153.5북한원으로 약 70배 인상되었다. 7.1조치 이전에는 10년 이상을 달러당 2.1~2.2북한원 내외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특히 2001.1월부터 2002.7월까지 달러당 2.2북한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율 움직임을 볼 때 2002년 7월까지 북한의 환율제도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라 할 수 있다.

7.1조치 이후인 2002년 8월부터는 153북한원에서 2007년 12월 128북한원까지 약 16% 하락하여 7.1조치 이전의 국정환율이나 국정가격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기준통화가 미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은 일종의 재정환율이다.

<그림 1>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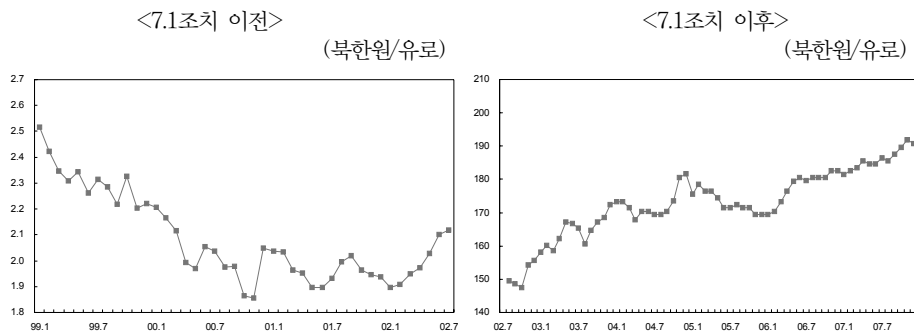
자료: Bundesbank, 『Exchange rate statistics』 (각월호).

북한원/유로 국정환율도 2002년 7.1조치에 따라 유로당 2.1북한원에서 149.5북한원으로 약 70배 인상되었다. 2002년 7월까지 미달러화가 기준통화였기 때문에 북한

원/유로 국정환율은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에 국제시장에서의 미달러화/유로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북한원/유로 환율은 국제시장에서의 미달러화/유로 환율변동 때문에 북한원/미달러 환율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였다.

2002년 7.1조치 이후의 북한원/유로 국정환율도 2002년 8월의 149.5북한원에서 2007년 11월의 191.8북한원까지 28.3% 상승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 기준통화가 미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된 2002년 8월 이후의 북한원/유로 환율 움직임을 볼 때 현재 북한의 환율제도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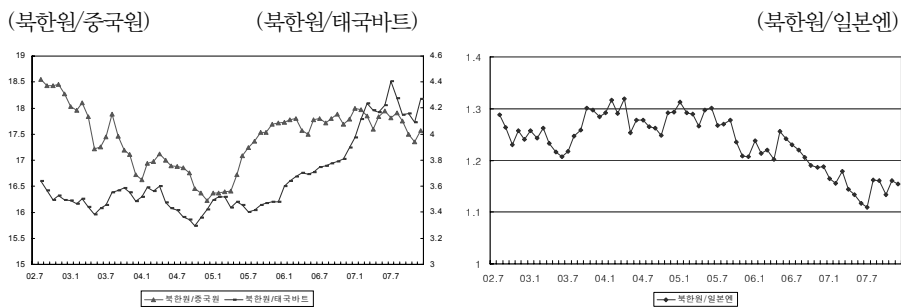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원/유로 국정환율 추이



자료 : *Ibid*.

여타 통화에 대한 국정환율은 기준통화(유로화) 대비 북한원 국정환율을 먼저 정하고 이를 국제시장에서의 기준통화 대비 환율로 재정하여 결정된다. 2002년 7월 이후 중국원 및 태국 바트화 대비 북한원 국정환율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원/일본엔 국정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북한원의 재정환율 추이



자료 : 북한원/달러 Bundesbank, *Ibid*. 중국원/달러, 태국바트/달러, 일본엔/달러는 CEIC, <<http://www.ceicdata.com/>> (검색일: 2007.3.17).

### 3. 시장가격 및 환율

#### 가. 시장 가격

7.1조치 이전 북한의 시장가격은 <표 2>으로 보는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기(1995~9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의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2> 7.1조치 이전의 북한 시장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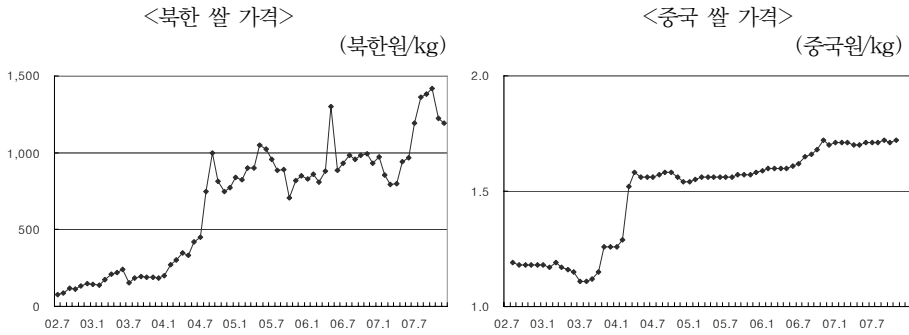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쌀(kg)	20	25	25	..		100	..	77	64	46.6	49.5
					85~200						
달걀(개)	3	2.5	..	..	..	13	..	16	13	11.8	10
돼지고기(kg)	30	30	..	..	..	180	..	181	160	130	138.4

자료: 통계청, 통일부, 김영운(1997), 박석삼(2002), 이영훈(2005) 등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 과제,” 『금융경제연구』 236호 (2005), p. 36 재인용.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가격이 다시 급등하여 2007년 말에는 7.1조치 당시 가격의 20배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7.1조치로 인해 국정가격이 80배, 국정환율이 70배, 임금이 20배 정도씩 오른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2002년 재정관리 개선조치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국가재정 대신 은행대출이 담당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통화공급 확대도 시장가격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는 쌀 시장가격의 경우 2002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kg당 50북한원 수준에서 1,000북한원 수준까지 올라 2년여 만에 18배가 상승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4년 1월부터 9월 중에 빠르게 상승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2007년 4월경까지는 대체로 1,000북한원 내외에서 횡보하였으며 2007년 5월경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1,900북한원을 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쌀 가격 움직임은 중국 쌀 가격의 움직임이나 물량통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1월부터 9월 중에 북한 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2004년 2월부터 4월중에 중국 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전언되며 최근의 쌀 가격 상승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의 쌀 수출 통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 7.1조치 이후의 북한 및 중국 쌀(1kg) 가격 추이



자료: 북한 쌀 가격은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North Korea Today)』 (각호), 데일리엔케이(The Daily NK) 등. 중국 쌀가격은 CEIC, *Ibid*, (검색일: 2007.3.17).

### 나. 시장 환율

북한의 북한원/미달러 시장환율도 시장가격과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다.

7.1조치 이전 북한원의 대미달러 시장환율은 ‘고난의 행군기(1995~9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국정환율의 100배 내외인 200~250북한원까지 상승했다가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의 동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3> 7.1조치 이전의 미달러대비 북한환율 추이

	(북한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국정환율(A)	2.13	2.15	2.16	2.05	2.14	2.16	2.2	2.17	2.19	2.21
시장환율(B)	80~100		120~150		195	190~230	190~250	200~230	200~210	210~250
B/A(배)	37~47		59~69		91	88~106	86~114	92~106	91~96	95~113

자료: 한국은행, 김영윤(1997), 박석삼(2002) 등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p. 45 재인용.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북한원/미달러 시장환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 말 달러당 3,250북한원 내외로 2002년 7월의 250북한원 내외보다 13배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7.1조치로 축소되었던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표 4> 7.1조치 이후의 미달러대비 북한환율 추이

(북한원)

	2002.8~1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정환율(A)	153	145	139	137	141	135
시장환율(B)	200~480	400~1,000	1,200~1,900	1,900~2,720	2,730~3,350	2,890~3,320
B/A(배)	1.3~3.1	2.8~6.9	8.6~13.7	13.9~19.9	19.4~23.8	21.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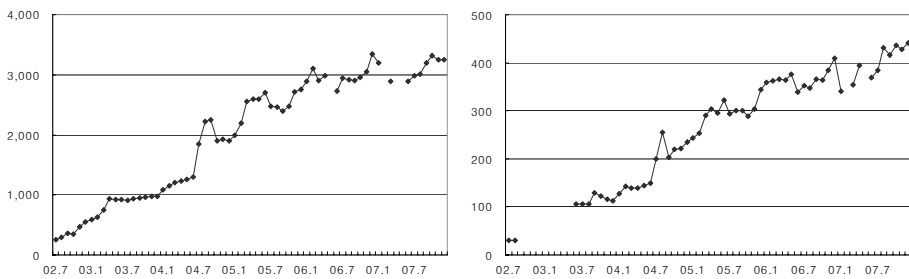
자료: 국정환율은 Bundesbank, Ibid. 시장환율은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North Korea Today)』(각호), 데일리엔케이(The Daily NK) 등.

한편 북한원/중국원 시장환율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그림 5> 북한원의 월별 대미달러 및 대중국원 환율 추이

(북한원/미달러)

(북한원/중국원)



자료: 미달러, 중국원 시장환율 Ibid.

북한원/중국원 환율은 북한원/미달러 환율에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중국원/미달러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북한경제의 폐쇄성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암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중국원/미달러 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다른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폐쇄성이 강하여 북한의 외화 암시장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데다가 암시장에서의 외화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외화 암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참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 점검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1>

북한원/중국원 환율 점검 결과

북한원/중국원 환율이 일반적인 재정환율 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재정환율 계산식과 점검식을 이용하였다.

- 재정환율 계산식 :  $E^{\text{북한원/중국원}} = E^{\text{북한원/미달러}} \div E^{\text{중국원/미달러}}$

- 점검식 :  $ER_t = \beta_1 + \beta_2 AER + e_t$ ,

여기에서  $ER = E^{\text{북한원/중국원}}$ ,

$AER = E^{\text{북한원/미달러}} \div E^{\text{중국원/미달러}}$

이 식을 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beta_2$ 의 추정치가 1에 가까운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어 북한원/중국원 환율이 재정환율 계산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OLS 추정 결과 :  $ER_t = -1.063 + 0.972AER + e_t$   
(-0.17) (46.6)  
< 6.38 > < 0.02 >

•  $R^2 = 0.98$ ,  $DW = 1.58$ , ( )내는 t-value, < >내는 표준오차

•  $e_t$ 에 대한 단위근 검정 통계량

: ADF -4.844207\*\*\*, DF-GLS -4.503557\*\*\*

(ADF 및 DF-GLS 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 정상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나 ER과 AER은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2003.6월~2007.12월까지 북한의 외화 암시장에서 형성된 북한원/중국원환율과 북한원/미달러환율,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중국원/미달러 환율을 사용하였고 이 식을 추정하기 전 ER과 AER의 정상성(stationary) 테스트 결과 두 변수 모두 I(1)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여타국 쌀 가격의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LOP)」 성립 여부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이론」에 근거한 북한의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분석하였다.<sup>14</sup>

<sup>14</sup> 본 논문에서 실시한 LOP 성립 및 환율 고평가 여부분석은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빅 맥 지수(big Mac Index)'를 이용해 분석한 소위 '버거노믹스(Burgernomics)'의 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과 '버거노믹스'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동질적인 하나의 상품의 가격을 이용하여 LOP(또는 PPP) 성립 여부와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버거노믹스'는 환율 고평가 여부를 두 국가의 실질환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여러 교역상대국을 종합한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 LOP 성립여부 검토

### 가. 개요

LOP는 PPP와 함께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주제중 하나로서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체제전환국가를 대상으로 LOP와 PPP 성립여부를 점검한 논문도 많이 있다.

체제전환국의 LOP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내 36개 도시의 93개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LOP 성립여부를 분석한 Fan and Wei<sup>15</sup>가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상대가격 움직임을 분석한 De Masi and Koen,<sup>16</sup> Conway<sup>17</sup> 등도 이와 관련이 있다. 체제전환국의 PPP 성립여부에 대한 연구로는 Thacker<sup>18</sup>, Choudhry,<sup>19</sup> Christev and Noorbakhsh,<sup>20</sup> Sideris<sup>21</sup>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체제전환 과도기중에는 PPP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체제전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최근에는 대체로 PPP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국가나 북한을 대상으로 LOP 또는 PPP 성립 여부를 점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자료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연구로는 남북한간의 구매력 수준을 비교한 이영섭,<sup>22</sup> 문성민·김용복<sup>23</sup>(2001) 정도가 있다.

LOP는 효율적인 시장(efficient market)에서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가격을 갖

<sup>15</sup> C. S. Fan and X. Wei, "The Law of One Price: Evidence from the Transitional Economy of Chin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pp. 682-697.

<sup>16</sup> P. De Masi and V. Koen, "Relative Price Convergence in Russi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43:1 (1996), pp. 97-122.

<sup>17</sup> P. Conway, "Privatization and Price Convergence: Evidence from Four Markets in Kyiv,"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7:2 (1999), pp. 231-257.

<sup>18</sup> N. Thacker, "Does PPP hold in the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Poland Hungary," *Applied Economics*, 27 (1995), pp. 477-481.

<sup>19</sup> T. Choudhry, "Purchasing Power Parity in High-Inflat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Evidence from Fractional and Harris-Inder Cointegr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21 (1999), pp. 293-308.

<sup>20</sup> A. Christev and A. Noorbakhsh, "Long-run purchasing power parity,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transition The case of six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Global Finance Journal*, 11 (2000), pp. 87-108.

<sup>21</sup> D. Sideris, "Purchasing power parity in economies in transition: evidence from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pplied Financial Economics*, 16 (2006), pp. 135-143.

<sup>22</sup> 이영섭, "남북한 통화의 구매력 비교,"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1993), pp. 41-63.

<sup>23</sup> 문성민·김용복, "2개국 평가법에 의한 북한「원」의 구매력평가," 『한은조사연구』 2000-13 (2000).

는다는 경제법칙이다. LOP는 재정거래가 자유로울 경우 임의의 한 시점에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 재화의 가격이 동 시점의 환율로 환산할 때 모두 동일하다는 법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_{i,t} = S_t \times P_{i,t}^* \quad (1)$$

여기에서  $P_{i,t}$ 는  $i$ 제품의  $t$ 시점에서의 국내가격,  $P_{i,t}^*$ 는  $i$ 제품의  $t$ 시점에서의 외국가격,  $S_t$ 는 외국통화 한 단위를 국내통화로 표시한 명목환율이다.

위 식(1)은 다음과 같이 상대가격비율(Relative Price Ratio; RPR)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다.

$$RPR_{i,t} = \frac{S_t \times P_{i,t}^*}{P_{i,t}} \quad (2)$$

식(1)이 성립하면 식(2)의 상대가격비율(RPR)은 '1'이 되며 이 경우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검정 방법

LOP 성립여부를 검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식(1)을 로그 변환하여 다음의 식(3)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하여 그 계수값이 이론적인 값( $\alpha_0=0, \alpha_1=\alpha_2=1$ )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log(P_{i,t}) = \alpha_0 + \alpha_1 \log(S_t) + \alpha_2 \log(P_{i,t}^*) + \epsilon_t \quad (3)$$

이 식은 절대적(absolute) LOP를 검정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수송비, 관세 등으로 인해 절대적(absolute) LOP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형에 수송비, 관세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식(3)을 변형한 검정도 곤란하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식(3)을 이용하거나 이를 변형한 절대적 LOP 검정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각국의 가격이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거나 상대가격비율(RPR)이 정상 시계열(stationary time-series)인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relative)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에 의한 LOP 검정은 Ardeni,<sup>24</sup> Baffes<sup>25</sup> 등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도 동 논문의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공적분 검정의 경우 Engle-Granger<sup>26</sup>가 제안한 방식대로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사용하였다.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에 의한 LOP 검정에서는 각국의 가격이 모두 단위근을 갖는 I(1) 변수이고 북한의 가격과 다른 나라의 가격이 공적분 관계에 있을 경우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단위근 검정을 통해 가격이 모두 I(1)인지 여부를 검정하였으며 두 국가의 가격이 모두 I(1)인 경우 다음 식(4)의 회귀식<sup>27</sup>을 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추정해 얻은 잔차항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잔차항이 정상(stationary) 시계열인 경우 두 가격은 공적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_t = \alpha + \beta p_t^* + \epsilon_t \quad (4)$$

여기에서  $p_t$ 는 북한의 달러표시 가격의 로그값,  $p_t^*$ 는 비교상대국의 달러표시 가격의 로그값,  $\epsilon_t$ 는 잔차항이다.

한편 상대가격비율(RPR)과 잔차항의 정상성(stationary)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DF-GLS, KPSS 검정법 등을 사용하였다.<sup>28</sup> ADF 검정법은 Lopez, Murray, Papell<sup>29</sup>에서와 같이 다음 회귀식을 이용하였다.

<sup>24</sup> P. G. Ardeni, "Does the Law of One Price Really Hold for Commodity Pric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1, No. 3 (1989), pp. 661-669.

<sup>25</sup> J. Baffes, "Some Further Evidence on the Law of One Price: The Law of One Price Still Hol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No. 4 (1991), pp. 1264-1273.

<sup>26</sup> Robert Engle, and Clive W. J.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2 (1987), pp. 251-276.

<sup>27</sup> 식(4)는 두 국가 또는 시장의 가격을 공동통화로 환산한 가격을 이용한 것으로서 식(3)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LOP 검정의 경우에는 Ardeni(1989), Baffes(1991)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4)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LOP 검정이 원래 달러 등 국제통화로 거래되는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제품의 재정거래도 달러 등 국제통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식(4)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sup>28</sup> ADF, DF-GLS, KPSS 검정은 EViews 5.0을 이용하였다.

<sup>29</sup> C. Lopez and C. J. Murray and D. H. Papell, "State of the Art Unit Root Tests and Purchasing Power Parit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7, No. 2 (2005), pp. 361-369.

$$q_t = \alpha + \beta q_{t-1} + \sum_{i=1}^k \psi_i \Delta q_{t-1} + u_t \quad (5)$$

여기에서  $q_t$ 는 상대가격비율(RPR)을 로그 변환한 것이며 시계열 상관을 없애기 위해  $\kappa$ 개의 1차 차분한 시차변수를 포함하였다.

## 2. 환율의 고평가 여부 분석

환율의 고평가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을 이용하였다.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sup>30</sup>은 실질실효환율지수(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dex; REERI)를 이용하여 계산한 환율로서 자국통화와 교역상대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기준시점수준으로 일치시키는 환율을 의미한다.<sup>31</sup> 동 균형환율은 PPP 성립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준시점이나 물가지수를 달리할 경우 균형환율 추이와 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산출과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대외경쟁력의 관점에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장점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통계자료 부족으로 여타 방법의 균형환율 추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식(5)와 같이 명목실효환율지수(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index; NEERI)를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PPPI)로 나누어 REERI를 추정하고 동 지수를 기준시점수준으로 일치시켜 주는 명목환율 즉 균형환율을 추정한다. REERI는 명목변수인 NEERI를 PPPI를 이용해 실질화한 지수이다. NEERI는 식(6)과 같이 교역상대국 환율 변동을 교역가중치로 평균하고 이를 자국 환율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PPPI는 식(7)과 같이 교역상대국 물가 변동을 교역가중치로 평균하고 이를 자국 물가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REERI_t = \frac{NEERI_t}{PPPI_t} \quad (5)$$

$$NEERI_t = \frac{\prod_{i=1}^n [ER_{it} \div ER_{i0}]^{w_{it}}}{[NKER_t \div NKER_o]} \quad (6)$$

<sup>30</sup> 김치호·김승원, 『균형 원화환율의 측정과 평가』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2), pp. 109-120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sup>31</sup> 이 때 균형환율은 REERI에 기준시점의 실제 북한원/미달러 환율을 곱하여 구한다.

$$PPPI_t = \frac{\prod_{i=1}^n [PI_{it} \div PI_{i0}]^{\omega_{it}}}{[NKPI_t \div NKPI_o]} \quad (7)$$

$\omega_{it}$  : 교역상대국(i)의 가중치,  $i=1\dots n$ ,

$ER_t$  :  $i$ 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PI_t$  :  $i$ 국 물가지수

$NKER$  : 북한원화의 대미달러환율  $NKPI$  : 북한 물가지수

하첨자  $t$  및  $o$ 는 비교시점 및 기준시점을 표시함

교역상대국은 북한의 교역비중을 고려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교역비중이 큰 중국, 태국, EU,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가중치는 이들 국가와 북한의 교역이 북한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표 3> 참조). 물가지수는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기준시점은 통상 국내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환율수준이 균형 상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해야 하나 북한의 경우 경제통계 부족 등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준시점을 선정하기 곤란하여 북한이 물가와 환율을 큰 폭으로 올린 2002년 8월로 하였다.

## IV. 분석 결과 및 가격·환율의 특징

### 1. LOP 성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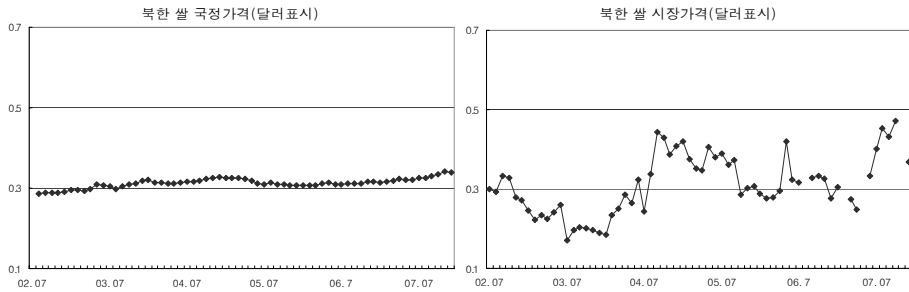
LOP 성립여부에 대한 검정은 북한과 주요국의 쌀 가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쌀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역재인 반면 여타 제품은 가격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여 시계열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sup>32</sup>

북한 쌀 가격의 경우 국정가격은 국정환율로, 시장가격은 시장환율로 환산하였다. 북한 쌀 국정가격은 1kg에 44북한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미달러표시 가격의 변동은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의 변동과 일치한다.

북한 쌀의 미달러표시 시장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이 모두 큰 폭으로 움직인데 따른 것이다.

<sup>32</sup> 여타 제품도 시계열 자료가 확보될 경우 LOP 성립여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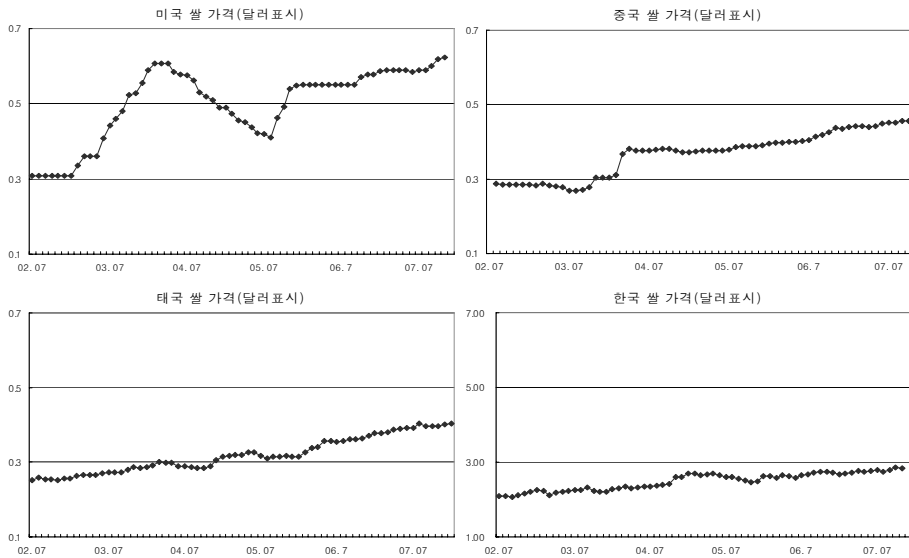
<그림 6> 북한 쌀 가격추이



자료: 국정환율은 독일 Bundesbank, *Ibid*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은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North Korea Today)』 (각호), 데일리엔케이(The Daily NK) 등.

북한 이외의 주요국 쌀 가격 중에서 중국과 태국의 쌀 가격은 북한과 비슷한 1kg당 0.2~0.4달러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나 미국 쌀 가격은 kg당 0.3~0.7달러로 가격수준도 높고 변동 폭도 다소 컸으며 한국 쌀 가격은 kg당 2~3달러로 변동폭은 크지 않았으나 가격수준은 가장 높았다.

<그림 7> 주요국 쌀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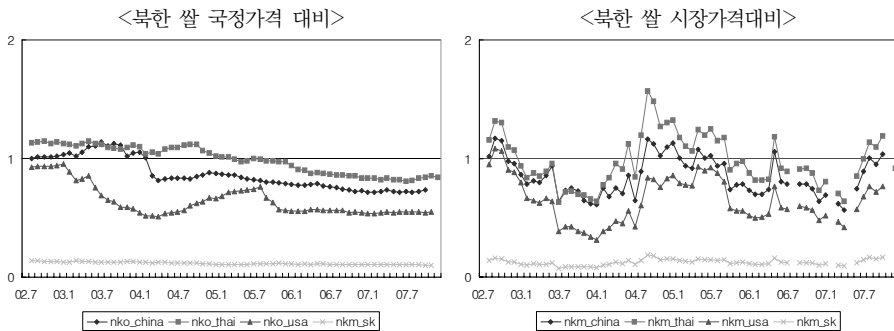


자료: 미국 쌀 가격은 USDA, <<http://www.usda.gov/>> (검색일: 2008.2.21), 나머지 국가의 쌀가격과 환율은 CEIC, *Ibid* (검색일: 2007.3.17).

이들 쌀 가격의 상대가격비율(북한 쌀 가격/여타국 쌀 가격)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1'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북한 쌀 가격이

여타 국가의 쌀 가격에 비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쌀 국정가격을 이용한 상대가격비율(RPR)은 최근 '1'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 쌀 시장가격을 이용한 상대가격비율(RPR)은 중국과 태국 쌀가격과의 상대가격비율(RPR)의 경우 '1'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LOP 성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상대가격비율(북한쌀가격/여타국쌀가격) 추이



상대가격비율(RPR)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 쌀 시장가격과 중국 쌀 가격의 상대가격비율(RPR)에 대한 ADF 및 DF-GLS 검정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각각 10% 및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북한 쌀 시장가격과 중국 쌀 가격에서 LOP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과 미국 쌀 가격은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LOP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쌀의 상대가격비율(RPR)에 대한 단위근 검정통계량

	ADF	DF-GLS		ADF	DF-GLS
북한(국정)/중국	-0.793428	-0.675192	중국/태국	-2.117226	-2.111275**
북한(국정)/태국	-0.519954	0.191879	중국/미국	-2.324672	-1.35442
북한(국정)/미국	-2.511101	-0.68191	태국/미국	-2.482193	-1.41338
북한(시장)/중국	-2.713468*	-2.34228**	북한 국정/시장	-2.032850	-2.09535
북한(시장)/태국	-2.368819	-2.17675**			
북한(시장)/미국	-2.018098	-1.28452			

주: 1) \* 및 \*\* 표시는 각각 10% 및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 기각함을 의미.



또한 북한 쌀 시장가격과 중국 쌀 가격의 LOP 성립 여부를 공적분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위안화로 환산한 북한 쌀 시장가격과 중국 쌀 가격을 이용하여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각 시계열의 I(1) 여부에 대한 검정 결과는 <부표 4> 참조).

<표 6> 북한과 중국 쌀 가격의 공적분 검정통계량

	ADF(H0:unit root)	DF-GLS(H0:unit root)	KPSS(H0:stationary)
Early Xian Rice	-3.509163**	-2.649487*	0.170856
Late Xian Rice	-3.443311**	-2.889461**	0.191082
Rice(Standard)	-3.204877*	-2.722691*	0.182512

주: 1) \*, \*\*, \*\*\* 표시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임.

공적분 검정에 사용한 자료는 북한원/중국원 환율 시계열이 2003년 6월 이전에는 제대로 수집되지 못해 2003년 6월~2007년 12월의 위안화로 환산한 북한 쌀 시장가격과 CEIC에 수록된 세 가지 중국 쌀 가격을 사용하였다. 이들 쌀 가격에 대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쌀 시장가격은 이들 중국 쌀 가격과 공적분 관계가 더욱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들 간에도 쌀 가격의 LOP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쌀 시장가격과 중국 쌀 가격의 LOP가 성립한다는 것으로서 쌀 시장의 경우 북한과 중국시장의 통합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쌀 시장가격에서 LOP가 성립한 것은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듯이 두 국가의 쌀 시장가격이 2004년 상반기에 동반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 반면 다른 나라의 쌀 시장가격은 북한 쌀 시장가격 변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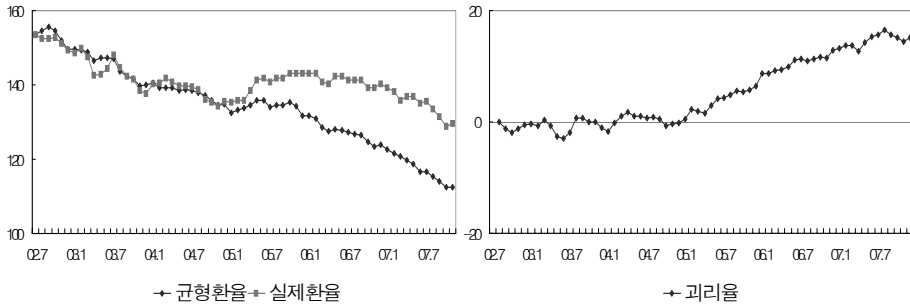
## 2. 환율 고평가 여부

북한환율의 고평가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과 실제환율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을 계산할 때 ‘국정가격과 국정환율’, ‘시장가격과 국정환율’, ‘시장가격과 시장환율’ 등 각기 다른 가격과 환율을 이용하여 균형환율을 계산하여 실제환율과 비교하였다.

## 가.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

실질실효환율(국정가격과 국정환율로 계산)을 이용하여 추정한 균형환율을 국정환율과 비교해 보면 <그림 9>와 같이 2005년 중반 이후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괴리 정도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균형환율 및 괴리율 추정결과(국정가격 및 국정환율 이용)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상반기 이후 북한원/미달러 환율은 균형 환율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북한원화는 저평가). 균형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역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통화는 절상)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없는 북한 국정가격에 비해 여타 국가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형환율에 비해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원/미달러 환율과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2005년 6월까지의 중국 환율이 달러당 8.28위안(원)에 고정되어 있어 균형환율과 실제환율의 괴리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는 중국원이 지속적으로 절상(환율 하락)되고 있어 북한원도 이와 함께 절상(환율은 하락)폭이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원 국정환율의 하락폭은 이에 비해 크지 않았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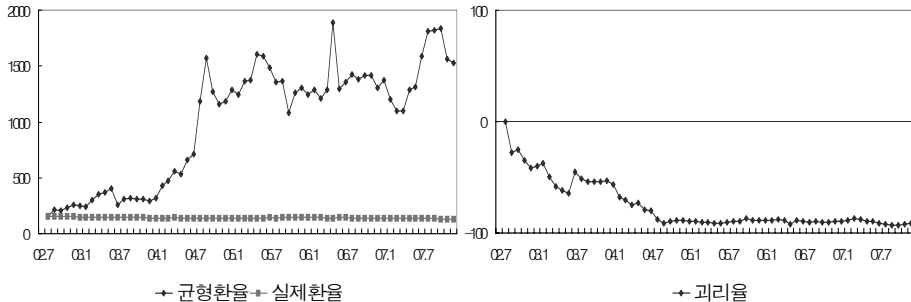
<sup>33</sup>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중국원/미달러 환율은 8.28원에서 7.37원으로 하락하여 12.3% 절상된 반면 북한원/미달러 환율은 141.38북한원에서 129.55북한원으로 하락하여 9.1% 절상되었다.

## 나. 시장가격 및 국정환율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국정가격으로 배급되는 물건은 식량 이외에는 거의 없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은 대부분 시장가격이다. 또한 무역을 담당하거나 장사를 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도 국정가격보다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환율을 계산할 때 국정가격을 이용한 물가지수보다는 시장가격을 이용한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실효환율(시장가격과 국정환율로 계산)을 이용해 북한의 균형환율을 추정<sup>34</sup>하면 <그림 10>과 같이 국정환율은 균형환율과 큰 폭으로 괴리되어 북한원화를 과도하게 고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국정환율은 시장가격 기준의 균형환율에서 크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주민들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국정환율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10> 균형환율 및 괴리율 추정결과(시장가격 및 국정환율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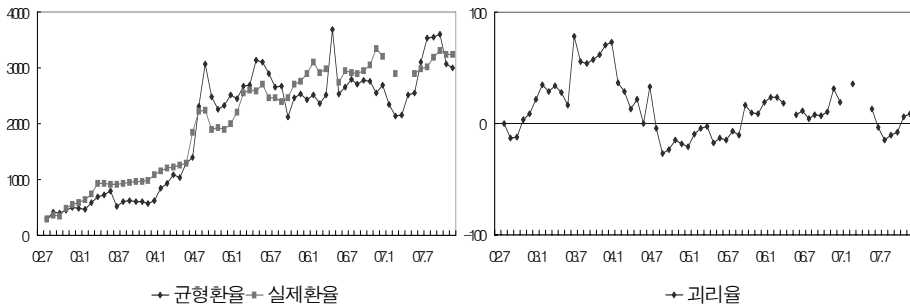
## 다.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

실질실효환율(시장가격과 시장환율로 계산)을 이용한 균형환율을 추정하여 실제환율과 비교한 결과 <그림 11>에서와 같이 시기에 따라 실제환율이 균형환율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균형환율 주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7.1조치 직후에는 균형환율에 비해 실제환율이 빠르게 상승(북한원화는 절하)함에 따라 7.1조치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북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

<sup>34</sup> 시장가격을 대표하는 물가지수의 대용변수로 쌀 가격을 이용하였다.

또는 개인이 북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컸다고 한다.<sup>35</sup> 이러한 환율상승(북한원화는 절하)에 따른 균형환율과 실제환율의 괴리가 2004년 7월경에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에는 대체로 균형환율 주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균형환율 및 괴리율 추정결과(시장가격 및 시장환율 이용)



### 3. 북한 가격 및 환율의 특징

#### 가. 국정가격 및 환율

북한의 쌀 국정가격은 LOP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정가격으로 거래되는 북한의 계획경제부분이 외부 시장과 통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정가격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정부가 국정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LOP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연해 보인다.

한편, 북한의 쌀 국정가격이 여타 국가 쌀 가격에 비해 낮은 것은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감안할 때 적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북한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 것이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및 쌀 가격 변동을 북한 국정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국정가격이 적절하게 결정되거나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7.1조치 당시 북한이 설명한 가격결정원칙의 변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환율도 최근 들어 균형환율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국정환율이 북한을 비롯한 세계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환율이 국정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된 균형환율에 비해 약간 높은 것

<sup>35</sup> 필자가 2005년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계산소에서 장사를 하는 조선족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사실임.

으로 나타나(북한통화 저평가) 북한 경제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국제가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역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환율을 시장가격을 이용해 계산된 균형환율과 비교해 보면 국정환율이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국정환율은 국정가격과 국제가격의 상대가격 변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정환율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계단위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나. 시장가격 및 환율

쌀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 쌀 시장가격은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쌀 시장이 중국과 재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북한 시장가격이 중국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002년 동아일보<sup>36</sup>는 북한 시장가격이 <표 7>과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다른 자료에서도 북한의 시장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중국의 시장상황을 원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표 7> 동아일보가 주장한 중국산 제품의 북한가격 결정방식

제 품 구 분	계 산 방 식	중국가격 대비 북한시장가격
식량, 기름, 천, 담배 등 회전율이 빠른 제품	중국원가 + 상인 이윤율(약 10%) + 무역허가증사용비(5%) + 물류비(2%)	약 1.17배
주요 생필품, 가전제품, 과일, 육류, 약품 등	중국원가 + 상인 이윤율(약 20%) + 무역허가증사용비(5%) + 물류비(2%)	약 1.27배
중고품, 특정 기계, 사치품, 통제품 등	중국원가 + 상인 이윤율(약 30%) + 무역허가증사용비(5%) + 물류비(2%)	약 1.37배

<sup>36</sup> “북 쌀-생필품 등 민생경제 중국에 종속,” 『동아일보』, 2002년 2월 27일.

쌀 이외의 제품도 가격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면 중국 가격과 LOP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해 본 논문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시장환율도 균형환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으며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쌀 가격 변화를 물가상승률로 가정하여 계산된 균형환율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지만 북한에서 쌀 가격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의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은 북한 정부의 부분적인 통제 등으로 원활한 재정거래에 제약이 있어 다른 나라 가격이나 환율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결정되는 가격 및 환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이원화되어 있는 북한의 가격 및 환율은 체제전환 이전의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가격 및 환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은 LOP가 성립하지 않으며 PPP이론에 근거해 계산된 균형환율로 회귀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은 비록 가격 자료가 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자료상의 제약<sup>37</sup>이 있으나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에 회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이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보다 북한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할 뿐 아니라 균형가격 및 환율일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북한경제 관련 분석에서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보다는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북한의 시장가격 및 환율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10월 8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sup>37</sup> 비록 쌀 가격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쌀이 북한의 대표적인 교역재(tradables)인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진옥. “구매력평가설 : 두 국가 대 다 국가 모형.” 『금융학회지』. 제6권 제2호, 2001.
- 김치호·김승원. 『균형 원화환율의 측정과 평가』.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2.
-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3년 하반기호, 2003.
-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금융경제연구』. 236호, 2005.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2006.
- 문성민·김용복. “2개국 평가법에 의한 북한『원』의 구매력평가.” 『한은조사연구』. 2000-13, 2000.
- 문성민·남성욱.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 이영섭. “남북한 통화의 구매력 비교.” 『한국개발연구』. 15권 2호, 1993.
- 이영우. “1990년대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측정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 겨울호, 1999.
- 이원기·이대기.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시산.” 『한은조사연구』. 98-10, 1998.
- 이재량·이병창. “최근의 제조업 업종별 실질실효환율 동향과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229호, 2005.
- 조대우. “일물일가의 법칙과 구매력평가 이론간의 이론적 연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6권 제2호, 1984.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호.
- 하성근. “통화통합과 통화신용정책의 과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7.
- 황의각·장원태. 『남북한 경제·화폐통합론』. 서울: 법문사, 1997.
- Ardeni, P. G. “Does the Law of One Price Really Hold for Commodity Pric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1. No. 3, 1989.
- Baffes, J. “Some Further Evidence on the Law of One Price: The Law of One Price Still Hol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No. 4, 1991.
- Berg, A. and J. Sachs. “Structural Adju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Economic Policy*. No. 14, 1992.
- Choudhry, T. “Purchasing Power Parity in High-Inflat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Evidence from Fractional and Harris-Inder Cointegr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21, 1999.
- Christev, A. and A. Noorbakhsh. “Long-run purchasing power parity,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transition The case of six Central and East European

- countries.” *Global Finance Journal*. 11, 2000.
- Conway, P. “Privatization and Price Convergence: Evidence from Four Markets in Kyiv.”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7:2, 1999.
- Crownover, C., J. Pippenger and D. Steigerwald. “Testing for 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5, 1996.
- Culbertson, W. P. and Ryan C. Amacher. “Inflation in the Planned Economies: Some Estimates for Eastern Europ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5. No. 2, 1978.
- De Masi, P. and V. Koen. “Relative Price Convergence in Russia.” *IMF Staff Papers*. 43:1, 1996.
- Engle, Robert and Clive W. J.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2, 1987.
- Fan C. S. and X. Wei. “The Law of One Price: Evidence from the Transitional Economy of Chin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 Huffman, S. K. and S. R. Johnson. “Empirical tests of impacts of rationing: the case of Poland in transition.” *Economic Systems*. Volume 28. Issue 1, 2004.
- Isard, P. “How Far Can We Push the Law of One Pri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No. 5, 1977.
- Kim P. J. “Monetary Integration and Stabilization in the United Korea.” presented to Korea-German Joint Symposium on the Management of the United Korea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Global Economics and the Juangang-Ilbo. 1997.
- Lopez, C., C. J. Murray, D. H. Papell. “State of the Art Unit Root Tests and Purchasing Power Parit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7. No. 2, 2005.
- Lothian, James R. and Mark P. Taylor. “Real Exchange Rate Behavior: The Recent Flo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st Two Centuri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4. No. 3, 1996.
- Ong, L. L. “Burgernomics: The Economics of the Big Mac Standard.”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6. 6, 1997.
- Pakko, M. R. and P. S. Pollard, Patricia S. “For Here or To Go? Purchasing Power Parity and the Big Mac.”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January/February. 78(1), 1996.
- Pakko, M. R. and P. S. Pollard. “Burgernomics: A Big Mac Guide to Purchasing Power Parity.”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5, 2003.
- Portes R. “The Control of Inflation: Lessons from East European Experience.” *Economica*. 44, 1977.
- Sarno, Lucio. and Mark P. Taylor. “Purchasing Power Parity and the Real Exchange Rate.” *IMF Staff Papers*. Vol. 49, 2002.
- Sideris, D. “Purchasing power parity in economies in transition: evidence from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pplied Financial Economics*. 16, 2006.

Thacker, N. “Does PPP hold in the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Poland Hungary.” *Applied Economics*. 27, 1995.

Wolf, Thomas A. “Exchange Rate Systems and Adjustment in Planned Economies.” *IMF Staff Papers*. Vol. 32. No. 2, 1985.

Wolf, Thomas A. “The Exchange Rate and the Price Level in Socialist Economies.” *IMF Working Paper*. No. 90/50, 1990.

Yang, J., D. A. Bessler. and D. J. Leatham. “The Law of One Pric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Market Integr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2.3, 2000.

Young, A. “The Razor’s Edge: Distortions and Incremental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4, 2000.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데일리엔케이(The Daily NK)』 각년호.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North Korea Today)』 각년호.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동아일보』.

『월간조선』.

<[www.bundesbank.de](http://www.bundesbank.de)>.

<[www.ceicdata.com/](http://www.ceicdata.com/)>.

<<http://ecos.bok.or.kr/>>.

<[www.usda.gov/](http://www.usda.gov/)>.

<부표 1> 7.1조치에 따른 북한 국정가격 변경 내역

품종	품 목	단위	가격(원)		B/A(배)	품종별 평균변화
			변경전(A)	변경후(B)		
곡 물 류	쌀	kg	0.08	44	550	462.5
	옥수수	kg	0.06	24	400	
	콩	kg	0.08	40	500	
	밀가루	kg	0.06	24	400	
육 어 류	돼지고기(생채)	kg	10	110	11	12.2
	돼지고기(지육)	kg	17	170	10	
	닭고기	kg	18	180	10	
	청어	kg	10	100	10	
	말린명태	마리	0.1	2	20	
양 념 류	된장	kg	0.2	17	85	67.2
	간장	kg	0.2	16	80	
	콩기름	kg	4	180	45	
	조미료	kg	5	300	60	
	고추가루	kg	1.5	100	66	
주 류	소주	1ℓ	0.5	43	86	78.7
	맥주	병	0.5	50	100	
	설탕	병	2	100	50	
공 산 품	남자운동화	켤레	3.5	180	51	32.6
	세수비누	개	3	20	7	
	세탁비누	개	0.4	15	38	
	텔레비전	대	350	6000	17	
	페니실린	개	0.4	20	50	
연 료	석탄	ton	34	1500	44	61.0
	전력	1kWh	0.035	2.1	60	
	디젤류	ℓ	40	2800	70	
	휘발류	ℓ	40	2800	70	
공 공 요 금	철도여객(평양↔청진)		17	590	35	27.0
	침대열차(평성↔남양)		50	3000	60	
	시내버스		0.1	2	20	
	지하철요금	구간	0.1	2	20	
	전차요금	회	0.1	1	10	
	유원지입장료		3	50	17	
의 류	겨울내의	벌	25	2000	80	77.5
	남자양복	벌	90	6750	75	
비 식 료 품	월간잡지(조선문학)	권	1.2	35	29	26.7~28.3
	담배	갑	0.35	2	6	
	치솔	개	1.5	15	10	
	베어링	개	2~5	20~100	10~20	
	안경	개	20	600	30	
	화장품	개	10	750	75	
산 술 평 균						84.2~84.4

출처: “노동자 생활비 표준표,”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pp. 108-109 재인용.

<부표 2> (구)사회주의 동구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1955=10)

	Bulgaria (1)	Czecho slovakia (2)	GDR (3)	Hungary (4)	Poland (5)	Rumania (6)	USSR (7)	Yugoslavia (8)
19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956	91.8	97.4	98.7	99.4	99.0	98.2	100.0	108
1957	92.6	95.6	97.9	101.3	105.8	105.3	100.0	111
1958	92.3	95.5	93.5	101.9	109.1	106.8	102.2	117
1959	91.0	93.1	91.6	100.6	110.2	105.3	101.4	118
1960	90.6	91.2	90.5	101.3	112.2	103.0	100.7	130
1961	91.0	90.8	90.7	101.9	113.1	101.4	100.0	140
1962	94.2	91.8	90.9	102.5	115.9	100.5	101.4	155
1963	96.5	92.3	90.9	101.9	117.0	100.5	102.2	163
1964	96.8	92.7	90.2	102.5	118.3	101.8	102.2	182
1965	96.3	93.8	90.7	103.8	119.3	102.1	101.5	246
1966	96.1	94.1	90.7	105.7	120.8	102.1	100.8	302
1967	96.2	95.3	90.6	106.3	122.6	101.7	100.8	323
1968	100.0	96.6	90.8	106.3	124.5	103.0	100.9	339
1969	100.0	100.1	90.6	107.6	126.0	104.0	101.4	366
1970	96.6	101.8	90.5	108.8	127.4	104.1	101.2	405
1971	99.5	101.4	90.8	111.3	128.0	104.9	101.1	467
1972	99.5	101.0	90.5	114.5	128.0	104.9	100.9	544
1973	99.9	101.2	89.6	118.2	131.4	105.5	100.9	649
1974	100.1	101.7	89.2	120.8	140.1	106.6	100.8	787
1975	n.a	102.2	n.a	125.2	144.1	107.3	100.7	984
연평균 증가율(from fitted exponential trends)								
1955-75 <sup>2)</sup>	0.44%	0.41%	-0.41%	0.97%	1.55%	0.20%	0.20%	11.4%

출처: 각국 통계발표와 UN의 1975년 유럽 경제서베이, Portes R, "The Control of Inflation: Lessons from East European Experience," *Economica*, 44 (1977), pp. 109-130 재인용.

주: 1) 열(1), (6), (7)은 소매물가지수(국가 또는 협동조합의 소매 체계에서 판매되는 재화); 열(2), (3), (4), (5), (8)은 소비자물가지수(재화 및 서비스); 열(2), (4)는 임금과 임금 및 월급 생활자에게만 적용되었음.

2) 1955년부터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수를 사용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

<부표 3> 국가별 가중치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중 국	28.4%	36.5%	43.2%	46.2%	47.8%
태 국	8.3%	9.1%	10.3%	9.6%	10.5%
E U	13.4%	12.1%	8.2%	8.5%	6.6%
러시아	3.1%	4.2%	6.7%	6.8%	5.9%
일 본	14.2%	9.5%	7.9%	5.7%	3.4%
한 국	13.2%	14.6%	10.8%	12.3%	15.7%
소계(가중치)	80.5%	86.0%	87.1%	89.1%	90.0%
기 타	19.5%	14.0%	12.9%	10.9%	1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부표 4> 각 변수의 단위근 검정<sup>1)</sup> 결과

	표시 단위	관측치수	원계열			1차 차분계열			
			ADF	DF-GLS	DW	ADF	DF-GLS	DW	
북 한	국정가격	달러	61	-1.71	-1.84*	2.31	-9.08***	-7.45***	2.14
	시장가격	달러	65	-0.55	0.19	1.47	-6.02***	-5.59***	1.93
	시장가격	위안화	54	-2.09	-2.51	2.14	-9.29***	-6.13***	2.10
	중국가격	달러	65	-0.31	0.94	1.54	-6.23***	-6.09***	1.95
	중국가격	위안화	66	-1.37	-0.20	2.36	-9.58***	-9.00***	2.05

주: 1)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단위근 감정을 실시.

2) \*, \*\*, \*\*\* 표시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

<부표 5> 북한원/유로 「국정환율」 추이

(북한원/유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0.88	1월	158.20	1월	173.40	1월	175.48	1월	169.40	1월	181.50
2월	0.88	2월	160.20	2월	173.25	2월	178.55	2월	170.40	2월	182.55
3월	0.88	3월	158.65	3월	171.50	3월	176.53	3월	173.40	3월	183.55
4월	0.90	4월	158.65	4월	167.93	4월	176.53	4월	176.50	4월	185.55
5월	0.92	5월	167.18	5월	170.46	5월	174.48	5월	179.48	5월	184.55
6월	0.94	6월	166.73	6월	170.45	6월	171.40	6월	180.45	6월	184.55
7월	0.98	7월	165.30	7월	169.40	7월	171.40	7월	179.55	7월	186.55
8월	149.50	8월	160.70	8월	169.40	8월	172.40	8월	180.55	8월	185.55
9월	148.50	9월	164.80	9월	170.28	9월	171.40	9월	180.55	9월	187.55
10월	147.50	10월	167.20	10월	173.58	10월	171.40	10월	180.45	10월	189.55
11월	154.25	11월	168.50	11월	180.63	11월	169.40	11월	182.55	11월	191.80
12월	155.70	12월	172.45	12월	181.63	12월	169.40	12월	182.55	12월	190.80

자료: Bundesbank, 『Exchange rate statistics』, <www.bundesbank.de> (각월호).

<부표 6> 북한원/미달러 「국정환율」 추이

(북한원/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2.21	1월	149.25	1월	137.55	1월	135.48	1월	143.05	1월	140.20
2월	2.21	2월	148.60	2월	140.25	2월	135.45	2월	143.15	2월	139.35
3월	2.21	3월	149.85	3월	140.55	3월	135.73	3월	143.05	3월	138.15
4월	2.21	4월	147.60	4월	141.75	4월	135.75	4월	140.85	4월	135.95
5월	2.21	5월	142.53	5월	140.74	5월	138.38	5월	140.25	5월	136.95
6월	2.21	6월	142.85	6월	139.85	6월	141.38	6월	142.33	6월	136.95
7월	2.21	7월	144.40	7월	139.70	7월	141.85	7월	142.25	7월	134.95
8월	153.50	8월	148.05	8월	139.53	8월	140.68	8월	141.28	8월	135.65
9월	152.50	9월	144.55	9월	138.67	9월	141.85	9월	141.28	9월	133.60
10월	152.50	10월	142.35	10월	136.15	10월	141.85	10월	141.35	10월	131.30
11월	152.75	11월	141.65	11월	135.45	11월	143.05	11월	139.15	11월	128.85
12월	151.25	12월	138.45	12월	134.25	12월	143.05	12월	139.20	12월	129.55

자료: Bundesbank, 『Exchange rate statistics』, <www.bundesbank.de> (각월호).

## Abstract

# An Empirical Analysis on North Korean Prices and Exchange Rates: Employing th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Sung-Min M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rices and exchange rates by employing the law of one price (LOP) and the purchasing power parity (PPP) theory.

This paper tests whether the LOP holds for rice prices in North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China etc), and examines whether North Korean exchange rates are overestimated by using the PPP theory. For the analysis, I use the time series data on ‘official prices and exchange rates’ and ‘market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North Korea after the ‘7.1 Measures (July, 2002).’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OP does not hold for North Korean ‘official rice prices,’ and ‘official exchange rates’ do not have tendencies to revert to the equilibrium exchange rates which are calculated based on the PPP theory. In contrast, the LOP holds for North Korean ‘market prices’ when tested for rice prices. In addition, ‘market exchange rates’ have tendencies to revert to the equilibrium exchange rate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PPP theory. These findings illustrate that North Korean ‘official prices and exchange rates’ seem not to reflect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 sufficiently, whereas North Korean ‘market prices and exchange rates’ do so to a certain extent.

In this regard, for the more accurate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t may be desirable to use North Korean ‘market prices and exchange rates’ rather than ‘official prices and exchange rates.’

**Key Words:** North Korea, prices, exchange rates, law of one price, purchasing power parity, equilibrium exchange rate



#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유 시 은\*\* · 엄 진 섭\*\*\* · 윤 덕 룡\*\*\*\* · 전 우 택†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7년 이상 남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1년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직장유형, 건강상태, 남한교육여부,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을 조사하였다. 이 중 2001, 2004, 2007년 추적 연구에 모두 참여한 106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7년 추적연구 결과 탈북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직업유형 변화는 정규직, 자영업이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직업유형 변화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으로의 취업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북한

학력이 대학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소득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자 보다 2004, 2007년에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입국 초기인 2001년에는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4, 2007년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경험은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탈북자의 소득 수준에는 남성일수록,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소득, 패널 연구

\* 이 논문은 2007년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PI-08-001-B0814001).  
\*\*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수료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세의대 정신과학/의학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 12월말까지 총 12,254명이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였다.<sup>1</sup>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 증가에 따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은 남성·성인·단독세대의 소규모 입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80% 이상의 여성 입국자와 가족 동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은 초기 정착 단계 뿐 아니라 정착 기간이 늘어나도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되었던 연구들은 횡단면적인 실태 분석<sup>3</sup>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성 제고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횡단면적인 남한사회 적응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응 궤적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 연구로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sup>4</sup>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적응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소득 수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집단

<sup>1</sup> 통일부, 『2008 통일백서』 (2008), p. 228.

<sup>2</sup>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과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pp. 169-220; 윤덕룡,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보호경찰관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2000), pp. 65-92;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1999), pp. 511-549;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선한승·강일규·김영운·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화순,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sup>3</sup>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미석, 성향숙,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제17권 (2000), pp. 3-74.

<sup>4</sup>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기영, “북한출신 남한 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p. 128;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의 특성상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주택보유율, 자산보유액 등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적응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수준은 이민 사회에서 이민자의 적응 정도와 경제적 동화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이다.<sup>5</sup>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엄홍석 등<sup>6</sup>은 탈북자 경제활동 동향을 취업, 실업, 소득을 중심으로 3차례 추적 연구하여 남한 주민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남한주민과의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3차 조사시 응답자 누락률이 증가하면서 일치율이 낮은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되어 코호트 조사로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윤인진<sup>7</sup>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건강문제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지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로 정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계층 변수 등을 통제한 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생계비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령, 성별, 거주기간, 직업 및 학력 배경, 취업 여부 등이 있었다. 또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생계비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윤인진의 연구 결과는 응답자 8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응을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창권<sup>8</sup>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sup>9</sup>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일수록,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교육훈련이 취약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취업결정요인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언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적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up>5</sup> 이성우·민성희·최영찬, “소득 수준의 변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동화과정 연구,” 『지역사회문제연구』, 제26집 2호 (2001), pp. 64-65.

<sup>6</sup> 엄홍석·윤여상·허선형, 『200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실업·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sup>7</sup>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집 (2007), pp. 65-96.

<sup>8</sup>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제25권 2호 (2007), pp. 15-39.

<sup>9</sup> 김창권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결정요인을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측면 그리고 정책·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즉,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자와 실업자로 양분하여 이에 고용 결정요인으로 노동의 공급측면인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족형태 및 크기)과 인적자본 특성(남북한에서의 교육 및 직업 경험, 교육기간, 직업훈련 이수, 교육 효율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응 연구<sup>10</sup>가 많았으나 횡단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한 것이며, 년차별 정부 조사자료<sup>11</sup>를 살펴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응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영향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와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에 근거하여 7년간 추적연구하였다. 또한 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sup>12</sup>과 2004년<sup>13</sup>에 실시한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의 3차 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도와 2004년 연구에 참여했던 151명 중 3차 추적 조사에 성공한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연구 대상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 200명은 2000년 3월까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553명 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sup>10</sup> 윤덕용·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9), pp. 169-220; 선한승·강일규·김영운·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손영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sup>11</sup> 1998년 통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36%이었으며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80.8%라고 보고. 2001년 통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한 721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2001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북한이탈이주민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평균 98만원으로, 일반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수준으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였음.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소득에 관해 응답한 688명 중 45.6%가 평균 51만원~100만원, 41.3%가 5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음. 그중 95.4%의 응답자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었음.

<sup>12</sup>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pp. 155-208.

<sup>13</sup>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내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제1호 (2004), pp. 93-104; 유시은·전우택·홍창형·조영아·엄진섭,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1호 (2005), pp. 73-105; 윤덕룡, “경제적 적응상황분석과 대책,”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467-491.

2004년 2차 면담조사는 200명중 185명의 연락처가 파악되었다. 이중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15명,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8명, 해외어학연수자 1명, 구치소 수감자 1명, 응답 거부 9명을 제외하고 15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7년 3차 면담조사는 200명중 150명의 연락처가 파악되었다. 이중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6명, 여행이나 사업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12명, 해외 유학생이 2명, 국내 및 해외 수감자 2명, 북한 강제송환자 1명, 거부 6명을 제외하고 1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1, 2004, 2007년 3차 추적연구에 모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106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전체 106명중 남자는 62명(58.5%), 여자는 44명(41.5%)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0명(9.4%), 30대 42명(39.6%), 40대 30명(28.3%), 50대 이상(22.6%)이었다.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67명(63.2%),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졸업이 15명(14.2%), 대학교 졸업 이상이 24명(22.6%)이었다. 남한에서 정규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명으로 전체의 44.3%였고 전체의 67.9%인 72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북한에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61명(57.5%), 현재 결혼한 사람이 69명(65.1%)이었다. 배우자, 이성, 혹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83명(78.3%)이며,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23명으로 21.7%였다. 남한 내 평균 거주 기간은 95.57개월로 최소 81개월에서 최대 112개월이었다.

## 2. 연구 절차

정부기관 및 신변보호관,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1차 연구 200명, 2차 연구 151명, 3차 연구 121명이 최종적으로 설문하였다.

면담 조사는 1차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 2차 2004년 2월 9일부터 3월 4일, 3차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8일에 실시되었다. 피면담자의 설문 내용 이해도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5명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2001년, 2004년, 2007년 설문 예비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자원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조사 진행은 연구자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조사는 지역 단위별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5~30명 단위로 소집하여 면담자가 직접 질문하고 응답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면담자

가 개인사정으로 사회복지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연구자가 연락하여 개별 설문하였다.

### 3. 연구 설문

본 연구의 설문은 응답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면담자가 질문하고 직접 기록하였다. 설문 내용은 취업 여부 및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남한 교육 경험 여부, 북한 교육 정도, 노동당 및 군복무 경험, 인구사회학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2004, 2007년 설문 내용은 2001년도 연구에 사용했던 설문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의 적응 실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4. 주요 변수 및 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7년간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 변수는 응답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다. 독립 변수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기간을 노동특성으로 취업 여부, 직업 유형을 북한인적자본 요인으로 북한 학력, 당원 여부, 군복무 경험을 건강요인으로는 질병 유무, 진료 및 입원 경험을 남한 교육요인으로는 정규교육 경험, 취업관련 교육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변량분석과 t 검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의 소득 수준 분포는 정적 편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모수통계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인 정규분포의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분석방법과 더불어 분포적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통계를 함께 적용하였다. 변량분석에 대응되는 비모수검증으로는 Kruskal-Wallis  $\chi^2$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측정변량 분석에 대응되는 비모수검증으로는 Friedman  $\chi^2$  검증을 사용하였고, t 검증에 대응되는 비모수검증으로는 Mann-Whitney z 검증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징

2001년, 2004년, 2007년 3차 패널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중다 전망적 패널 설계에 의해 수집된 본 조사 자료는 2001년에 200명이 1차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2차와 3차 조사시 표본 탈락률이 발생하여 3차례 조사에 모두 참여한 피면담자는 106명이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 분		2001년 전체 조사대상자 (n=200)	2001년(1차) 추적조사대상자 (n=106)	2004년(2차) 추적조사대상자 (n=106)	2007년(3차) 추적조사대상자 (n=106)
성별	남	117 (58.5)	62 (58.5)	62 (58.5)	62 (58.5)
	여	83 (41.5)	44 (41.5)	44 (41.5)	44 (41.5)
연령	30세 미만	66 (33.0)	38 (35.8)	21 (19.8)	10 ( 9.4)
	30-39세	77 (38.5)	33 (31.1)	43 (40.6)	42 (39.6)
	40-49세	35 (17.5)	20 (18.9)	22 (20.8)	30 (28.3)
	50세 이상	22 (11.0)	15 (14.2)	20 (18.9)	24 (22.6)
종교	개신교	151 (75.5)	73 (68.9)	76 (71.7)	57 (53.8)
	천주교	3 (1.5)	-	1 (0.9)	2 (1.9)
	불교	2 (1.0)	-	-	1 (0.9)
	기타	1 (0.5)	-	-	-
	종교없음	43 (21.5)	33 (31.1)	29 (27.4)	46 (43.4)
북한 학력	고등중학교	126 (63.0)	65 (61.3)	65 (61.3)	65 (61.3)
	전문학교/단과대학	30 (15.0)	17 (16.0)	17 (16.0)	17 (16.0)
	대학 이상	44 (22.0)	24 (22.6)	24 (22.6)	24 (22.6)
당원 여부	노동당원	- <sup>1)</sup>	36 (34.0)	36 (34.0)	36 (34.0)
	아님	-	70 (66.0)	70 (66.0)	70 (66.0)
군복무 경험	경험있음	- <sup>2)</sup>	40 (37.7)	40 (37.7)	40 (37.7)
	경험없음	-	66 (62.3)	66 (62.3)	66 (62.3)
전 체		200 (100.)	106 (100.)	106 (100.)	106 (100.)

주: 1), 2) 2001년 조사에서는 당원여부와 군복무 경험을 질문하지 않았음.

2001년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17명(58.5%), 여자 83명(41.5%)이었고, 2007년도 추적조사에 성공한 1차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2명(58.5%), 여자 44명(41.5%)으로 성비가 동일하였다. 2001년도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세 미만 66명(33.0%), 30~39세 77명(38.5%), 40~49세 35명(17.5%), 50세 이상 22명(11.0%)이었다. 2007년도 추적조사에 참여한 106명의 피면담자를 기준으로 하여 1차 조사시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38명(35.8%), 30~39세 33명(31.1%), 40~49세 20명(18.9%), 50세 이상 15명(14.2%)이었다. 2007년 조사시 피면담자의 연령은 30세 미만 10명(9.4%), 30~39세 42명(39.6%), 40~49세 30명(28.3%), 50세 이상 24명(22.6%)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개신교 151명(75.5%), 천주교 3명(1.5%), 불교 2명(1.0%), 기타 1(0.5%), 없음 43명(21.5%)이었으며, 2007년도 추적조사에 성공한 1차 피면담자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73명(68.9%), 없음 33명(31.1%)으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조사 성공률이 다소 높았다. 2007년도 추적조사에 응한 피면담자의 종교는 개신교 57명(53.8%), 천주교 2명(1.9%), 불교 1명(0.9%), 없음 46명(43.4%)이었다.

2001년도 조사대상자의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126명(63.0%),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30명(15.0%), 대학 이상 44명(22.0%)이었다. 3차례의 추적조사에 모두 참여한 피면담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65명(61.3%),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17명(16.0%), 대학 이상 24명(22.6%)으로 1차 조사시 분포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1년도 조사대상자 200명과 추적조사에 성공한 10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세 조사 시점에 따른 소득 수준은 2001년도 조사대상자 200명의 일반적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경제적 적응 변화

### 가. 소득 수준

응답자 전체의 소득 수준 변화를 <표 2>에 제시하였다. 2001년 피면담자의 평균 소득은 50.25<sup>14</sup>이었으며 2004년 94.91, 2007년 140.19로 나타남으로써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16.914$ ).

<sup>14</sup> 이하 모든 소득 수준 단위는 만원임.

<표 2> 평균 소득 수준 변화

(단위: 만원)

조사대상자 전체	2001년 N=106	2004년 N=106	2007년 N=106	F	Friedman $\chi^2$
Mean	50.25 <sup>a</sup>	94.91 <sup>b</sup>	140.19 <sup>c</sup>	16.914***	38.404***
Median	0.00	65.00	120.00		
S.D.	66.547	167.022	193.227		
Minimum	0	0	0		
Maximum	250	1500	1500		

abc: LSD 쌍비교결과 모든 조사 시점 간 평균차이가 유의함.

\*\*\* p<.001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평균 소득 수준 변화를 <표 3>에 제시하였다. 2001년 취업자 45명의 평균 소득은 118.36이며 2004년 취업자 61명의 평균 소득은 164.92, 2007년 72명의 평균 소득은 206.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자들의 소득 수준 결과를 2007년 남한 주민 근로자 가구주 평균 소득 250.94와 비교하면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82.24%이다.

<표 3> 응답자 중 취업자의 평균 소득 변화

(단위: 만원)

조사대상자 중 유직업자	2001년 N=45	2004년 N=61	2007년 N=72
Mean	118.36	164.92	206.39
Median	100.00	130.00	155.00
S.D.	48.203	192.561	203.373
Minimum	25	0	35
Maximum	250	1500	1500

응답자 중 취업자들의 평균 소득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표 4>, 2001년 조사에 서는 50만원 이하는 4명(8.9%), 51~100만원은 19명(42.2%)으로 저소득층이 과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101~150만원은 14명(31.1%), 151~200만원은 6명(13.3%), 201~250만원은 2명(4.4%)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51~100만원 소득자(24.6%)가 2001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151~200만원 소득자 가 27.9%로 증가하였다. 또한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4명(6.6%) 발생하면서 양극 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100만원 이하 소득자(20.9%) 가 감소



하면서 201~250만원(9.7%), 251~300만원(9.7%) 소득자는 증가하였다. 2001년  
에 비하여 2007년 취업자의 소득 수준은 저소득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4> 응답자 중 취업자의 평균 소득 분포

(단위: 만원)

구분	2001년 N=106(%)	2004년 N=106(%)	2007년 N=106(%)
0~50	4 ( 8.9%)	7 (11.5%)	3 ( 4.2%)
51~100	19 (42.2%)	15 (24.6%)	12 (16.7%)
101~150	14 (31.1%)	17 (27.9%)	21 (29.2%)
151~200	6 (13.3%)	17 (27.9%)	16 (22.2%)
201~250	2 ( 4.4%)	-	7 ( 9.7%)
251~300	-	1 ( 1.6%)	7 ( 9.7%)
301 이상	-	4 ( 6.6%)	6 ( 8.3%)
전체	45 (100.0%)	61 (100.0%)	72 (100.0%)
직업 없음	61	45	34

## 나. 직업 유형

3차 추적 연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유형별 변화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직업유형은 응답자의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응답자의  
경제 적응 유형을 시사하는 예표이다.

<표 5> 직업유형별 분포 변화

구분	2001년 N=106(%)	2004년 N=106(%)	2007년 N=106(%)
정규직	28 (26.4%)	27 (25.5%)	37 (34.9%)
계약직	12 (11.3%)	24 (22.6%)	19 (17.9%)
자영업	5 ( 4.7%)	10 ( 9.4%)	16 (15.1%)
없 음	61 (57.5%)	45 (42.5%)	34 (32.1%)
전 체	106 (100.%)	106 (100.%)	106 (100.%)

2001년과 2004년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에 대한 McNemar 검증 결과: p=.031  
2001년과 2007년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에 대한 McNemar 검증 결과: p=.008  
2004년과 2007년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에 대한 McNemar 검증 결과: p=.328

2001년 응답자의 직업유형 분포는 정규직 28명(26.4%), 계약직 12명(11.3%), 자영업 5명(4.7%), 없음 61명(57.5%)이었다. 2004년은 정규직 27명(25.5%), 계약직 24명(22.6%), 자영업 10명(9.4%), 없음 45명(42.5%)으로 2001년에 비하여 계약직과 자영업 종사율이 상승하였다. 2007년 직업유형 분포는 정규직 37명(34.9%), 계약직 19명(17.9%), 자영업 16명(15.1%), 없음 34명(32.1%)으로 2001년에 비하여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 종사율이 상승한 반면, 실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직업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에 종사자는 2001년 28명(26.4%), 2004년 27명(25.5%), 2007년 37명(34.9%)으로 증가하였다. 계약직에 종사자는 2001년 12명(11.3%), 2004년 24명(22.6%), 2007년 19명(17.9%)으로 2차 조사에서는 증가하다가 3차에서는 감소하였다. 자영업종사자는 2001년 5명(4.7%), 2004년 10명(9.4%), 2007년 16명(15.1%)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피면담자들은 2001년 61명(57.5%), 2004년 45명(42.5%), 2007년 34명(32.1%)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실업자는 더욱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 다. 직업유형에 따른 소득 수준

직업유형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표 6>, 2001년 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125.93, 계약직은 89.58, 자영업 145.00이었다. 그중 정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는 계약직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F=3.636$ ). 2004년 직업유형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145.74, 계약직 103.13, 자영업 365.00이었으며 자영업이 정규직과 계약직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F=8.448$ ). 2007년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87.70, 계약직 120.53, 자영업 351.56으로 자영업이 정규직과 계약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6.913$ ).

<표 6> 직업유형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 차이

(단위 : 만원)

	직업	N	Mean	S.D.	F	Kruskal Wallis $\chi^2$
2001년	정규직	28	125.93 <sup>ab</sup>	43.09	3.636*	5.711 <sup>†</sup>
	계약직	12	89.58 <sup>b</sup>	35.70		
	자영업	5	145.00 <sup>a</sup>	75.83		
2004년	정규직	27	145.74 <sup>b</sup>	51.75	8.448***	17.064***
	계약직	24	103.13 <sup>b</sup>	50.21		
	자영업	10	365.00 <sup>a</sup>	421.01		
2007년	정규직	37	187.70 <sup>b</sup>	77.06	6.913**	14.577***
	계약직	19	120.53 <sup>b</sup>	65.95		
	자영업	16	351.56 <sup>a</sup>	378.98		

ab 같은 첨자가 있는 집단의 평균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냄(Tukey HSD 검증).

† p<.10, \* p<.05, \*\* p<.01, \*\*\* p<.001

### 3. 인구학적 변인과 경제적 적응 변화

#### 가. 성별과 소득 수준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을 취업자 집단과 전체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취업자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표 7>, 2001년 남성 취업자 집단의 평균 소득이 128.63, 여성 취업자 집단이 93.03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t=2.355). 2004년은 남성 취업자 집단의 평균 소득 수준이 187.02, 여성 취업자 집단이 116.05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많았다. 2007년 남성 취업자 집단의 평균 소득이 239.36이며 여성은 144.40로 2001년, 2004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 취업자 집단이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t=1.922).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01년에는 남성의 평균 소득이 66.39, 여성은 27.5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082). 2004년에도 남성의 평균 소득은 126.69, 여성은 50.11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t=2.377). 2007년에도 남성의 평균 소득이 181.45, 여성이 82.05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t=2.686).

<표 7> 성별과 소득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성별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남자	32	128.63	47.36	2.355*	-2.234*
		여자	13	93.08	41.86		
	2004	남자	42	187.02	223.96	1.342	-2.299*
		여자	19	116.05	75.42		
	2007	남자	47	239.36	240.67	1.922†	-2.590**
		여자	25	144.40	72.20		
전체 평균소득	2001	남자	62	66.39	73.07	3.082**	-2.778**
		여자	44	27.50	48.31		
	2004	남자	62	126.69	203.67	2.377*	-3.144**
		여자	44	50.11	75.91		
	2007	남자	62	181.45	233.15	2.686**	-3.115**
		여자	44	82.05	90.25		
수입변화	남자	62	19.18	39.23	1.611	-1.162	
	여자	44	9.09	16.04			

† p<.10, \*p<.05, \*\*p<.01, \*\*\*p<.001

### 나. 성별과 직업유형

성별에 따른 직업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표 8>, 2001년도 남성은 정규직 30.6%(19명), 계약직 12.9%(8명), 자영업 8.1%(5명), 없음 48.4%(30명)의 분포를 보였다. 여성은 정규직 20.5%(9명), 계약직 9.1%(4명), 자영업 0%(0명), 없음 70.5%(31명)로 남성이 여성 보다 정규직 분포가 많았다( $\chi^2=7.068$ ). 2004년에는 남성은 정규직 29%(18명), 계약직 24.2%(15명), 자영업 14.5%(9명), 없음 32.3%(20명)로 여성의 정규직 20.5%(9명), 계약직 20.5%(9명), 자영업 2.3%(1명), 없음 56.8%(25명)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직업 안정성을 보였다( $\chi^2=8.648$ ). 특징적인 것은 2004년 여성의 계약직이 2001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무직 여성이 2001년 70.5%에서 2004년 56.8%로 감소하였다. 2007년 성별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정규직 35.5%(22명), 계약직 19.4%(12명), 자영업 21.0%(13명), 없음 24.2%(15명)이며 여성은 정규직 34.1%(15명), 계약직 15.9%(7명), 자영업 6.8%(3명), 없음 43.2%(19명) 분포를 보였다. 2007년 성별 직업유형의 특징은 자영업을 제외하고 남녀 직업 유형이 양성 평등화 현상

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직업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chi^2=6.491$ ).

성별에 따른 고용율을 살펴보면 <표 8>, 2001년 남성 취업자가 32명(51.6%), 여성 취업자가 13명(2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고용율을 보였다( $\chi^2=5.314$ ). 2004년은 남성 42명(67.7%), 여성 19명(43.2%)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남녀 모두 고용율이 상승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6.354$ ). 2007년 또한 남성 취업자 47명(75.8%), 여성 취업자 25명(56.8%)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고용율( $\chi^2=4.259$ )을 보였으며 2004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취업 의사가 없는 학생 또는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실업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성별과 직업유형

년도	성별	직업유형				전체	$\chi^2$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	없음		
2001	남자	19 (30.6)	8 (12.9)	5 (8.1)	30 (48.4)	62 (100.0)	7.068†
	여자	9 (20.5)	4 (9.1)	0 (.0)	31 (70.5)	44 (100.0)	
	전체	28 (6.4)	12 (11.3)	5 (4.7)	61 (57.5)	106 (100.0)	
2004	남자	18 (29.0)	15 (24.2)	9 (14.5)	20 (32.3)	62 (100.0)	8.648*
	여자	9 (20.5)	9 (20.5)	1 (2.3)	25 (56.8)	44 (100.0)	
	전체	27 (25.5)	24 (22.6)	10 (9.4)	45 (42.5)	106 (100.0)	
2007	남자	22 (35.5)	12 (19.4)	13 (21.0)	15 (24.2)	62 (100.0)	6.491†
	여자	15 (34.1)	7 (15.9)	3 (6.8)	19 (43.2)	44 (100.0)	
	전체	37 (34.9)	19 (17.9)	16 (15.1)	34 (32.1)	106 (100.0)	

† p<.10, \*p<.05

2001년 성별과 직업유무에 대한 독립성검증결과:  $\chi^2=5.314$ , p<.05

2004년 성별과 직업유무에 대한 독립성검증결과:  $\chi^2=6.354$ , p<.05

2007년 성별과 직업유무에 대한 독립성검증결과:  $\chi^2=4.259$ , p<.05

#### 다. 연령과 소득 수준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 변화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령과 취업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0대(132.06)가 40대(118.27)와 50대 이상(107.50) 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4년 연령과 취업자의

소득 수준도 30대(223.50)가 40대(155.00)와 30대 미만(142.00)보다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007년 연령과 취업자의 소득 수준 역시 30대(247.04)가 30대 미만(223.04)과 40대(151.43)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9> 연령과 소득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연령	N	Mean	S.D.	F	Kruskal-Wallis $\chi^2$	
취업자 평균소득	2001	30세 미만	11	103.18	43.37	.918	1.704
		30~39세	17	132.06	57.85		
		40~49세	11	118.27	41.53		
		50세 이상	6	107.50	35.18		
	2004	30세 미만	15	142.00	54.14	1.059	2.961
		30~39세	20	223.50	317.95		
		40~49세	14	155.00	93.40		
		50세 이상	12	107.50	54.08		
	2007	30세 미만	23	223.48	109.54	1.294	7.269
		30~39세	27	247.04	306.96		
		40~49세	14	151.43	59.04		
		50세 이상	8	116.25	51.88		
전체 평균소득	2001	30세 미만	38	29.87	52.51	2.461	6.353
		30~39세	33	68.03	78.52		
		40~49세	20	65.05	67.47		
		50세 이상	15	43.00	58.43		
	2004	30세 미만	38	56.05	77.83	1.408	4.914
		30~39세	33	135.45	268.93		
		40~49세	20	108.50	106.20		
		50세 이상	15	86.00	65.42		
	2007	30세 미만	38	135.26	139.24	2.243	6.094
		30~39세	33	202.12	293.12		
		40~49세	20	106.00	86.34		
		50세 이상	15	62.00	70.35		
수입변화	30세 미만	38	17.57	24.81	1.821	5.327	
	30~39세	33	22.35	47.02			
	40~49세	20	6.83	16.81			
	50세 이상	15	3.17	15.11			

연령별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30대(68.03)가 40대(65.05)와 50대 이상(43.00)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2004년에도 30대(135.45)가 40대(108.50)와 50대 이상(86.00)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07년 연령별 전체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30대(202.12)가 30대 미만(135.26)과 40대(106.00)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2001, 2004, 2007년 공통적인 사항은 30대가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2007년에는 30대 미만 소득이 40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1, 2004, 2007년 연령별 전체 평균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나 남한 사회 정착이 장기화 되면서 30대와 40대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 4.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 가. 질병 유무와 소득 수준

질병 유무에 따라 응답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0>. 질병 유무는 조사 시점별 1년 이내에 응답자가 만성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질병에 관한 질문은 2001년을 제외하고 2004년, 2007년 2차례 응답을 받았다.

<표 10> 질병 유무와 소득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질병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4	있음	29	147.41	105.39	-.673	-.602
		없음	32	180.78	247.36		
	2007	있음	21	127.38	61.25	-2.170*	-3.240***
		없음	51	238.92	231.37		
전체 평균소득	2004	있음	45	95.00	110.27	.005	-.724
		없음	61	94.84	199.75		
	2007	있음	31	86.29	78.52	-1.868†	-1.866†
		없음	75	162.47	220.81		
수입변화	있음	31	6.64	17.81	-1.744†	-1.514	
	없음	75	18.44	35.83			

† p<.10, \*p<.05, \*\*p<.01, \*\*\*p<.001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살펴본 결과, 2004년 질병이 있는 집단(147.41)이 없는 집단(180.78)보다 소득이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질병이 있는 집단(127.38)이 없는 집단(238.92)보다 유의한 차이로 소득이 적었다( $t=-2.170$ ). 또한 Mann-Whitney Test로 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07년에 질병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소득이 많았다( $z=-3.240$ ).

전체 대상자의 질병 여부와 평균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질병이 있는 집단(95.00)과 질병이 없는 집단(94.84)의 소득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질병이 있는 집단(86.29)이 질병이 없는 사람(162.47)보다 소득이 유의하게 적었다( $t=-1.868$ ). 즉, 2001, 2004년에는 질병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2007년에는 질병이 없는 집단이 질병이 있는 집단보다 소득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 나. 입원 경험과 소득 수준

응답자의 입원 경험과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1>. 입원 경험에 관한 질문 또한 질병 여부와 마찬가지로 2001년을 제외하고 2004년, 2007년 2차례만 응답을 받았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원 경험 여부와 소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 입원 경험자(151.00)와 무경험자(167.65)의 소득 수준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입원 경험자(140.83)가 무경험자(212.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았다.

<표 11> 입원경험과 소득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입원경험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4	있음	10	151.00	86.85	-.248	-.117
		없음	51	167.65	207.59		
	2007	있음	6	140.83	93.72	-.823	-1.072
		없음	66	212.35	209.93		
전체 평균소득	2004	있음	19	79.47	98.85	-.443	-.336
		없음	87	98.28	178.75		
	2007	있음	17	49.71	86.94	-2.143*	-3.036**
		없음	89	157.47	203.20		
수입변화	있음	17	.83	15.03	-2.019*	-2.815**	
	없음	89	17.69	33.69			

\*  $p<.05$ , \*\*  $p<.01$



전체 대상자의 입원 경험과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2004년 입원 경험자(79.47)가 무경험자(98.28)보다 소득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입원 경험자(49.71)가 무경험자(157.47)보다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2.143$ ). 2007년 Mann-Whitney Test로 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입원 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z=-3.036$ ).

## 5. 남한 인적 자본과 소득 수준

### 가. 남한 정규교육 여부와 소득 수준

남한 정규교육 경험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12>. 남한 정규교육 여부는 7년 추적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하여 통계 분석한 것이다. 우선 취업자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정규교육 경험자(120.83)와 무경험자(117.45)의 소득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4년에는 정규교육 경험자(130.29)가 무경험자(178.30)보다 낮은 소득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2007년에도 정규교육 경험자(195.34)가 무경험자(213.84)에 비하여 적은 소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규 교육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정규교육 경험자의 교육시간 할애로 인하여 노동 시간과 여건이 제한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대상자의 평균 소득과 정규학교 경험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 정규교육 경험자(31.52)가 비경험자(64.60)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2.605$ ). 2004년에도 정규교육 경험자(48.15)가 비경험자(130.75)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소득을 보였다( $t=2.591$ ). 2007년에는 정규교육 경험자(123.15)가 무경험자(153.25)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소득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1, 2004, 2007년 정규교육 경험과 소득 수준 변화를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규교육 기회의 확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남한 입국 초기 고등중학교 편입, 대학 입학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부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경험은 이들의 경제적 적응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t;표 12&gt; 남한 정규교육 여부와 소득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정규교육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있음	12	120.83	57.24	-.206	-.078
		없음	33	117.45	45.45		
	2004	있음	17	130.29	66.30	.871	-.848
		없음	44	178.30	222.37		
	2007	있음	29	195.34	95.05	.376	-.725
		없음	43	213.84	252.50		
전체 평균소득	2001	있음	46	31.52	60.65	2.605*	-2.805
		없음	60	64.60	67.77		
	2004	있음	46	48.15	74.87	2.591*	-.363
		없음	60	130.75	205.81		
	2007	있음	46	123.15	121.28	.793	-1.133
		없음	60	153.25	234.15		
수입변화	있음	46	15.27	21.51	-.079	-1.133	
	없음	60	14.77	38.34			

\* p&lt;.05

### 나. 취업관련 교육 여부와 소득 수준

남한에서의 취업교육 경험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3>. 취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취업교육 경험자(111.00)가 무경력자(124.24)보다 적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4년에는 취업교육 경험자(194.00)가 무경력자(136.77)보다 평균 소득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취업관련 교육 경험자(242.3)가 무경력자(166.18)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대상자의 취업교육 경험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취업교육 경험자(36.39)가 무경력자(69.02)보다 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2.560$ ). 그러나 2004년에는 유경력자와 무경력자가 각각 95.41, 94.22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유경력자의 소득이 무경력자를 역전하는 기점이 되었다. 2007년에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유경력자(150.98)가 무경력자(125.56)보다 소득이 많았다.

2001, 2004, 2007년 취업교육 이수자와 소득 수준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남한 입국 초기에 취업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무경력자보다 근로

시간, 직업 유형이 불안정하여 소득이 적었으나 정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안정된 경제 적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는 남한 입국 초기에 취업을 강요하거나 단기 소득 수준으로 적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한 입국 초기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절한 진로지도와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표를 세우게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취업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소득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취업교육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있음	20	111.00	44.59	.914	-.841
		없음	25	124.24	51.03		
	2004	있음	30	194.00	259.36	-1.164	-.927
		없음	31	136.77	86.42		
	2007	있음	38	242.37	265.59	-1.605	-1.074
		없음	34	166.18	82.11		
전체 평균소득	2001	있음	61	36.39	58.22	2.560*	-2.481*
		없음	45	69.02	72.93		
	2004	있음	61	95.41	205.12	-.036	-1.275
		없음	45	94.22	95.88		
	2007	있음	61	150.98	239.85	-.668	-.566
		없음	45	125.56	101.36		
수입변화	있음	61	19.10	38.67	-1.549	-1.037	
	없음	45	9.42	18.72			

\* p<.05

#### 다. 자격증 취득 여부와 소득 수준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4>.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 자격증 취득자(104.64)가 미취득자(124.55)보다 평균 소득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4년에는 자격증 취득자(189.17)가 미취득자(149.19)보다 많은 평균 소득을 나타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자격증 취득자(209.31)와 미취득자(204.42)가

비슷한 소득 수준을 보였다.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소득이 비슷한 원인은 남한 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업무 숙련도, 근속년수, 직업유형이 유사하게 조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7년 3차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남한생활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적응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재할 직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쳐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적응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취업 프로그램 및 구직 지원 활동도 초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집중되어 있어 남한 입국이 오래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남한 입국 이후 장기 실업자 및 영세 소득자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정보 및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표 14> 자격증 소유여부와 소득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자격증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있음	14	104.64	42.36	1.292	-1.088
		없음	31	124.55	50.03		
	2004	있음	24	189.17	283.18	-.790	-.037
		없음	37	149.19	99.59		
	2007	있음	29	209.31	260.02	-.099	-.811
		없음	43	204.42	157.59		
전체 평균소득	2001	있음	43	34.07	54.93	2.101*	-1.929
		없음	63	61.29	71.77		
	2004	있음	43	105.58	230.11	-.542	-.218
		없음	63	87.62	106.02		
	2007	있음	43	141.16	234.36	-.043	-.534
		없음	63	139.52	161.32		
수입변화	있음	43	17.85	37.59	-.758	-.921	
	없음	63	13.04	27.72			

\* p<.05

전체대상자의 자격증 취득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자격증 취득자(34.07)가 미취득자(61.29)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t=2.101).

그러나 2004년에는 자격증 취득자(105.58)가 미취득자(87.62)보다 소득수준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7에는 자격증 취득자(141.16)와 미취득자(139.52)가 비슷한 소득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2001, 2004, 2007년 자격증 소지자의 평균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과 2007년대의 소득 증가가 담보 상태인 반면, 2001년과 2004년의 소득 변화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 6. 북한 인적자본과 소득 수준 변화

### 가. 북한 학력과 소득 수준 변화

북한 학력과 소득 수준 변화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취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북한 학력에 따른 소득 수준은 대학(122.86), 고등중학교(121.71), 전문학교/단과대학(97.8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과 고등중학교 집단의 소득 수준은 비슷하였으며 전문학교/단과대학 집단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대학 집단(254.41)의 평균 소득은 고등중학교(135.74)와 전문대학교/단과대학(112.00) 집단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F=2.757$ ). 2007년 또한 대학(297.86) 졸업자가 고등중학교(177.75)와 전문학교/단과대학(135.75)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3.396$ ). 그러나 고등중학교와 전문/단과대학 집단의 소득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북한 학력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표 15>, 2001년에는 대학 집단(71.67)의 평균 소득은 고등중학교(44.94)와 전문대학교/단과대학(40.29) 집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4년에는 대학 집단(180.21)은 고등중학교 집단(71.00)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4.308$ ). 그러나 전문학교/단과대학(65.88) 집단의 소득 수준은 고등중학교 집단과 비슷하였다. 2007년에는 대학 집단(260.63)은 고등중학교(109.38)와 전문대학/단과대학(87.94)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차이를 보였다( $t=6.782$ ).

2001과 2004년, 2007년에 북한 학력에 따른 평균 소득의 변화는 대학 집단(31.49)이 고등중학교(10.74)와 전문학교/단과대학(7.94)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t=4.450$ ).

<표 15> 북한 학력과 소득 수준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북한학력	N	Mean	S.D.	t	Kruskal-Wallis $\chi^2$	
취업자 평균소득	2001	고등중학교	24	121.71	47.96	.743	1.209
		전문/단과대학	7	97.86	43.58		
		대학	14	122.86	51.47		
	2004	고등중학교	34	135.74	68.10	2.757	3.817
		전문/단과대학	10	112.00	42.11		
		대학	17	254.41	341.20		
	2007	고등중학교	40	177.75b	95.94	3.396*	5.618*
		전문/단과대학	11	135.91b	71.16		
		대학	21	297.86a	336.44		
전체 평균소득	2001	고등중학교	65	44.94	65.81	1.661	3.428
		전문/단과대학	17	40.29	56.36		
		대학	24	71.67	72.98		
	2004	고등중학교	65	71.00b	84.02	4.308*	4.333
		전문/단과대학	17	65.88b	65.01		
		대학	24	180.21a	308.12		
	2007	고등중학교	65	109.38b	114.91	6.782**	9.996**
		전문/단과대학	17	87.94b	87.45		
		대학	24	260.63a	329.48		
수입변화	고등중학교	65	10.74b	21.84	4.450*	5.100*	
	전문/단과대학	17	7.94b	15.90			
	대학	24	31.49a	52.93			

\* p<.05, \*\* p<.01

## 나. 당원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

북한에서의 노동 당원 여부는 상위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취 욕구와 목표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 또한 개인의 성취 욕구와 목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에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를 북한 인적 자본으로 포함하여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6>.

취업자 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2001년에는 노동당원(128.38)이 비노동당원(106.90)보다 많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4년에도

노동당원(198.75)이 비노동당원(136.21)보다 소득 수준이 많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2007년 노동당원(231.54)의 평균 소득이 비노동당원(192.17)에 비해 많았으나 차이는 없었다.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당원과 비노동당원의 평균 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01에는 노동당원(85.58)이 비노동당원(32.0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4.223$ ). 2004년 또한 노동당원(154.58)이 비노동당원(64.2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2.717$ ). 2001년, 2004년도의 노동당원과 비노동당원 간의 소득 수준 차이는 개인의 성취 욕구 뿐만 아니라 노동당원 출신자들에게 강연 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생활이 장기화된 2007년 조사 시점에서는 노동당원(167.22)과 비노동당원(126.29)간의 소득 수준 차이는 없었다.

북한의 노동당원 여부와 2001, 2004, 2007년 소득 수준 변화를 종합해 보면 2004년까지 노동당원이 비노동당원에 비해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7년부터 간극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당원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

(단위: 만원)

구분	당원여부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당원	24	128.38	49.98	1.512	-1.457
		비당원	21	106.90	44.51		
	2004	당원	28	198.75	268.32	1.270	-.996
		비당원	33	136.21	83.22		
	2007	당원	26	231.54	278.23	.787	-.376
		비당원	46	192.17	147.24		
전체 평균소득	2001	당원	36	85.58	73.54	4.223***	-3.899***
		비당원	70	32.07	54.85		
	2004	당원	36	154.58	250.12	2.717**	-3.038**
		비당원	70	64.21	88.89		
	2007	당원	36	167.22	257.59	1.033	-.774
		비당원	70	126.29	150.27		
수입변화	당원	36	13.61	42.30	-.318	-1.169	
	비당원	70	15.70	25.49			

\*  $p<.05$

### 다. 군복무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

북한의 군복무 여부 또한 노동당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회 진출 및 성취 욕구와 관련성이 높다. 즉,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노동당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대학 추천 기회가 중고등학교 보다 많다. 이에 개인의 사회 경력과 이익이 신장된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인적자본에 포함하였다.

취업자를 군복무 여부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7>, 2001년 군복무 경험자(126.89)가 무경험자(105.56)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4년에도 군경험자(194.14)가 무경험자(138.44)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으나 차이는 없었다. 2007년에도 군경험자(221.67)가 무경험자(195.48)보다 많았으나 차이가 없었다. 즉, 2001, 2004, 2007년 군경험자가 무경험자 보다 평균 소득 수준은 많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소득 변화 또한 차이가 없었다.

<표 17> 군복무 여부와 소득 수준 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군복무경험	N	Mean	S.D.	t	Mann-Whitney z	
취업자 평균소득	2001	있음	27	126.89	47.767	1.474	-1.296
		없음	18	105.56	47.275		
	2004	있음	29	194.14	264.396	1.131	-.587
		없음	32	138.44	84.285		
	2007	있음	30	221.67	258.411	.536	-.223
		없음	42	195.48	155.241		
전체 평균소득	2001	있음	40	85.65	71.720	4.667***	-4.252***
		없음	66	28.79	53.184		
	2004	있음	40	140.75	240.615	2.242**	-2.318*
		없음	66	67.12	90.821		
	2007	있음	40	166.25	243.112	1.082	-1.124
		없음	66	124.39	155.498		
수입변화	있음	40	13.43	40.42	-.388	.283	
	없음	66	15.93	25.93			

\* p<.05, \*\* p<.05, \*\*\* p<.05



전체 대상자를 군복무 여부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2001년 군경험자(85.65)가 무경험자(28.7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4.667$ ). 2004년에도 군경험자(140.75)가 비경험자(67.1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t=2.242$ ). 이러한 2001, 2004년 소득 수준 차이는 남한 생활 초기 군경험자의 정보비 및 보로금이 무경험자와 비교하여 차등 지급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에는 군경험자(166.25)가 무경험자(124.39)보다 소득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IV. 토론 및 제언

### 1. 토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7년간 추적연구하였다. 이 중 2001, 2004, 2007년 추적연구에 모두 참여한 106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가. 7년 이상 남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은 증가하였다.

7년 이상 남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2007년 평균 소득 수준은 140.19로 2001년(50.24)과 2004년(94.91)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7년 취업자의 평균 소득 분포는 저소득자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남한사회 거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은 이민자 연구<sup>15</sup>와 유사하였다. 이성우 등의 연구에서도 한국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소득 수

<sup>15</sup> Lee S. M., Edmonston B.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integration of Asian immigrants," in *Immigration and ethnicity: The integration of America's newest arrivals* (B. Edmonston and J. S. Passel, Eds.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4), pp. 101-138; John Iceland, "Earnings Return to Occupational Status: Are Asian Americans Disadvantaged?,"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1999), pp. 45-65; Min P. G.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5 (summer), pp. 333-352; Nee V. and Sanders J., "The Road to Parity: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s of Asian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8 (1985), pp. 75-93; 이성우·조중구, "미국내 아시아인 이민자들의 주거비지불능력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0권 제2호 (2002), p. 68; 이기영,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

준 변화 연구에서 이민 기간이 길수록 미국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sup>16</sup> 이성우 등은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들의 10년간 주거비 지불능력 지표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민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민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주거비 과지불가구<sup>17</sup> 형성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sup>18</sup> 이기영의 연구에서도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활동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sup>19</sup> 또한 Nee와 Sanders도 미국 거주기간이 오래된 일본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Nee와 Sanders의 이민자 경제적 적응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이 20년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민자의 소득 수준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논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들이기 때문에 남한주민의 소득 수준과 단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년 패널연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와 남한 사회 이주 기간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적응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적응을 거론하기 이전에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p. 204.

<sup>16</sup> 이성우·민성희·최영찬, “소득수준의 변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동화과정 연구,” 『지역사회문제연구』, 제26집 2호 (2001), p. 75.

<sup>17</sup> 주거비 과지불가구는 가구소득에 비해 적정 부담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가격 또는 임대료 수준을 의미하는 주거비지불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 주택에 대한 과도한 지불이 사회문제의 주요한 쟁점중 하나로 부각되어, 미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인 경우를, 그리고 Dowell Myers(1992)는 지역별로 30% 내지 35%이상일 경우를 과도한 지출로 정하고 있다.

<sup>18</sup> 이성우·조중구, “미국내 아시아인 이민자들의 주거비지불능력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0권 제2호, pp. 51-79.

<sup>19</sup> 이기영,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p. 206.

<sup>20</sup> Nee V., Sanders J., “The Road to Parity: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s of Asian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8 (1985), pp. 75-93.

## 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유형중 정규직 및 자영업 분포가 2001년에 비하여 2007년에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규직 분포는 2001년 26.4%, 2004년 25.5%, 2007년 34.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규직 분포는 2007년 남한주민의 직업분포와 유사하였다. 즉, 2007년 12월 통계청의 남한주민 경제활동인구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sup>21</sup> 상용근로자율은 37.80%로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분포는 2001년 4.7%, 2004년 9.4%, 2007년 15.1%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12월 남한주민 자영업 종사율 26.16%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종사율은 낮은 분포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직업유형이 정규직 및 자영업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이성우 등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sup>22</sup> 한편, 엄홍석 등의 북한이탈주민 경제동향 패널연구에 의하면 정규직이 2005년 12월에는 25.8%, 2006년 6월에는 35.6%, 2006년 11월에서 12월에는 19.7%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은 2005년 12월 7.3%, 2006년 6월 6.8%, 2006년 11월에서 12월에는 3.8%로 감소한다고 보고함<sup>23</sup>으로써 본 연구와 달랐다. 본 연구와 상이한 원인은 엄홍석 등<sup>24</sup>의 연구 대상은 1997년에서 2004년까지 입국자이며, 이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패널집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조사는 1997년에서 2004년 입국자 341명,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 조사는 2002년 이후 입국한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패널 대상의 시간적 궤적을 고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안정성 및 창업이 차츰 증가하는 현상은 남한 거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동화 및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 남녀 모두 고용율이 상승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고용율은 2001년 42.5%, 2004년 57.5%, 2007년 67.9%로

<sup>21</sup> 통계청, <<http://www.nso.go.kr>>,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sup>22</sup> 이성우·박지영·김성수,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택소유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9권 제2호 (2001), pp. 235-236.

<sup>23</sup> 엄홍석·윤여상·허선행, 『200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통권 1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30-31.

<sup>24</sup> 위의 책, pp. 7-17.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고용율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sup>25</sup> 남한주민의 전체 고용율은 60.5%로 북한이탈주민이 7.4%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고용율을 남한 주민과 비교하면, 2007년 북한이탈남성의 고용율은 75.8%, 여성의 고용율은 56.8%로 남한 남성 71.8%, 남한 여성 49.8%보다 북한이탈주민 남녀의 고용율이 높았다. 선한승 등<sup>26</sup>은 1970년에서 1999년에 입국한 경제활동인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은 76.1%, 여성은 31.8%의 고용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것은 특정 시기의 횡단면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기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최초 직장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활동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남성의 소득, 취업 경험, 구직 시간이 여성보다 유리하다고 하였다.<sup>27</sup> 이러한 결과는 이성우 등의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들의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과 유사하였다. 특히 아시아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남성보다 가중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 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는 거주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 북한이탈주민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소득 수준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2007년 연구 결과, 질병이 없고 입원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가 생계비 수급 여부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sup>29</sup> 황나미 등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뿐만 아니라 생리적 과정의 결과

<sup>25</sup> 통계청, <<http://www.nso.go.kr>>,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sup>26</sup> 선한승·강일규·김영운·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152-153.

<sup>27</sup>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년 상반기호), p. 205.

<sup>28</sup> 이성우·민성희·최영찬, “소득수준의 변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동화과정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6집 2호 (2001), pp. 72-75; Jhon Iceland, “Earning Returns to Occupational Status: Are Asian Americans Disadvantaged?,”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1999), pp. 56-63.

<sup>29</sup>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과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집 (2007. 6), pp. 89-90.

인 건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sup>30</sup> 반면, 이기영의 연구에서는 건강 문제가 있을수록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sup>31</sup> 이는 남한 거주 4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유지하나 남한 거주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건강상의 문제는 소득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적응 초기에 보이는 건강과 경제적 적응 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도 2004년에는 건강 문제 여부에 따라 소득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남한 정착 기간이 장기화된 2007년에는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마. 취업관련 교육 경험자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 남한 거주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

2001년 남한 정착 초기에는 취업관련 교육 미경험자와 자격증 미취득자가 교육 경험자와 자격증 취득자보다 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선한승 등의 연구에서도 직업교육 경험자의 구직 만족 정도는 불만족이 57.4%로 나타남으로써 직업 교육훈련이 구직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함<sup>32</sup>으로써 본 연구 1차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김창권 또한 취업교육 이수 이후 자격증 획득 여부와 취업 여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함<sup>33</sup>으로써 2001년과 유사하였으나 2007년 결과와는 대치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기간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착 초기에는 취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여부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착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소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30</sup> 황나미·이상영·김동진·류우진·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 47-52.

<sup>31</sup>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년 상반기호), p. 205.

<sup>32</sup> 선한승·강일규·김영윤·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희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 105.

<sup>33</sup>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제25권 2호 (2007), p. 204.

## 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학력 수준이 대학 이상일 경우 4년 이상 남한 거주 기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였을 때는 북한 학력별 소득 수준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한 거주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대학졸업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등중학교와 전문학교/단과대학 졸업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다. 또한 남한 거주 7년이 경과하면서도 소득 수준이 대학, 고등중학교, 전문학교/단과대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손영지는 북한 학력이 전문대 이상일수록 고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졸업자가 높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이주 전 학력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sup>34</sup> 또한 윤인진은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위 계층 직업에 종사할수록 생계비 수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up>35</sup> Becker는 난민의 경우 이주 전 교육과 직업배경이 이주 후 정착지에서 활용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sup>36</sup> 이 경우 이주전 문화권의 학력 수준, 능력,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이주 후 인적자본으로 보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창권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학력이 소득 창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sup>37</sup> 이는 연구 참여 대상이 남한 거주 3년 이하가 93.5%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2001년 본 연구에서도 북한 학력간 소득 차이는 없었으며, 4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는 북한 인적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하나 이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잠재력을 발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sup>34</sup> 손영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북한이탈주민의 취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78-79.

<sup>35</sup>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과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집 (2007. 6), pp. 89-90.

<sup>36</sup> Kim, Young Yun,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1977-1979 Arrivals in Illinois,” in *Refugee as Immigrants: Cambodians, Laotians and vietnamese in America*, edited by David W. Haines (Totowa, NJ: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1989), p. 97.

<sup>37</sup>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제25권 2호 p. 204.

## 2. 제언

### 가. 남한 거주 장기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남한주민의 전가구 평균 근로 소득 212.11과 비교하면 66% 수준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2001년에는 51.1%, 2004년에는 36.1%, 2007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남한 거주 기간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적응을 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7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률”이 자립·자활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초기 입국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남한 거주 기간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리쿠르트 공간 마련, 취업 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수준은 강화될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북한이탈여성의 고용율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2002년 이후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비율이 남성의 입국 비율을 추월하여 2007년에는 약 78%에 이르고 있다.<sup>38</sup>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은 시도별 취업 교육 내용 및 기관의 편중, 교육 지원 기간의 한계로 인해 취업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비 지급이 6개월로 감소되어 진로상담 및 구직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일용직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업 형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직접적 소득과 구직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남북한 주민의 통합 일환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들의 건강 증진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구조

<sup>38</sup> 통일부, 『2008 통일백서』, p. 205.

적이며 고정된 의료보호 체제는 이들의 신체적·심리적·문화적 충격을 치유할 수 없다. 북한에서의 영양 부족, 제3국 체류기간의 신체적·정신적 피폐, 남한에서의 조기 정착에 대한 조급증이 퇴적되어 이들은 소진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적응만을 강요하는 것은 과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당시, 하나원 교육 기간, 남한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양, 질병, 만성질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라. 남한에 입국한 장기 실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경제적 적응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남한 생활 3년 이내에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과 구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중 구직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경제적 경험을 함으로써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구직 실패와 계속된 이직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자본주의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취업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으로 이어져 가족 폭력, 자녀 교육 저해, 연속된 빈곤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착 초기에는 취업교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3년 이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소득 증가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 또한 장기 실업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제고할 수 있는 재취업 프로그램 교육을 개발, 홍보, 재인식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인적자본 인정과 남한 직장 일치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만 5천명의 북한 학력, 자격증, 재직 경력은 남한에서의 경제적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한 노동시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통일 후 남북 주민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이탈주민이 취득한 각종 자격에 대해서 서독의 자격 시험과 내용면에서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동독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인정은 동독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연금산정기간 결정에도 도움을 주었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후 구동서독 주민간의 경제적 차이



는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회심리적 괴리감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 바.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법 시행령 변경 후 정책의 실효성과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성향과 정착지원금,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지원정책 등이 다르다. 또한 입국자가 대규모화되었으며 그 입국 동기도 다양화되어 2001년 이전 입국자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 이전에는 식량 원조를 위해 탈북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경제적 적응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적 적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패널 연구가 필요하다.

### 3. 한계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초로 진행된 7년 패널 조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7년간의 연구 기간으로 인해 패널 수가 감소하여 2001년 이전 입국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일반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200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립·자활이 강조되었다. 이는 2001년 입국자의 경제적 적응 요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가 2001년 이전 입국자와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성별이 2001년 이전 입국자와 다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것이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sup>39</sup> 선한승·강일규·김영운·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희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203-204.

## 참고문헌

-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제25권 2호, 2007.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박미석·성향숙.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제17권, 2000.
- 선한승·강일규·김영운·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희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손영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엄홍석·윤여상·허선행. 『200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실업·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7. 25.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시은·전우택·홍창형·조영아·엄진섭.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1호, 2005.
- 윤덕룡. “경제적 적응상황분석과 대책.”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보호경찰관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2000.
-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과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과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집, 2007.
- \_\_\_\_\_.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1999.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기영.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 \_\_\_\_\_. “북한출신 남한 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 이성우·민성희·최영찬. “소득 수준의 변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동화과정 연구.” 『지역사회문제연구』. 제26집 2호, 2001.
- 이성우·박지영·김성수.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택소유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9권 제2호, 2001.
- 이성우·조중구.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거비지불능력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0권 제2호, 2002.
-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내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제1호, 2004.
- \_\_\_\_\_.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 통계청. <<http://www.nso.go.kr>>.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통일부. 『200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8.
- 황나미·이상영·김동진·류우진·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Jhon Iceland. *Earning Returns to Occupational Status: Are Asian Americans Disadvantaged?*. Social Science Reseach. Vol. 28, 1999.
- Kim, Young Yun.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1977-1979 Arrivals in Illinois, in Refugee as Immigrants: Cambodians, Laotians and vietnamese in America*. edited by David W. Haines. Totowa, NJ: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1989.
- Lee S. M., Edmonston B.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integration of Asian immigrants. in Immigration and ethnicity: The integration of America's newest arrivals*. B. Edmonston and J. S. Passel, Eds.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4.
- Min P. G.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5, Summer.
- Nee V. Sanders J., *The Road to Parity: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s of Asian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8, 1985.

## Abstract

### Determinant Factors for Increased Income Level among North Korean Refugees : A 7-year Panel Study

*Shi-Eun Yu, Jin-Sup Eom, Deok Ryong Yoon and Woo-Taek Jeon*

The paper looks into changes in income level and contributing factors for change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whose stay in South Korea is longer than 7 years. The three survey studies conducted in a 7-year-period with 200 North Korean refugees included questions on actual income, occupation, demographic information, physical health status,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 South Korea. For this presentation, survey results on 106 North Korean defectors who participated in both studi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overall average monthly income for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d, full-time 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have slightly increased, men's income and changes in occupation were higher and frequent than women's. Those who had earned a college degree from North Korea refugees showed much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 level in 2007 than that of 2004. Initially the health status did not influence income level, but as time passed, healthy individuals reported higher income level. Interestingly, educational experiences from South Korea did not influence their economic statu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Income, Panel Study



# 김정일 시대(1998~2007) 북한당국의 통일담론 분석: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김 석 향\*\* · 권 혜 진\*\*\*

- |                        |                            |
|------------------------|----------------------------|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자원 논의              |
| III. 분석대상 자료 개관        | IV. 김정일 시대 통일관련 구호의 항목별 특성 |
| V. 통일관련 구호의 수신자와 발신 목적 | VI. 요약 및 결론                |

## 국문요약

북한은 선전의 국가, 구호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현장에 각종 구호가 넘쳐나는 곳이다. 이 논문은 이른바 김정일 시대에 해당하는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에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구호를, 얼마나 자주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은 북한당국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매해 노동신문을 통해 생산하고 보급해 온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과 빈도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만약 해마다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과 빈도 현황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김정일 시대에 북한당국이 내세웠던 통일구호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그 발신목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 이 논문은 1998년 1월 1일 자 이후 2007년 12월 31일 자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를 전수조사한 뒤 10년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특징을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에 게재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수신자는 북한주민 이외에도 남한주민과 남한당국, 미국 등 제2의 수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정일 시대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라 그 내용과 연도별 빈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통일담론, 김정일 시대(1998~2007), 선전, 구호의 유형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I. 문제의 제기

북한은 선전의 국가, 구호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현장에 각종 구호가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구호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구호는 모두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을 반영하는 통로일 뿐이며 주민들의 상상력이나 독창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구호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주체가 당과 국가, 지도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구호의 내용과 빈도 현황을 분석하면 해당 시기에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지, 그 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이 내세우고자 하는 공식담론의 내용은 무엇인지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sup>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담론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다.<sup>2</sup> 말하자면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언어적인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 역시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그 사회 내부에서 통용되는 담론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시대 10년에 걸쳐 북한당국의 통일담론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이 논문은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통일관련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른바 김정일 시대로 명명할 수 있는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에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구호를, 얼마나 자주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통일은 북한당국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매해 노동신문을 통해 생산하고 보급해 온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과 빈도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만약 해마다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과 빈도 현황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김정일 시대에 북한당국이 내세웠던 통일구호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그 발신목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 이 논문은 1998년 1월 1일자 이후 2007

<sup>1</sup>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25.

<sup>2</sup> Oliver Reboul,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Language et Ideologie)』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41.

년 12월 31일자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를 전수조사한 뒤 10년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특징을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로 분석해 보았다. 라스웰은 발신자와 메시지, 채널, 수신자, 효과 등 다섯 가지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해 직선적이고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발신자로 북한당국, 메시지는 노동신문에 제시해 놓은 통일관련 구호, 채널은 노동신문을 상정한 뒤 수신자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노동신문에 게재한 통일관련 구호의 1차적 수신자는 북한주민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통일관련 구호의 1차적 수신자 이외에도 다른 수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발신자인 북한당국이 어떤 목적으로 통일관련 구호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려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자원 논의

라스웰은 ‘누가 무엇을 어떤 채널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소통하는가(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라는 질문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가 발신자(Communicator)와 메시지(Message), 채널(Channel), 수신자(Receiver), 효과(Effect) 등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sup>3</sup> 라스웰의 모델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단선적이고 의도적인 메시지의 전달과정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단선적이며 일회적 사건의 연결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역동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그리고 발신자의 주장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를 효과로 인정함으로써 수신자의 반응을 측정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라스웰의 모델은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공식담론의 성격을 분석할 때에는 효율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언론 이론에서 뉴스와 보도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으로 국가의 기본 방향이나 당국의 정

<sup>3</sup> Lasswell, H. 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deas: A series of Addres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8),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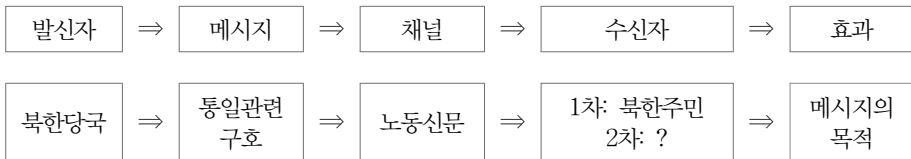


책, 그리고 당의 노선과 관계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sup>4</sup>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매체는 일종의 정치기구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활동은 정치활동이고 언론인은 직업적인 정치요원이며 핵심 공산당원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sup>5</sup>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체계를 살펴보면 이른바 “유일지배체제”인 만큼 그 사회 내에서 공식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권리를 가진 유일한 주체는 지도자 이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당국의 지배를 받는 주민들은 지도자가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담론을 수신하여 소비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sup>6</sup> 말하자면 북한사회에서는 지도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공식담론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sup>7</sup> 결과적으로 북한사회는 당과 국가가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공식담론에 맞서는 대항담론이 발생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북한에서 발행되어 나오는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말”이나 “글”을 곧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으로 등치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에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을 적용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과 본 연구간 상관관계<sup>9</sup>



<sup>4</sup> 유재천 외,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24.

<sup>5</sup> 위의 책, p. 25.

<sup>6</sup> 북한당국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른바 “수령복”·“장군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sup>7</sup> 북한당국이 이와 같이 “수령”과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담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철저히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위 “수령”과 “장군” 이외에는 공식담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담론을 통해 사회 내의 갈등과 투쟁이 표출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67년에 김일성이 발표한 “5·25교시”는 북한당국의 언어독점 권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볼 수 있다.

<sup>8</sup>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sup>9</sup> 와다 하루코, “김정일 군부대 현지지도 연구”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p. 10 참조.

### Ⅲ. 분석대상 자료 개관

이 부분에서는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발신자인 북한당국이 1차 수신자인 북한주민 이외에 어떤 수신자를 상정하고 있는지, 또한 각각의 수신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집권정당인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로 1년 365일 연중무휴 발간되는 신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은 자신이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생 동안 노동신문의 충실한 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은 누구나 일상적인 정치·사상 학습의 주요교재로 노동신문의 내용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sup>10</sup>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부에서 통용되는 담론은 그 담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제도와 담론의 생산자가 누리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sup>11</sup> 빼빼는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대립하는 담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낱말이나 표현, 명제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담론의 소통 과정에서 누가 그 낱말이나 표현, 명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그 뒤에 숨은 의미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sup>12</sup>

그런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 31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통일관련 공식담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노동신문의 사설이나 기사의 제목에 나오는 통일관련 구호 뿐 아니라 사진에 등장하는 구호도 빠짐없이 찾아서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다만 분석대상 자료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구호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이룩하자<sup>13</sup>”,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새 전쟁책동도발책동을 규탄한다<sup>14</sup>”,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sup>15</sup>” 등 내용상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구호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명시적

<sup>10</sup>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40.

<sup>11</sup>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sup>12</sup> Michael Pecheux,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London: Macmillan, 1982), pp. 55-60.

<sup>13</sup> 『노동신문』, 1998년 3월 1일.

<sup>14</sup> 『노동신문』, 1998년 12월 20일.

<sup>15</sup> 『노동신문』, 2001년 3월 18일.

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분석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표 2>는 김정일 시대(1998~2007)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10년의 기간 동안 노동신문에는 총 433건의 통일관련 구호가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통일관련 구호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는 2002년으로 총 433건 가운데 18.2%에 해당하는 79건에 이른다. 반면 1999년은 통일관련 구호가 가장 적게 등장한 시기로 총 433건의 3.9%에 불과한 17건에 머물렀다.

<표 2> 김정일 시대(1998~2007)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빈도	39 (9.0%)	17 (3.9%)	25 (5.8%)	75 (17.3%)	79 (18.2%)	51 (11.8%)	24 (5.5%)	58 (13.4%)	46 (10.6%)	19 (4.4%)	433 (99.9%)

한편 김정일 시대 10년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정부(1998~2002)와 참여정부(2003~2007)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적용해 보면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에서도 그에 따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초창기인 1998년에 노동신문은 총 433건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39건을 실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10년 동안 가장 많은 통일관련 구호가 노동신문에 등장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첫 해인 2003년에 노동신문은 국민의 정부 초창기보다 더 많은 51건의 통일관련 구호가 나왔으나 그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겨우 4.4%에 불과한 19건의 구호만 등장한다.

김정일 시대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분포가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총 433건의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와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6·15관련 통일구호, 통일염원구호,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구호 등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는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방식<sup>16</sup>을 그대로 보

<sup>16</sup> 김일성, 『통일전선 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통일전선의 개념: 주적의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당(공산당)과 제세력의 정치적 연합을 일컫는다. 북한은 남한에서 통일전선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은 남한 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남한혁명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승리의 필수적인 담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술은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남한내 공산(좌익)세력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현상을

여준다. 이 항목은 북한당국이 김일성 시대부터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 ‘민족’을 기치로 내세워 대남 통일전선을 추진할 때 사용해 온 구호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sup>17</sup>”,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강령<sup>18</sup>”, “련방제방식은 조국통일의 최선의 방도<sup>19</sup>”,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sup>20</sup>” 등이 있다.

둘째,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는 통일의 장애요인을 찾아 그 세력을 배격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은 주로 ‘미제’로 대변되는 외세와 남한 내 미군을 몰아내고 남한의 보수세력을 배격할 것을 주장하는 선동적 구호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반미는 곧 평화이고 통일<sup>21</sup>”,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sup>22</sup>”, “극우보수세력들의 반통일, 반공화국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sup>23</sup>” 등이 있다.

셋째, 6·15관련 통일구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은 북남공동선언 리행에 있다<sup>24</sup>”,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sup>25</sup>” 등이 있다.

넷째, 통일염원구호는 통일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독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조국통일은 기어이 우리세대에<sup>26</sup>”, “신심과 용기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자<sup>27</sup>” 등이 있다.

다섯째,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구호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통일조국의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sup>28</sup>”, “경애하

---

고려하여 비록 공산세력이 아닐지라도 미국이나 현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세력을 규합하여 이들 힘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인 인민정권을 수립한다는 전술이다.

17 『노동신문』, 1998년 2월 21일.

18 『노동신문』, 1999년 1월 7일.

19 『노동신문』, 2001년 3월 7일.

20 『노동신문』, 2002년 1월 10일.

21 『노동신문』, 2003년 1월 3일.

22 『노동신문』, 2007년 11월 14일.

23 『노동신문』, 2003년 9월 1일.

24 『노동신문』, 2001년 1월 20일.

25 『노동신문』, 2001년 3월 11일.

26 『노동신문』, 2003년 1월 8일.

27 『노동신문』, 1999년 1월 4일.

28 『노동신문』, 1998년 8월 23일.

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령도 밑에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자!<sup>29)</sup>, “위대한 장군님이 이끄시는 자주통일의 한길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sup>30)</sup>” 등이 있다.

이상 5개 항목을 김정일 시대 10년 기간에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 총 433건에 적용하여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김정일 시대(1998~2007) 통일관련 구호의 항목별 분포

	항목별 빈도	항목별 비중	주요 내용 및 표현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193	44.6%	조국통일3대원칙/ 민족대단결 5대방침/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141	32.6%	미제, 외세, 분렬세력, 반보수투쟁,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반통일세력
6·15관련 통일구호	41	9.5%	6·15공동선언, 북남공동선언
통일염원구호	31	7.2%	우리 대에 통일 이룩하자/신심과 낙관에 넘쳐 통일에 전진하자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	27	6.2%	김일성/김정일
합계	433	100.1%	

<표 3>을 보면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지난 10년간 누적 빈도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433건 가운데 193건으로 44.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141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다. 3위는 ‘6·15관련 통일구호’로 전체 433건의 9.5%인 41건이었다. ‘통일염원구호’는 31건으로 7.2%를 차지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 구호는 27건으로 6.2%로 5위에 그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 IV. 김정일 시대 통일관련 구호의 항목별 특성

아래에 나오는 <표 4>를 보면 총 5개 항목의 통일관련 구호 가운데 1998년~2007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최다 빈도를 기록한 구호는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sup>29)</sup> 『노동신문』, 1999년 5월 11일.

<sup>30)</sup> 『노동신문』, 2001년 8월 21일.

와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뿐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는 10년 동안 무려 7년에 걸쳐 연도별 최다 빈도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1년과 2002년, 2004년 등 3년은 한 해 동안 등장했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최다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와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는 지난 10년 동안 누적 빈도와 아울러 연도별 최다 빈도 부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구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부분에서 5개 항목의 통일관련 구호를 각 항목에 따라 그 내용과 연도별 빈도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 1998년~2007년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항목별 합계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26 (66.7%)	9 (52.9%)	12 (48.0%)	26 (34.7%)	24 (30.4%)	24 (47.1%)	2 (8.3%)	38 (65.5%)	26 (56.5%)	6 (31.6%)	193
반통일 세력배격 구호	8 (20.5%)	4 (23.5%)	3 (12.0%)	33 (44.0%)	35 (44.3%)	18 (35.3%)	18 (75.0%)	5 (8.6%)	12 (26.0%)	5 (26.3%)	141
6·15관련 통일구호	0	0	1 (4.0%)	9 (12.0%)	10 (12.7%)	6 (11.8%)	1 (4.2%)	8 (13.8%)	4 (8.7%)	2 (10.5%)	41
통일염원 구호	2 (5.1%)	3 (17.6%)	8 (32.0%)	2 (2.7%)	2 (2.5%)	3 (5.9%)	1 (4.2%)	5 (8.6%)	1 (2.2%)	4 (21.4%)	31
김일성· 김정일 통일지도 자구호	3 (7.7%)	1 (5.9%)	1 (4.0%)	5 (6.7%)	8 (10.1%)	0	2 (8.3%)	2 (3.4%)	3 (6.5%)	2 (10.5%)	27
연도별 합계	39 (100.0%)	17 (99.9%)	25 (100.0%)	75 (100.1%)	79 (100.0%)	51 (100.0%)	24 (100.0%)	58 (99.9%)	46 (99.9%)	19 (100.0%)	433

## 1.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분석

<표 4>에서 10년 동안의 연도별 빈도 분포 현황을 보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가 해당연도의 전체 구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은 1998년이였다. 그 해 노동신문에 등장한 통일관련 구호는 총 39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66.7%에 이르는 26건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로 분류된다. 이런 흐름은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이어진다. 1999년에는 총 17건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52.9%에

해당하는 9건이었고 2000년에는 총 25건 가운데 48.0%를 차지하는 12건이었다. 그리고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해당연도의 47.1%와 65.5%, 56.5%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해당연도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가 50% 이상을 기록한 해는 1998년과 1999년에 이어 2005년과 2006년이었다. 그러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2004년을 제외하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가 해당연도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기록한 2007년에도 총 19건 중에서 6건으로 31.6%로 나타난다.

<표 5>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에 등장하는 핵심어

년도	핵심어
1998	조국통일 3대원칙, 민족의 단합된 힘, 평화통일제안, 민족대단결 5대방침, 자주·민주, 통일, 통일대축전
1999	민족대단결, 민족대단결 5대방침, 자주, 련방제방식
2000	조국통일 3대현장, 민족의 단합된 힘, 자주·민주·통일
2001	온 민족단합 단결,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 련방제 방식, 자주·민주·통일
2002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 민족대단결
2003	민족공조, 조국통일 3대 현장
2004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2005	3대공조, 민족통일 3대현장, 민족통일 3대원칙, 민족자주,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
2006	자주통일, 3대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우리민족끼리,
2007	우리민족끼리,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자주통일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를 구성하는 핵심어는 통일, 민족, 자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구호 속에 등장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의미는 비슷하지만 형태적인 변화를 계속하여 유사한 용어가 많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말하자면 10년 간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는 통일, 민족, 자주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조금씩 다듬어 표현하는 문장의 반복인 것이다. 특히 세 가지 핵심어를 김정일 시대가 추구하는 감성적 호소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용어로 다듬은 결과물이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31</sup>

<sup>31</sup> 우리 민족끼리는 2001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용어인 반면 민족공조는 2001년 1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호소문”에서 처음 나타난

## 2. 반통일세력 배경구호 분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일 시대 10년 동안 ‘반통일세력 배경구호’가 전체 5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한 시기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 등 3년이었다. <표 4>를 보면 2001년에는 총 75건 중에서 44.0%에 해당하는 33건이 ‘반통일세력 배경구호’로 분류된다. 2002년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여 총 79건 중에서 44.3%에 해당하는 35건이었다. 반면 2004년에는 총 24건의 구호 중에서 무려 75.0%에 해당하는 18건이 ‘반통일세력 배경구호’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통일세력 배경구호’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반통일세력 배경구호’에서 주요 공격대상으로 지적하는 상대방은 “미제, 외세, 부쉬행각, 미군” 등으로 표현해 놓은 미국과 “반공·반통일분자, 분렬세력, 통일의 원수들, 파쇼잔당, 친미반통일보수세력” 등으로 불렸던 남한 내 보수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반통일세력 배경구호에 등장하는 핵심어

연도	핵심어
1998	안팎의 분렬주의자, 반통일분자, 통일의 원수들, 미제, 미제침략자
1999	통일의 원수들, 반북·반통일대결책동, 보안법(2) <sup>32</sup> , 외세지배
2000	반외세·반괴뢰, 남조선·자주·민주화
2001	미제, 외세, 반통일공세, 미제침략자, 반통일책동, 미군철수, 반공·반통일세력, 보안법(2)
2002	민제, 부쉬행각, 미군, 반통일세력, 미군철수, 반미반전투쟁, 살인마 미제, 반통일역적(2), 통일의 원수들, 민족반역자
2003	반미, 미제, 반미반전투쟁, 보안법(3), 반통일세력
2004	외세, 반통일책동, 반미민족공조, 미군철수, 미제, 보안법(10)
2005	반미, 외세, 미군철수, 분렬세력
2006	반미, 반보수투쟁, 미국, 외세, 반통일세력, 을지포커스합동군사훈련, 파쇼잔당, 친미반통일보수세력
2007	보안법(1), 반통일역적(2)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안찬일, 『북한의 민족공조의 본질과 전망』(북한연구학회 2003 춘계세미나).

<sup>32</sup> <표 6>에 나오는 ( ) 안 숫자는 그 해에 해당 핵심어를 포함한 ‘반통일세력 배경구호’가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를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이 김정일 시대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했던 총 141건의 구호 중에서 43.3%에 해당하는 61건에서 미국을 유일한 공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한의 보수세력을 공격하는 구호는 48건으로 총 141건의 34.0%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과 남한의 보수세력을 동시에 공격하는 22.7%에 해당하는 32건이었다. 결국 10년 동안 ‘반통일세력 배격구호’에 등장하는 1차적인 공격대상은 미국이고 남한의 보수세력은 2차적인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요약된다.

<표 7> 반통일세력 배격구호에 나타나는 1차적 공격대상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합 (비중)
미국	3	0	1	17	20	10	6	0	3	1	61 (43.3%)
남한	3	2	0	3	11	7	12	3	4	3	48 (34.0%)
미국 및 남한보수	2	2	2	13	4	1	0	2	5	1	32 (22.7%)
총계	8	4	3	33	35	18	18	5	12	5	141 (100%)

재미있는 사실은 남한 내 보수세력을 공격대상으로 지적하는 구호 48건 중에서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2건씩, 총 4건에서 ‘반통일역적’이란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표현은 10년 동안 2002년도와 2007년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다. 2007년의 경우, 이 표현이 등장하는 2건을 게재한 노동신문의 발행일자와 구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4일: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역적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 하자.

2007년 12월 5일: 분노한 민심을 바로 보고 반통일역적은 정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2007년 12월 4일과 5일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 다. 그 점을 감안하여 구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반통일 역적’으로 규정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편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는 1999년과 2001년, 2003년, 2004년, 2007년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2004년에 10건이 몰려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04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일성 사망 10주년 조문을 불허한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시기였다. 해당되는 10건의 구호를 게재한 노동신문의 발행일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8월 20일: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악법-《보안법》을 철폐하라
- 2004년 9월 13일: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보안법》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 2004년 9월 14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2004년 9월 15일: 반통일악법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4년 9월 24일: 반통일악법 《보안법》폐지는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
- 2004년 10월 16일: 《보안법》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
- 2004년 10월 18일: 통일을 방해하는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4년 10월 20일: 《보안법》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장애물
- 2004년 11월 8일: 《보안법》은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악법
- 2004년 12월 26일: 《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원년의 승리를 쟁취하자

2004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에 나오는 통일관련 구호는 총 24건에 불과하다. 24건 중에서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는 18건으로 75.0%를 기록하여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런데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18건 중에서 10건이 보안법을 공격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노동신문에 이런 유형의 구호가 나오는 시점이 한결같이 김일성 사망 10주년 조문을 불허한 이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몰려 있다는 점도 북한당국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요인이다.

### 3. 6·15관련 통일구호 분석

‘6·15관련 통일구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항목이다. 2000년 8월 16일자 노동신문에 최초로 등장한 6·15관련 통일구호는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자”는 것이었다.<sup>33</sup>

앞서 제시한 <표 4>를 보면 2001년 이후 ‘6·15관련 통일구호’는 해마다 등장하

<sup>33</sup>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당국은 5개항에 합의하였다. 5개항의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남북한 통일방안의 상호 이해(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셋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험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다섯째, 남북 당국자회담의 상설화로 당국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통일관련 구호의 10% 내외 정도의 빈도로 꾸준히 노동신문에 등장한다. 그런데 등장하는 시기는 주로 1월과 6월에 몰려 있다. ‘6·15관련 통일구호’가 1월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노동신문이 1월에 공동사설을 비롯하여 해당연도의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의 관철을 통일의 과업으로 강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6월에 ‘6·15관련 통일구호’가 몰려 있는 이유는 2000년 6월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을 기념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호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6·15관련 통일구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에 2005년까지 주로 “북남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기치’라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운다. 그 중에서도 2002년은 “6·15선언의 기치아래 통일의 문을 여는 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2003년과 2005년은 각각 6·15공동선언 3돌을 맞는 해, 6·15공동선언 5돌을 맞는 해로 소개한다. 그러다가 2006년 6월에는 ‘6·15통일시대’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에는 이 용어를 활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6·15통일시대를 빛내이자”<sup>34</sup>라고 주장하면서 남한 내 “파쇼잔당”이 6·15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sup>35</sup>”, “6·15통일시대에 맞게 조선의 자주평화통일위업에 대한 런대성운동을 세계적 범위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sup>36</sup>” 등 북한의 전통적 통일담론과 6·15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 구호가 등장하기도 한다.

#### 4. 통일염원구호 분석

통일염원구호는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sup>37</sup>”, “신심과 용기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자<sup>38</sup>”, “조국통일을 향하는 민족의 도도한 흐름을 멈춰 세울 수 없다<sup>39</sup>”, “통일만이 살길이고 조선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다<sup>40</sup>”,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

34 『노동신문』, 2007년 6월 16일.

35 『노동신문』, 2007년 1월 31일.

36 『노동신문』, 2007년 4월 8일.

37 『노동신문』, 1998년 12월 15일.

38 『노동신문』, 1999년 1월 4일.

39 『노동신문』, 1999년 8월 11일.

40 『노동신문』, 2000년 1월 6일.

자<sup>41</sup>”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4>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한 통일염원구호는 31건으로 총 433건의 7.2% 수준이다. 그런데 연도별 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연도의 전체 구호 중에서 통일염원 구호가 20% 이상인 해는 2000년과 2007년 뿐이다. 2000년은 총 25건 중에서 32.0%인 8건이 통일염원구호였고 2007년은 총 19건 중에서 21.4%인 4건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 구호로 분류된다.

10년 동안 유독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과 2007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상회담과 통일염원구호의 상관성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2007년 10월에 있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노동신문에 나오는 통일염원구호 4건의 게재일자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07년 9월 28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통일위업에 한결같이 펼쳐나서자  
 2007년 10월 3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바치자!  
 2007년 10월 4일: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2007년 10월 12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민족최대의 소원

## 5. 김일성, 김정일 통일지도자 구호 분석

김정일 시대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을 통일지도자로 부각시키는 내용의 구호는 총 433건 중에서 27건으로 전체적인 비중은 6.2% 수준에 머물러 절대적인 숫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2003년을 제외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두 사람을 통일지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구호가 꾸준히 노동신문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10년 동안 나왔던 25건의 구호 중에서 김일성을 통일지도자로 내세우는 사례는 13건으로 48.1%인 반면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내세우는 경우는 14건으로 51.9%를 차지하여 비율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노동신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내세우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표 8>을 관찰해 보면 김일성을 부각시키는 구호는 많아야 한 해에 2건으로 연도별 분포 상황에 큰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김정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내세우는 구호가 3건이었는데 2002년에는 6건으로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sup>41</sup> 『노동신문』, 2006년 8월 18일.

<표 8>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구호’ 중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빈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합 (백분율)
김일성	2	0	0	2	2	0	2	2	1	2	13 (48.1%)
김정일	1	1	1	3	6	0	0	0	2	0	14 (51.9%)
연도별 빈도	3	1	1	5	8	0	2	2	3	2	27 (100.0%)

관련 구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일성을 통일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sup>42</sup> 등과 같이 이른바 유훈통치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구호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령도자를 모신 공지를 안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아래에 상대적으로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를 부각시키는 구호가 많이 나왔던 2001년과 2002년, 2006년에 노동신문이 게재했던 관련 구호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3월 6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공지를 안고 통일위업에 떨쳐 나서자

2001년 8월 21일: 위대한 장군님 이끄시는 자주통일의 한길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2001년 11월 1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나아가자

2002년 1월 15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

2002년 1월 30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자

2002년 3월 7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자주통일이 있다

2002년 6월 14일: 위대한 장군님 령도 따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

2002년 7월 17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주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2002년 11월 12일: 위대한 령장의 선군령도 받들어 조국통일 앞당기자

<sup>42</sup> 『노동신문』, 1998년 5월 5일.

2006년 1월 1일: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리  
 2006년 2월 3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  
 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2001년은 김정일이 ‘신사고’를 주창하면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비교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던 시기인 반면 2002년은 김일성 생일 90회와 김정일 생일 60회, 인민군 창건 70돌을<sup>43</sup> 맞이하여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사가 겹친 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2002년 7월 1일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당국이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북러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위세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2006년은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세우는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이다.

반면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구호를 상대적으로 적게 게재했던 시기에 해당하는 2003년~2005년 기간은 북한 내부적으로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군부대를 집중적으로 현지도했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sup>44</sup> 대외적으로도 이 시기는 북미관계를 비롯하여 국제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달아 북한당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간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신문이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적극 부각시키는 구호를 게재하는 시기는 북한당국이 비교적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갖추고 경제 및 군사적 측면에서 그 위세를 과시할 여지가 있을만한 기간과 일치하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평상시에는 김일성의 유훈인 통일을 관철해야 한다는 방식의 수세적인 구호가 노동신문에 더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sup>43</sup> 북한당국은 1948년 2월 8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다. 그 이후 30년 동안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지켜 오다가 1978년에 이르러 갑자기 “조선인민군”의 창건 일자를 1932년 4월 25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한다. 북한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1932년 4월 25일에 자신들의 수령인 김일성이 일제치하에서 불과 20세의 나이로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만큼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sup>44</sup>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p. 37. 김위원장은 2003년도 전체 90회(2003년 12월 20일 집계)의 공개활동 중 62회(69%)를 군부대 시찰 및 군부대 관련행사에 참석;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p. 42. 김위원장은 2004년도 현지도 및 공개활동 90회(2004년 12월 24일 집계) 중 62회(69%)를 군부대 시찰 및 군부대 관련행사에 참석;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p. 42. 김위원장은 2005년도 현지도 및 공개활동 127회(2005년 12월 22일 집계) 중 49회(38.6%)를 군부대 시찰 및 군부대 관련행사에 참석.

## V. 통일관련 구호의 수신자와 발신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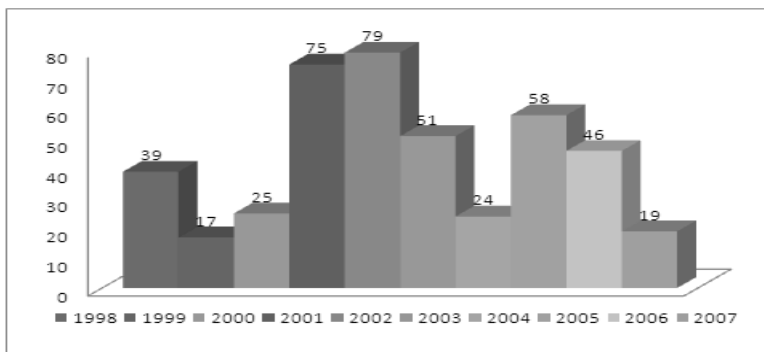
### 1. 김정일 시대(1998년~2007년) 10년 동안 통일관련 구호의 전반적 분포 현황

이 부분에서는 김정일 시대(1998년~2007)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 433건의 연도별 분포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반부 5년과 후반부 5년 기간을 구분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자.

전반부 5년은 1998년~2002년 기간으로 이 시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그 첫 해인 1998년에는 통일관련 구호가 39건으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99년에는 절반 이하인 17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2000년에는 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지만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5건과 79건으로 대폭 상승한다. 10년 동안 연도별 통일관련 구호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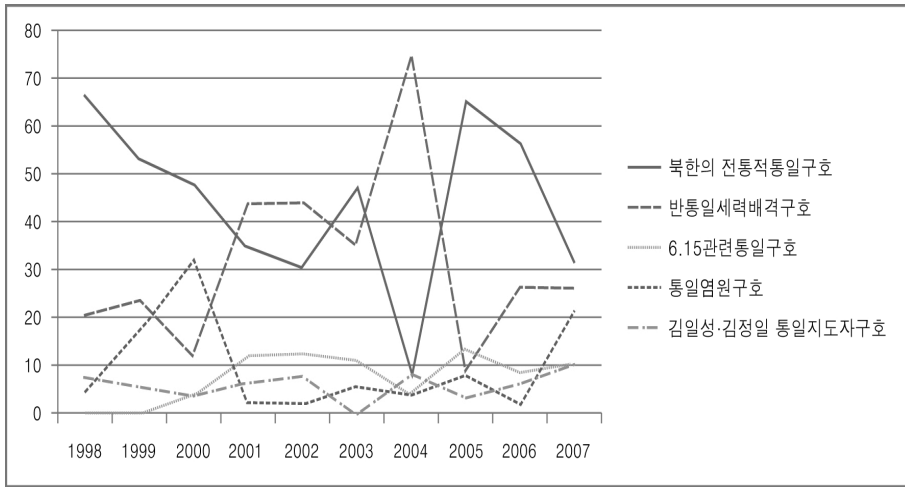
한편 후반부 5년은 2003년~2007년 기간으로 이 시기는 대한민국 참여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그 첫 해인 2003년에는 최고조를 이루던 전년도에 비해 28건이 줄어든 51건의 구호가 노동신문에 등장했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다시 27건이 더 줄어든 24건에 그쳤다. 그런데 2005년에는 34건이 늘어난 58건이 등장하고 2006년에는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숫자로 볼 수 있는 46건이 노동신문에 나왔다. 그러나 2007년 한 해 동안에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는 전년도보다 27건이 줄어든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분포 현황은 <그림 1>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 상황



다음으로 <그림 2>를 보면 통일관련 구호 5개 항목이 지난 10년 동안 각각 연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는 1998년과 2005년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통일세력 배격구호’의 비율은 2004년에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6·15관련 통일구호’를 비롯한 3개 항목은 연도별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통일관련 구호 5개 항목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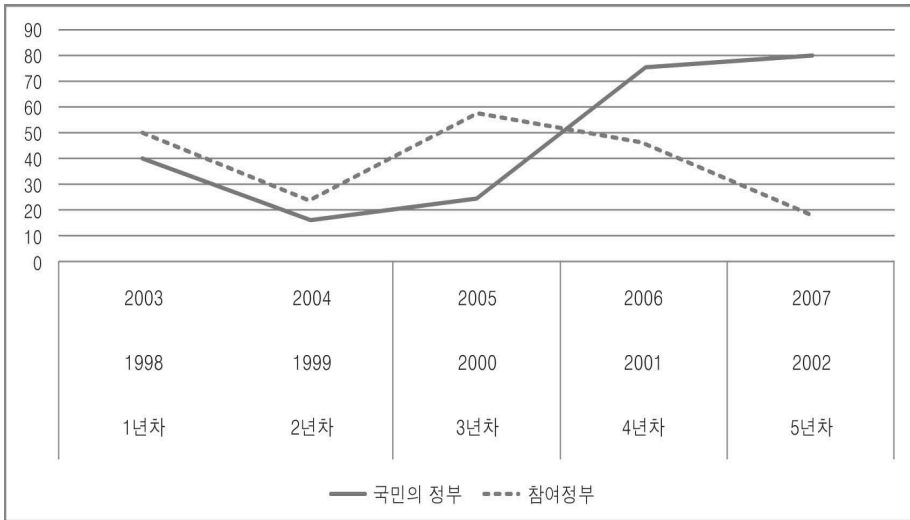


## 2. 통일관련 구호의 수신자

아래 <그림 3>은 김정일 시대 10년 기간을 전반부 국민의 정부(1998~2002) 시기와 후반부 참여정부(2003~2007) 시기로 구분하여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연도별 통일관련 구호의 분포 현황을 비교한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구분 없이 집권 첫 해에 비해 두 번째 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가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급락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 정부 후반부에는 노동신문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통일관련 구호를 게재했던 반면 참여정부 후반부에는 10년 내 최저 수준의 통일관련 구호가 등장한다.



<그림 3>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노동신문의 통일관련 구호 분포 현황



<그림 3>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구호는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 이외에도 남한주민이나 당국을 2차적 수신자로 상정한 상태에서 발신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와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부분에서 남한의 진보세력이나 보수세력, 남한당국, 미국 등을 2차적 수신자로 하는 구호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는 북한당국이 남한의 진보세력을 2차적 수신자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당국이 이른바 ‘연북정책’ 노선을 추진할 때 북한당국은 ‘전통적 통일구호’를 발신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통일사업의 전술방식이 남한에 존재하는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과 힘을 합치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중에는 단순히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당국의 공식적인 통일담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그 개별내용의 행위주체가 북한과 북한주민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전민족의 대단결로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sup>45</sup>의 경우 수신자는 전민족이고 메시지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그리고 해외동포가 단결하여 안팎

<sup>45</sup> 『노동신문』, 1998년 5월 2일.

의 분렬주의세력들에 대한 배격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지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메시지 내용도 해외동포를 포함한 전민족의 대단결을 촉구하며, 수신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안팎의 분렬주의자인 남한의 보수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단위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시는” 범위를 포함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런 유형의 구호를 발신할 때 북한당국은 분명히 북한주민 이외에 2차적 수신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는 북한당국이 대남 강경노선을 따라 남한의 보수세력을 비판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미국을 규탄하고 적대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으로 노동신문에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국민의 정부 후반부인 2001년과 2002년에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당시 관련 구호는 주로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과 연합하여 미국에 대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참여정부 후반부에 해당하는 2005년~2007년 기간에는 주로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구호는 참여정부가 북한당국과 연합하여 남한의 보수세력과 미국을 상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0년에 처음 등장한 뒤 매해 10% 내외의 비중으로 꾸준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6·15관련 통일구호의 경우에도 1차적 수신자 이외에 2차적 수신자를 찾아볼 수 있다. 원래 북한의 통일담론은 전통적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 민족대단결 5대방침, 우리민족끼리 등 민족과 자주, 통일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6·15공동선언에 고스란히 등장한다. 6·15공동선언 제1항에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가 포함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과 북측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서로 인정하였으며, 제4항에 경제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를 합의하였다. 물론 제3항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적 사안이 포함되었으나, 북한에서 6·15선언의 정신을 강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6·15선언은 그 내용이 “자주”, “우리 민족끼리”로 의미가 치환되거나, 약속된 경험투자의 이행에 대한 촉구 등으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sup>46</sup>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당국에서 6·15관련 통일구호를 주장하는 것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국민의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남한당국과

<sup>46</sup> 예를 들어 2001년 북한은 부시정권 1기 출범시, 남한의 외교행태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2001~2002』 (서울: 통일연구원), p. 72.

주민이 경험과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6·15통일시대라는 표현을 내세워 북한의 기존 논리와 6·15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5년까지는 “6·15선언의 기치따라”,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라고 표현되었다면, 2006년부터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6·15통일시대를 빛내이자”로 표현되면서 김정일의 유훈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가자”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기존 담론을 6·15담론과 등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구호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유형의 구호는 우선적으로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에게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6·15관련 통일구호는 곧 김일성의 유훈에 해당하는 전통적 통일담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당국이 이런 유형의 구호를 발신할 때에는 단순히 6·15관련 통일구호의 의미가 “장군님의 통일사업에 대한 정치적 행보의 족적”이라는 공개적인 주장을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면에 남한 정부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논리에 동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노동신문에 나타나는 통일관련 구호의 수신자가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 이외에도 남한당국과 주민을 2차적 수신자로 상정한 상태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라는 점을 확인하게 해 준다.

### 3. 통일관련 구호의 발신 목적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관련 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을 5개 항목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통일전선전술의 목적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당국은 노동계급당인 공산당과 남한의 모든 세력의 정치적 연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통적 통일구호’를 통해 이 목적으로 달성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당국이 대남혁명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북한당국이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에게 내부단합을 촉구하는 한편 체제의 적이 누구인지 명시함으로써 경제난과 통일이 지연되는 원인을 외부세력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2차적 수신자인 남한주민과 당국을 향해 남북한의 민족공조가 한미동맹 관계를 대치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보여준다.

‘6·15관련 통일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김정일 시대에 새로 등장한 6·15관련 통일구호는 곧 김일성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전통적 통일담론의 발전된 형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통일염원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에게는 당장 시급한 경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통일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주민에게는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정치적 색채를 탈색하여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 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일단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구호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북한사회에서는 통일을 비롯하여 모든 사안에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점에서 일차적인 발신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김정일을 새로운 시대의 통일지도자로 부각시켜 그 아버지인 김일성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인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 4.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빈도 결정요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적 출범이 시작되는 1998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구호를 전수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통일관련 구호는 정치 및 경제 관련 구호와 달리 연도별 빈도 분포가 전체의 10%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sup>47</sup> 또한 앞서 제시한 <그림 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일 시대 10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면 통일관련 구호는 후반부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마저도 2005년 이후 2007년에 이르는 3년 동안 통일관련 구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신문에서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통일구호의 메시지가 정치나 경제부문 구호에 비해 낮은 중요도를 지닌다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가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빈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sup>47</sup> 권혜진,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선전구호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내부 변수와 남북관계 변수, 그리고 국제관계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관련 구호의 증감을 결정짓는 요인을 북한내부 변수와 남북관계 변수, 국제관계 변수 등 세 가지라고 할 때 세 변수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연도별 통일관련 구호의 빈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시기에는 통일관련 구호는 전반적으로 급감하거나 전년대비 그 빈도가 저조한 양상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1999년과 2000년, 2004년, 2006년, 2007년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는 연도별 분포에서 ‘북한의 전통적 구호’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다만 2004년은 예외적으로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왔을 따름이다.

둘째, 남북관계는 좋은데 북미관계는 악화되던 시기인 2001년과 2002년, 2003년, 2005년에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나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가 노동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과 2002년에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해당 구호를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반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과 2005년에는 ‘북한의 전통적 구호’가 최고 빈도를 나타내면서 주로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이 1998년처럼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거나 2006년과 같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스스로 군사적 위상을 높혔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 구호’와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부문’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빈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넷째,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사스러운 해에는 전반적으로 통일관련 구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김일성 90회 생일과 김정일 60회 생일, 인민군 창건 70돌에 해당하는 2002년과 당 창건 60돌이면서 조국해방 60돌이었던 2005년에는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가 증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2002년에는 미국의 부시정권을 비판하는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많은 반면 2005년에는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와 ‘6·15관련 통일구호’ 등 두 개 항목이 전체 구호의 8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1년의 경우, 김정일이 대내적·대외적(북러, 북일정상회담)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인 한해였다. 북한 자체의 자신감 강화인 셋째요인에 부합된다. 2003년의 경우, 2002년도 부시

정권의 악의축 발언, KEDO 중유지원중단, 북한의 미사일운반 선박 나포 등, 악화된 북미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통일구호는 대내외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5년만이 악화된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연도별 구호의 빈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증감은 북미관계 속에 남북관계의 수준이 종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국제질서의 힘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한반도는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증진이라는 탈냉전의 힘이 주도하였으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는 미국과 이른바 불량국가 면모를 보이는 북한 사이의 적대적 구조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증감도 이런 결과를 반영한다. 이런 양상을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2000년 이전에는 남북관계가 통미보남 정책으로 인해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던 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우리민족끼리’의 논리로 북미관계에 종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김정일 시대에 해당하는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 동안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에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구호를, 얼마나 자주 제시하였는가 하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를 전수조사한 뒤 10년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특징을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5단계 모델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커뮤니케이션의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도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구호의 수신자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김정일 시대(1998~2007)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는 총 433건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통일관련 구호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는 2002년이었고 가장 적게 등장한 시기는 1999년이었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시대 10년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정부(1998~2002)와 참여정부(2003~2007)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분포에서도 국민의 정부 시기와 참여정부 시기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창기인 1998년에 노동신문은 총 433건의 통일관련 구호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39건을 실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10년 동안 가장 많은 통일관련 구호가 노동신문에 등장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첫 해인 2003년에 노동신문은 국민의 정부 초창기보다 더 많은 51건의 통일관련 구호가 나왔으나 그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겨우 4.4%에 불과한 19건의 구호만 등장한다. 이런 사실은 결국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는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 이외에 2차적 수신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와 ‘반통일세력 배격구호’ 부분에서 남한의 진보세력이나 보수세력, 남한당국, 미국 등 2차적 수신자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관련 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은 5개 유형의 구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1차적 수신자인 북한주민과 2차적 수신자인 남한주민과 당국, 미국을 상대로 북한당국이 구호를 발신하는 목적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연도별 빈도 현황은 북한내부 변수와 남북관계 변수, 그리고 국제관계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시기에는 통일관련 구호는 전반적으로 급감하거나 전년대비 그 빈도가 저조한 양상을 나타낸다. 남북관계는 좋은데 북미관계는 악화되던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나 ‘반통일세력 배격구호’가 노동신문에 많이 등장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이 스스로 군사적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김일성·김정일 통일지도자 구호’와 ‘북한의 전통적 통일구호 부문’이 상승한다.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사스러운 해에는 전반적으로 통일관련 구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통일관련 구호의 증감은 북미관계 속에 남북관계의 수준이 종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국제질서의 힘을 보여준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 참고문헌

- 권혜진. “노동신문 구호를 통해 본 북한사회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일성. 『통일전선 사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안찬일. “북한의 민족공조의 본질과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3 춘계세미나, 2003.
- 와다 하루코.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유재천.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정우. 『담론의 공간-주체철학에서 담론학으로』. 서울: 민음사, 1994.
-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1호, 2003.
- 최진욱. “남북관계 60년과 통일담론.” 『북한경제리뷰』. 2008년 2호, 2008.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1998년~2007년.
- Lasswell, H. 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deas; A series of Addres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8.
- Pecheux, Michae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London: Macmillan, 1982.
- Reboul, Oliver. *Langu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Skinner, Quentin. “Social Meaning and the Explanation of Social Action,”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1988.
- 『노동신문』.
- 『평양방송』.



## Abstract

# North Korean Official Discourses on the Issue of Reunification during the Kim Jong-il Era (1998-2007)

*Seok-Hyang Kim and Hye-Jin Kwon*

North Korea is clearly a nation of propaganda which engulfs its citizens in numerous slogans in their everyday live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different types of slogans on reunification and the frequency of their circulation in the Korean Workers' Party's Rodong Sinmun during the Kim Jong-il era between 1998 to 2007. The issue of reunification is one which North Korean regime has continually emphasized, albeit perhaps only nominally. Since the start of the Kim Jong-il era, each year, the Rodong Sinmun has produced and propagated various reunification slogans. Would their substance and frequency of distribution be similar in every year? If these aspects of the newspapers' reunification slogans vary each year, what is the cause of such differences? Who would be the designated receiver of those slogans and what would be the North Korean regime's purpose of sending them under the Kim Jong-il era?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 reunification slogans that appear in the Rodong Sinmun and analyzes its annu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using the five-step Lasswell Communication Method;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time period from January 1, 1998 to December 31, 2007. In conclusion, the study shows that the reunification slogans published in the Rodong Sinmun are not only intended for North Korean citizens, but also for other audien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citizens and the US government. Furthermore, throughout the past ten years of the Kim Jong-il regime, the substance of these slogans and the frequency of their appearance vary according to North Korea's intent to regulate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n relations.

**Key Words:** North Korean Official Discourses, the issue of reunification, the Kim Jong-il era, propaganda, types of slogans

#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를 중심으로\*

이 상 숙\*\*

I. 서론: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III. 북한 문학사에 나타난 진달래

II. ‘진달래’ 이미지의 형성의 과정  
IV. 맺음말

## 국문요약

진달래는 우리 현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학적 소재이다. 현대시의 진달래 이미지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한시와 시조 등의 고전시기에서부터 이미 나름의 의미를 가진 소재로서 존재하였다. 때문에 진달래꽃의 이미지 분석은 우리 시의 지속되는 소재적 전통과 이미지의 변화라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진달래꽃이 북한 시에서는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시적 소재로서의 진달래 이미지가 정치적, 사상적 여건에 따라 남한의 시 문학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확인하였다. 북한 시에 나타난 진

달래는 전설의 시적 재현이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었다.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선구자적인 꽃으로서, 또 선군정치의 상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진달래라는 문학적 소재는 북한문학 속에서 정치적 상징과 역사적 일화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문학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국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 드러내기 또한 필요하다. 남북 문학을 나란히 대조하고 비교하는 작업에는 동질성을 찾는 것은 물론 이질성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진달래, 북한 시, 철령, 선군 팔경, 소재적 전통

## I. 서론: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달래는 우리 시문학에서 매우 강한 상징성을 가진 소재이다. 시조(時調)와 한시(漢詩)에서 주로 망국(亡國)의 한(恨)이나 죽음으로 갈라지는 이별의 상징으로 원용

\* 경원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이 연구는 2008년 경원대학교 신입교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임. 이 논문의 착상은 필자의 평론 “세 개의 ‘진달래꽃’ 과 북한문학” (『21세기 문학』, 2008. 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논문의 일부 인용시와 분석은 앞선 평론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것임을 밝혀 둔다.

되었던 진달래는 현대시에서도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소재로 활용된다. 고전시가에서 찾을 수 있는 한과 이별의 의미가 현대시에도 그대로 재현되거나 변주되는 과정을 통해 ‘진달래’ 이미지에 부여된 상징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진달래’ 이미지의 강력한 현대적 변용일 뿐 아니라 진달래 이미지의 현대적 의미와 상징성으로 고착되었다. 김소월 이후의 시문학에서 ‘진달래’가 사용될 때는 그 누구도 김소월의 ‘진달래’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인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김소월의 ‘진달래’는 시의 창작과 분석, 감상의 제 과정에 개입되며 새로이 쓰여진 시의 ‘진달래’는 김소월 ‘진달래’의 차용과 변주 혹은 부정으로서 인식된다. 이는 T.S 엘리엇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기본적 정의의 한 범례(凡例)가 될 만하다. 강한 상징성을 가진 특정 문학적 소재가 확보하는 의미 영역과 문학적 파급력은 스스로 이미지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체처럼 확대되고 변주된다. ‘진달래’의 강한 이미지가 동시대의 시인과 시에, 그리고 독자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인과 시에서 같게 혹은 다르게 차용되고 변주됨으로써 스스로의 생명력을 확보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북한시에 나타난 진달래이다. 분단 초기의 남북한 문학은 분단 이전까지의 문학, 즉 고전문학과 초기의 현대문학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 드러나는 이질성과 현격한 차이는 ‘진달래’ 이미지에 서도 다르지 않았다. 고전시가에서부터 형성된 견고한 전통적 이미지 체계를 가진 ‘진달래’로 드러나는 시적 의미와 활용 양상은 현저하게 달라 보인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남북 문학의 차이를 주제나 이론 체계, 이념과 문학의 거리와 같은 통어하기 힘든 대명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의미, 이미지 구축의 과정과 활용 등 좀 더 문학적 차원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이 목표는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 이미지 구축의 과정을 구명하는 것이지만 후속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북한 시와 남한 시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시 이질성과 동질성이라는 난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 소재 시편과 그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소개할 것이다. 엄호석의 1957년 평론집 『김소월론』<sup>1</sup>에 실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평가와 1959년 『조선문학통사』<sup>2</sup>가 말하는 박팔양의 『진달래』, 2006년 북

<sup>1</sup> 엄호석, 『김소월론』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sup>2</sup> 언어문학연구소 문학 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한의 언어학자 김영황이 『민족문화와 언어』에서 평가하는 김정일의 가사 「진달래」가 주된 대상이며, 여기에 ‘진달래’를 소재로 한 다른 북한 시편과 일반 독자의 투고 시편 또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북한 시에서 ‘선군(先軍)’의 소재로 부각되는 ‘진달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화어 학습』 등의 문예지와 학술지는 물론이고 『금수강산』, 『조선여성』 등의 일반 잡지에 실린 ‘진달래’ 관련 기사도 참조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쓰여진 엄호석의 평론, 『조선문학통사』의 문학적 관점, 2005년 류만의 평론 「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sup>3</sup>, 2006년 김영황의 『민족문화와 언어』는 북한문학 안에서의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며 그 변화의 저변을 읽는 것은 북한문학을 좀 더 섬세하게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시각을 더해주리라 기대한다.

## II. ‘진달래’ 이미지의 형성의 과정

### 1. 진달래의 전통적 정서

진달래꽃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꽃으로서 인정받고, 전통적 정서와 이미지를 가진 문학적 소재로 간주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른 봄 우리 산천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진달래꽃은 두견화(杜鵑花), 척족(躑躅)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두견화나 척족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불리던 때부터 진달래가 지녀온 나름의 정서와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촉나라 임금 망제가 패망한 후 복위를 꿈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그 녀이 두견새가 되었고, 두견새는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귀촉(歸蜀) 귀촉(歸蜀)’ 하면서 피맺힌 울음을 울었고, 그 때의 피가 스민 땅에서 두견화라는 붉은 꽃이 피었다는 것이 두견화의 전설이다. 두견화는 동양의 시가(詩歌) 문학에서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한(恨)이 세계를 바꾸고 몸을 바꾸어서까지 나타나는 슬픔과 원한의 상징인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진달래는 사실 잎 없이 꽃이 먼저 피는 꽃으로, 힘들게 겨울을 난 메마른 산 중에서 푸른 잎 없이도 흐드러지게 핀다. 때문에 진달래는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서럽기도 했을 것이다. 보릿고개를

<sup>3</sup> 류만, “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 『실천문학』 (서울: 실천문학사, 2005).

넘어 힘겹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진달래는 고비를 넘었다는 안도의 심정을 불러 일으키는 물론 그간의 고통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춘궁기의 허기를 채워줄 리 없지만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다. 춘궁기에 풀뿌리와 봄나물을 찾아 나선 아이들이 진달래를 따먹으며 마음과 몸의 허기를 달랠 것이고 그 추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련한 향수로 기억되곤 하였다.

척촉이라는 진달래의 다른 이름이 인상적으로 쓰인 정지용의 시 「홍역(紅疫)」을 떠올려 본다. 겨울밤의 정취를 불, 유리, 눈보라, 홍역 등의 대조적이면서도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낸 수작(秀作) 「홍역(紅疫)」에는 진달래가 ‘척촉’으로 표현되었다. “눈보라는 꿀벌떼처럼 / 닝닝거리고 설레는데, / 어느 마을에서는 紅疫이 躑躅처럼 爛漫하다”는 마지막 구절은 현대시 속에 나타난 진달래 이미지의 한 전형을 추가할 만한 문학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 홍역으로 들뜬 어린애의 열꽃 핀 몸뚱이를 연상시킨다. 또, 눈보라 속에 뜨겁게 피어나고 번져가는 붉은 꽃의 아름다움과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두려움이 겹쳐지는데, 여기서 독자들은 아름다운 것과 두려움의 경계를 알지 못하며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정서적 미감과 충격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는 문학적 전통으로 구축된다. 정지용의 「홍역」 이후에 현대시 독자들은 홍역(紅疫)을 소재로 하거나, 척촉(躑躅)이라는 인상적인 도상(圖像)의 글자를 사용한 시를 접할 때 ‘아름다움이 두려움으로 전화되고, 두렵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두려워지는’ 정서적 경험을 떠올릴 것이며 이러한 회감(回感)은 그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독자의 감상과 해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반응이다.

한(恨), 반가움, 허기진 봄, 흐드러진 아름다움 등의 이미지를 거느린 진달래꽃이 우리민족이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문학적 소재라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에 우리민족의 정한을 우리 고유의 울조에 맞게 실어 표현한 대표적인 시이다.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분단되기 이전에 쓰여진 이 작품은 분단 후 남과 북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분석된다. 이 분석의 차이만 살피더라도 남북 문학의 지향과 분석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진달래와 선군(先軍)

북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진달래에 대한 유래담은 동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것과 선군문학의 범주 아래 등장하는 ‘김정숙 꽃’과 김정일이 자주 찾는 ‘철령의

진달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동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진달래 유래담에 신빙성있는 전거(典據)가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주로 남녀간의 애뜻한 사연으로 설명된다. 동화의 경우 마녀의 마술에 걸린 처녀 '달래'와 달래를 구해 준 '바우'의 전설에서 유래되어 “연분홍 눈꽃 속에서도 꽃망울이 부푸는 꽃”, “있도 피기 전에 봄을 먼저 부르는 사랑하는 고향의 꽃”으로 드러난다.<sup>4</sup> 또, 백두산 일대 천지 주변 마을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기다리는 아낙네들이 진펄로 고생할 남자들을 위해 심어둔 “진펄의 달래각시 꽃”이 진달래로 바뀌어 불렀다는<sup>5</sup> 유래담도 전해진다. 이 유래담의 서두는, 고산지대인 백두산 일대에 봄철이면 산을 뒤덮도록 피는 것이 진달래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5호 물동’과 ‘삼지연못가’, ‘대흥단 등판’ 등 습기가 많은 땅에 더 많이 피어난다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5호 물동’과 ‘삼지연 연못’, ‘대흥단 등판’ 등은 모두 김일성 일가 ‘투쟁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되는 지명이다. 더욱이 ‘5호 물동’과 ‘삼지연 연못’은 김일성이 항일 운동 시기에 진달래 꽃을 발견하고 기뻐하자 김정숙이 그 꽃을 바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를 가진 지명(地名)이다. 그렇다면 이 유래담은 옛 문헌이나 혹은 민간 채록에 의해 밝혀진 전거에 의거하기보다는 진달래 이미지를 선군문학에서 활용하기 위해 동원된 ‘현재를 위한 역사성 부여의 기획’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삼지연못가는 항일 운동 시기에 김정숙이 김일성에게 진달래를 한아름 선물했다는 일화에서 연원하여 진달래와 김정숙, 김일성, 투쟁의식으로 이어지는 이미지 연상의 구조가 형성된 장소이다.<sup>6</sup> 북한문예지에는 4월에는 김일성, 2월에는 김정일에 관한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12월에는 김정숙에 대한 추모와 찬양의 작품이 많은데, 12월이라는 추운 계절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김일성일가를 돌보고, 북한주민을 돌보는 김정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김정숙의 이미지는 진달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sup>7</sup> ‘물동 5호’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sup>4</sup> “바우와 진달래,” 『아동문학』 (2004), pp. 53-57.

<sup>5</sup> “진달래의 유래,”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2003), pp. 34-35.

<sup>6</sup> 김성희, “12월의 진달래,” 『청년문학』 (2005), p. 24.

아 진달래 진달래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그 봄날  
아름다운 삼지연못가에서  
수령님께 삼가 드린 어머니의 기쁨  
『12월의 진달래』 부분

<sup>7</sup> 김성희, “어머니와 진달래,” 『청년문학』 (2004), p. 15.

김일성과 김정숙의 일화에 등장하는 진달래는 선군 문학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김정일에 관한 것인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날과 조선인민군 창설 기념일에 철령을 찾아 군인들을 격려한 것을 많은 시편에서 꾸준히 반복하고 인용하며 시상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sup>8</sup>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라는 험준한 최전선 철령을 자주 찾는 김정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들의 주된 내용인데 그 저변에는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강조하고 군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의 통치 기반과 군대국가로서의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철령의 철쭉이 전하는 이야기」<sup>9</sup>에 최근의 서정시 몇 편<sup>10</sup>이 인용되었는데, 그 시들에 형상화된 철쭉은 “항일의 녀장군이신 김정숙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담고 있으며 장군님의 선군길을 축복해준 꽃이라고”<sup>11</sup> 평가되고 있다. 선군 시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중요한 이미지로서 진달래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철령을 “전선과 후방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철령을 넘어서면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장이며 언제 총포성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최전선”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험한 곳을 자주 찾는 김정일의 모습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는 늘 김정일이 철령에 많이 핀 진달래나 철쭉을 반가워했다는 일화, 진달래를 보고 어머니 김정숙을 떠올렸다는 일화가 덧붙여진다.

철령과 김정숙의 이미지가 결합되는 양상은 비단 문학 작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이나 일선 근로자의 생활 수기에도 그런 일화가 등장하고 ‘철령’은 곧 김정숙, 어머니,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 “인민군대 원호의 아름다운 소행” 등에서도 이러한 ‘진달래’가 곧 ‘선군’ 이미지로 구축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이 외에도 각종 문예잡지에 시<sup>13</sup>와 가사<sup>14</sup> 등

<sup>8</sup> “철령의 철쭉이 전하는 이야기,” 『금수강산』 (평양: 오늘의 조국사, 2006), p. 19.

<sup>9</sup> 위의 글.

<sup>10</sup> 최정옥, “철령의 철쭉꽃” (2005); 리향식, “철령척추련가” (2005); 신문경, “붉은 꽃, 붉은 령” (2005)을 예로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출전은 밝히지 않았다.

<sup>11</sup> 심상호, “선군의 상징인 철령에 대한 시적 형상,”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p. 19-21.

<sup>12</sup> 기자(특과 기자 류광치), “철령의 어머니: 고산군 읍초급녀맹위원회 녀맹원 전순희 동무,” 『조선 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5), pp. 32-33.

<sup>13</sup> 리국석, “철령의 진달래야,” 『청년문학』 (2004), p. 28; 안향진(공화국영웅 안동수의 딸), “선군 민족진달래로 붉게 피리라,”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p. 26-27; 리옥순(조선인민군 군관), “철령의 진달래,” 『천리마』 (1998), p. 66; 류민호, “철령에 올라,” 『청년문학』 (2005), p. 19.

시<sup>15</sup>의 소재와 주제로써 철령의 철쭉과 진달래를 활용하고 이를 김정일 찬양과 선군 찬양으로 연결하는 작품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소개되고 있다. 또, 진달래와 김정숙의 일화를 주제로 한, 200여 면에 달하는 장편서사시가 제작되기도 하였다.<sup>16</sup> 이 서사시는 김정숙이 머슴살이하던 북남과 함께 후방의 ‘사슴골 밀영’을 떠나 군복 600벌을 짓고 허약자와 부상자를 돌본다는 내용이다. 김정숙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김일성이 진달래를 보며 하던 말을 떠올린다. 김일성은 진달래를 꺾어 들고 “모진 바람을 이겨내는 이 꽃처럼” 항일전에서 “혁명을 꽃피우는 / 조국의 진달래”가 되라고 병사들을 고무하였고 김정숙은 이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맺음시』에는 진달래가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김일성에게 바쳐진 꽃으로 드러나 있으며 해방을 이끈 투사들, 그 중에서도 김정숙을 상징하는 꽃으로 활용된다. “충성의 꽃”, “백두의 진달래”, “조국의 진달래”, “행복의 꽃”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진달래는 항일투쟁기의 ‘투쟁 정신’, ‘투사’, ‘충성’이라는 상징성을 덧입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문학이 과거와 역사를 현재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고와 연상 전략의 전형적 예가 될 수 있다. 진달래라는 상징물을 매개로 기억을 되살리는 회고의 전략과 과거의 진달래와 현재의 진달래를 동일시하는 전략 즉 상징물의 동일성을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으로 치환하는 유사성에 기반하는 연상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달래’라는 자연물에 부여된 역사적, 문학적 의미조차 남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 III. 북한 문학사에 나타난 진달래

#### 1. 박팔양의 『진달래』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사가 류만은 『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에서 김소월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공통적인 평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김소월은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상징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경향을 나타냈지만 기본적으로는 1920년대 사실주의 시문학을 개척한 시인의 한 사람이며 민요풍의 시창작

<sup>14</sup> 강승제, “철령의 철쭉아,” 『청년문학』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p. 20.

<sup>15</sup> 손은희(강원도 원산사범대학 어문학부 학생), “철령의 진달래야,” 『아동문학』 (2003), p. 3; 장용환, “철령의 진달래야,” 『아동문학』 (2001), p. 5.

<sup>16</sup> 서사시 “조국의 진달래,” 『문예출판사』 (1980).



으로 현대 자유시 문학 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한 개성이 뚜렷한 서정시인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북한문학이 김소월을 사실주의 시인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김소월시의 민요적 울조와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소월의 민요적 울조란 남한의 학계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온 바이고 ‘독특한 개성’이란 논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사실주의’라는 표현일 것이다.

엄호석은 『김소월론』에서 김소월이 가진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면모를 주로 김소월의 시론(詩論)인 『시혼(詩魂)』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특징적인 것의 선택 즉 사실주의적 일반화, 전형화의 특징에 대한 문제”로서 “평범하고 사소한 현상들도 그것이 일정한 생활의 진리와 미적 본질을 표현하는 것일 때에만 노래할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는 평범하고 사소한 감정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표현해내는 김소월의 장점을 부각한 것이다. 문학작품을 당대 현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더 나아가 계급성, 인민성, 당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일반 이론이고 보면, 아래에 인용된 엄호석의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평가한 부분에서 사실주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봉건적 유습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조혼의 결과 당연하게 일으켜진 사랑의 파탄 앞에서 선 녀성의 비극적 운명, 필사이도 없이 지는 진달래꽃의 흩어지는 운명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감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동시에 자기를 역겨워 갈라지는 남편을 오히려 고이 보내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인간성, 평생을 비바람에 시달리는 진달래꽃의 시련처럼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려는 용감성과 생활 긍정적 의욕, 남편을 생의 벗으로 깊이 신뢰하는 인간적 동등성의 자각, 이 모든 조선 녀성의 넋 속에 깊이 잠재한 정신적 미의 발로와 그 표상을 감축하게 된다.<sup>17</sup>

『진달래꽃』의 시적 정황을 풍습에 따라 조혼(早婚)하였다가 남편에게 버림 받는 아내가 남편을 고이 보내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가 쓰여진 20년대의 모순을 조혼이라는 봉건적 풍습에서 찾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주의를 강조하는 비평적 관점이다. 남편을 보내는 아내의 형상에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인간성’, 시련을 이기는 진달래꽃 같은 ‘용감성과 생활 긍정적 의욕’, ‘인간적 동등성의 자각’ 등의 정신적 아름다움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조선 여성이 간직하고 있는 아

<sup>17</sup> 엄호석, 『김소월론』, pp. 84-85.

름다움의 표상이라는 것이 엄호석의 설명이다. 1958년은 소련에서 시작된 민족적 특성론에 대한 비평적 논의가 북한문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로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품성(品性)’을 발굴하고 그것을 작중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수렴되던 시기이다. 이때의 많은 시와 소설, 연극 등의 문학 장르에서는, 강인함, 용감성, 근면성, 인간애 등을 갖추고 ‘계급성’에 투철하고 ‘당성’을 키워나가는 ‘인민’의 형상을 그리는데 몰두하였었다. 당시의 비평적 관점이 엄호석의 『진달래꽃』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 엄호석의 『진달래꽃』 평가에는 앞서 언급한 ‘진달래’가 가지는 우리 문학의 전통적 함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두견, 척촉, 친근한 꽃, 유년시절의 허기를 달래던 꽃 등의 이미지는 전혀 상기되지 않는 반면 ‘비바람에 시달리’며 시련을 이기는 강인한 이미지만을 진달래꽃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부분은 시 『진달래꽃』이 민족의 고전으로서 가지는 다양한 이미지와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 문학적 전통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환기시키지 못하는 협애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엄호석이 진달래꽃에 부여한 ‘강인한 정신’은 박팔양의 시 『진달래』 해석에서 더욱 강조된다. 엄호석이나 『조선문학통사』에서는 제목을 『진달래』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 중학교에서 이 시를 『진달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한다. 또, 1992년 출간된 박팔양의 시선집에도 『진달래』라는 제목에 “봄의 선구자를 노래함”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작품 말미에 1930년 작이라고 표시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이 시의 원제목은 「너무도 슬픈 사실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이다. 언제부터 제목이 바뀌어 인용되고 의미 부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문학사나 평론에는 작품의 제목이나 본문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인용되는 예가 있기도 하고, 특히 시의 경우 텍스트 자체가 원본, 정본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또한 남북의 문학사를 한자리에서 논의할 때 해명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전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 문학사가들이 제시한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으리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산 허리에  
 쓸쓸히 피어 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 빛 진달래

<sup>18</sup> 『박팔양 시선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pp. 35-36.

꽃을 보셨으리다.<sup>19</sup>

(中略)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외다,  
그는 봄 소식을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그 얽은 꽃잎이 짐은  
선구자의 불행한 수난이외다.<sup>20</sup>

7연에 이르는 긴 시중 4연을 인용하며 엄호석은 ‘<진달래>의 새 시대의 선구자, 혁명 투사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얼마나 인간 정신의 고귀성과 인도주의 정신의 깊은 구현을 발견하는 것인가’라고 감탄하고 있다. 이른 봄에 피는 진달래를 봄소식 전하는 예언자에 비유하고, 비바람에 진달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혁명투사의 수난에 비유한다.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다 비바람에 떨어지는 진달래 같은 투사의 희생과 불행한 생애는 ‘만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업에서 희생되는 자기 멸각(滅却) 속에서 오히려 생의 광채를 발하는 인류 해방에 바친 자기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고 광명으로 보상되리라는 신념으로 불타오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언자로서의 삶이나 투사의 희생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가장 큰 지향이라면 그것이 굳이 진달래꽃이 아니어도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문학통사』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진달래 꽃은  
오려는 봄의 모양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찬 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외다.  
(오래 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sup>21</sup>

오래 피는 꽃보다 비바람에 떨어질지라도 먼저 피는 진달래가 진정한 꽃이라는 칭송은 곧 사회주의라는 새 시대를 예언하고 그를 위해 살다간 선구자에 대한 찬가와 다르지 않다. 『조선문학통사』는 ‘선구자에 대한 찬가 그것은 곧 사회주의적

<sup>19</sup> 『조선문학통사(하)』, p. 71.

<sup>20</sup> 위의 책. p. 85.

<sup>21</sup> 위의 책. p. 72.

리상의 견지에서 생활에 대한 전망이었으며, 당대의 지배적 사회 질서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소박하나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관점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문학통사』의 '리상은 현실적 모순의 해결의 담당자'로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 <진달래>는 현실 생활에 대한 이러한 서정적 체험에 기초한다. 이 시가 비극적 음조를 대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여 생활-략관적 전망성에 풍부한 감동적 물결(필자주: 1950년대 북한문학에서는 사잇소리 표현을 위해 홑따옴표를 활용한 바 있다)을 부여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진술에서 초기 북한문학이 지향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생활의 화폭'과 '혁명적 낙관성' 등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비평적 관점이 협애하고 도식적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대로 북한문학이 나름의 이론과 분석 기제를 활용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고민하였던 1950년대 후반이었고 그 이후의 북한문학은 이 정도의 문학적 분석의 깊이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 2. 주체 시대의 「진달래」

최근 발간된 『민족문화와 언어』<sup>22</sup>에서 김영환은 민족어가 민족 문화의 기본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설명한 후, 민족어에 표현된 문화적 내포를 밝히는 것이 '문화 기호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밝히는 것이라 하였다. 그 예로 '조선의 진달래, 봉선화, 민들레 등 민족적 정서가 짙은 꽃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이 1962년 9월 어머니 김정숙을 회고하면서 직접 지었다는 노래의 가사 「진달래」를 분석하고 있다.<sup>23</sup> 김영환의 인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sup>22</sup> 김영환, 『민족문화와 언어』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sup>23</sup> 1960년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진달래의 소재의 작품으로 김정일의 가사 「진달래」를 예로 들었으나, 이 가사가 실린 최초의 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 작품이 1962년 작품으로서 받은 당대의 평가에 대해 논한다기보다는 주체 시대, 선군 시대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2006년의 텍스트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어난 붉은 진달래  
긴긴 밤 찬서리에 피고 또 피어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잇을 어머니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sup>24</sup>

위의 가사는 김정일이 어머니 김정숙과 진달래에 얽힌 일화를 떠올리면서 지었다고 한다. 김정숙이 김일성과 함께 국내로 귀환할 때 '5호물동을 건너 조국땅에 첫걸음을 옮기셨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일 먼저 품에 안은 것이 붉게 핀 진달래였'고 김정숙이 건넨 진달래를 받은 김일성은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고 말한 것을 김정일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어머니가 생전에 사랑하던 진달래를 김정숙의 분묘 앞에 옮겨 심었고 '그날부터 가슴속에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소중히 간직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마음 속에 따뜻한 정과 그윽한 향취를 안겨주'었기에 진달래에 대한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른 것이 이 가사라는 것이다. 진달래 안에는 '붉게 핀 진달래를 그리안고 조국을 한 없이 그리워하시던 항일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더욱더 가슴 뜨겁게 안겨온'다는 것이 김영황의 분석이다. 이 글은 1962년의 텍스트를 2006년에 분석한 것으로 주체문예이론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영황은 이 책을 발간하기 이전부터 민족, 민족어, 문화, 문화기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 이 저작이다. 김영황은 북한학계에서는 흔치않은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자로서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를 비유, 율조, 속담, 문장구조, 사물의 이미지 등 제 언어적 요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어 등 여러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문학적 분석에서는 김일성 가계 이상화와 주체 이념의 형상화에 몰두하는 주체문예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위의 가사를 문학적 텍스트로서 분석한다면 봄소식을 전하고,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어나는 진달래의 이미지는 박팔양의 『진달래』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거기에 김정일의 일화에서

<sup>24</sup> 위의 책, p. 4.

추가된 '못잇을 어머니의 그 모습'은 '조선의 진달래'라는 이미지의 확장을 보이는데 이는 바로 항일여성운동가이다.

북한문학계에서 항일혁명 문학의 전통이 카프의 전통을 대체한지 오래이고 주체문예이론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압도한지도 오래이다. 여기에 북한문학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는 '선군(先軍)'이다. 무엇보다 군이 제일 우선한다는 '선군'이 '주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북한에서도 그러하기를 원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듯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황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현재 북한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의 이슈는 '선군'이라는 점이다. 김영환은 '선군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적 기호로 친금감을 주는 소재로 '오성산'이나 '다박술 초소', '철령' 등을 들고 있다. 아마도 선군문학에서 '오성산'이나 '다박술', '철령' 등은 우리의 '진달래꽃'처럼 유서 깊은 역사적 전거에 기반하여 풍부한 이미지와 정서를 가진 새로운 문학적 전통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문화 정전적 기호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 그리고 선군에 이르는 북한문학의 여정 자체가 어찌면 남북한문학의 거리를 점점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문학은 자신의 것이외의 문학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과 배제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남한 문학 역시 북한 문학을 포용할 여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두 문학의 비교는 만나고 포용하기 힘든 차이만을 확인하는 일이기 일쑤였다. 엄호석, 김영환 등의 글을 소개한 이 글 역시 그러한 예를 하나 더 더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년전 타계하여 지금은 없는 북한문학사학자 류만의 글에는 북한문학의 변화를 감지할 만한 여지가 보인다.

류만 또한 김소월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시와 시대, 사회현실과 거리를 두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시인이었으며 일제하의 모순된 현실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번민하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이별을 슬퍼하고 그리움에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거기에 비애의 감정을 질게 실었을 뿐 그 이별과 그리움이 누구의 것이며 왜 생겨나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월 시의 이별과 그리움의 정이 극한에 이른 비애의 감정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한다. 이는 모든 문학을 계급성과 인민성, 당성의 잣대로 평가하여 '순수한 아름다움'이란 부르조아적인 감정의 독소라고 표현하는 보통의 북한 평론가들에게서 보기 힘든 표현이다. 더구나 이는 그나마 문학적 형상화를 논의할 수 있었던 1950년대 후반의 글이 아니며, 많은 월북 문인 및 운동주에 백석, 김달진의 시까지 가치를 평가하던

1995년의 『조선문학사』가 발간된 후 10년이 지난 2005년의 시점인 것이다. 이 점이 류만이 북한의 다른 평론가들과 다른 면모일 뿐아니라 1960년대 이후에 각종 비판과 숙청으로 문학사의 후면으로 사라진 다수의 월북문인과 식민지 시기 남한 시인들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한 조선문학사 시리즈 집필자로서의 문학적 역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소월, 이태준, 한설야 등의 여러 문인들에 대한 복권과 재평가가 정치권의 기획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행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안에서 발하는 문학사가의 역량과 노력에 존경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통일 문학사의 한 접점을 마련해 주는 노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남한문학계는 북한문학을 포용할 논리를 개발하고 북한문학을 평가하는 노력을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류만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소월이 <진달래꽃>을 쓴 때로부터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도 몇 번을 고래쳐 흐른 세월 속에 여러 시인들과 시작품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삭막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월의 시들은 오늘에 와서도 읽힌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의 시는 우리 시문학의 민족성을 살리고 시 형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서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류만의 마지막 문장을 ‘달라진 세월 속에서도 김소월의 시가 민족성을 살리고 시형식을 풍부하게 한 전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로 읽어 볼 수 있다. 민족성과 시형식 그리고 전통을 언급하는 그의 평가가 우리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듯 남과 북의 말과 표현 또한 변화하였다. 이제 많이 달라진 두 말을 함께 쓰고자 한다면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알고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3. 진달래와 비전향 장기수

북한 시에서 진달래 이미지에 부여된 또 하나의 이미지는 비전향 장기수이다. 북한문학은 2000년 남북 공동 선언 이후 통일 주제 작품들이 양산되었는데 이 중 비전향 장기수의 생애를 다루는 것도 중요한 한 갈래였다. 오랜 세월 자신만의 신념 때문에 고난을 겪고 이제는 북송되어 기쁨을 맛본다는 비전향 장기수의 기본 이야기 구조에는 북한 사회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전향 장기수의 형상화는 시, 소설, 가사 등 전 문학 분야를 막론하여 진행되는데 주로 역사소설을 창작하는 홍석중도 그에 관한 장편소설 『폭풍이 큰 뜻을 펼친다』<sup>25</sup>를 발표한 바 있을 정도이다. 이 소설은 비전향 장기수인 박문재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박문재는, 카프 시인이며 월북 후 북한 시단에서 활발히 활동한 박팔양의 아들이기도 하다. 박팔양은 북한문학 형성 초기에 활발히 활동하였고 1992년 시선집이 재출간되기도 하는 등 북한문학계에서 재조명되는 주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북한 시의 '진달래' 이미지가 고난을 이기고 피는 꽃, 혹독한 계절에 잎도 없이 피어나는 꽃으로 형성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박팔양의 『진달래』였다. 박팔양의 『진달래』가 김소월의 『진달래』와 다르게 평가되는 배경에는, 카프를 사회주의 문학의 중요한 문학적 전통으로 인정했던 북한문학 형성기의 상황이 존재한다.

박팔양의 아들로서 더욱 화제가 되었기도 했을 박문재 외에도 김선명, 김인서 등의 비전향 장기수의 수기를 시화한 실화서사집의 제호는 『겨울진달래』이며 이는 제4부에 실린 박문재의 일화의 제목이기도하다.<sup>26</sup>

철 모르는 꽃이라더라  
진달래는  
그래서 철부지라  
부른다더라

그래도 그 꽃은  
늦은 겨울, 이른 봄에  
피여 웃는 꽃  
그러니 별로 철부지는 아닌 것

허나 여기에 있더라  
늦은 겨울, 이른 봄이 아니라  
한겨울 머언 봄 속에  
피여 만발한 꽃

그래서 그 이름  
겨울 진달래!  
중중 한겨울 속에서

<sup>25</sup> 홍석중, 『폭풍이 큰 뜻을 펼친다』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sup>26</sup> 리호근, 『겨울진달래: 비전향장기수 실화서사시집(1)』 (평양: 평양출판사, 2002).



홀로 봄이 되어 웃는 꽃!  
 오호, 그 이름으로 떠올리는  
 인생의 꽃, 비전향장기수!  
 그 꽃의 향기는  
 신념과 의지라더라....<sup>27</sup>

진달래를 겨울에 피어나는 강인한 꽃으로 보는 북한문학의 일반적인 인식에 이  
 제는 비전향 장기수의 상징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추운 겨울 속에서 홀로  
 웃는다’는 것은 긴 옥고의 고난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제 송환되어 돌아온 그들의  
 인생을 신념과 의지의 인생으로 찬양하듯 진달래에도 신념과 의지의 이미지가 추  
 가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한사회의 인식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선군의 상징 일색으로 몰입하는 듯한 진달래 이미지에 또 다른 의  
 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감 시 『진달래는 다시 피여』의 부분이다. 아래에서 보듯 리호근은 박문재의 말  
 을 인용하여 박팔양의 진달래 이미지를 비전향 장기수의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진달래는 다시 피여》  
 1930년 나의 아버지 박팔양은  
 시 《진달래》에서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고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  
 모진 찬바람에 가날피 흩어지는 그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 것이라고  
 진달래처럼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정녕 꽃이라고 썼었지.<sup>28</sup>

백일홍이나 국화처럼 화려하거나 오래 피지는 못하지만 봄을 먼저 알리고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꽃으로 진달래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진  
 달래 이미지를 비전향 장기수의 형상화에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예들에서도 진  
 달래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는 비슷하고 때로는 늘 그리운 고향의 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남한 문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작자가 어린 학  
 생이라는 점은 또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sup>29</sup>

<sup>27</sup> 위의 책, p. 117.

<sup>28</sup> 위의 책, pp. 158-159.

####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진달래’라는 시의 소재를 복한 시에서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겨울의 시련을 이기고 피어나는 투쟁의 꽃, 김일성에게 진달래를 바친 김정숙의 일화와 진달래를 투쟁하는 병사들에 비유한 김일성의 말에 부여된 투사의 이미지와 혁명 가계의 이미지를 가진 꽃, 김정일이 진달래를 통해 김정숙을 떠올리며 항일 투쟁기의 투쟁정신을 상기시키는 꽃, 철령의 진달래와 같이 선군의 상징으로 쓰인 꽃으로서 진달래의 이미지는 다양했지만 투쟁과 선군이라는 정치적 상징의 일관성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남북문학의 비교와 대조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얼마나 다른가를 묻는 것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면의 근거가 되리라 믿는다. 다름을 부각하든 같음을 부각하든 비교의 방향이 포용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근원적인 조건과 그 조건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언어적 현상과 특징들을 제외한다면, 남북 문학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2008년 현재 남북의 문학을 비교하기 위해 어떤 작품을 선정할지 어떤 기준을 세울지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에 대한 몇몇의 시도는 가능하다. 주제와 소재, 묘사의 특징과 수사법의 활용, 인물 성격 분류, 소설의 시점, 문학 용어의 비교 등이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생각해본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이 가진 방법론으로서의 유효성은 분명하며 이를 적용하여 산출할 결과 역시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기준들은 남북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을 어려움만을 상기시킬 것이다. 사실 남북의 문학을 비교하는 일의 종착은 늘 격절된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굳이 남북한 문학 안에서 동질성만을 찾는 것이 옳은 연구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세심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분석하는 일 자체가 필요하다.

■ 접수: 10월 13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sup>29</sup> 송은미(평양시 장산 고등중학교 6학년 학생), “고향의 진달래:고향을 장문한 비전향장기수를 대신하여,” 『청년문학』 (2001), p. 57.

## 참고문헌

- 강승제. “철령의 철쭉아.” 『청년문학』.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7.
- 기자(특파 기자 류광치). “철령의 어머니.” 『조선여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5.8.
- 김설희. “어머님과 진달래.” 『청년문학』. 2004.12.
- 김영환(후보 원사, 교수, 박사). 『민족문화와 언어』.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 류 만. “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 『실천문학』. 서울: 실천문학사, 2005.
- 리국석. “철령의 진달래야.” 『청년문학』. 2004.4.
- 리옥순(조선인민군 군관). “철령의 진달래.” 『천리마』. 1998.8.
- 리호근. 『겨울진달래: 비전향장기수 실화서사시집(1)』.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문예출판사 편. 『조국의 진달래』. 문예출판사, 1980.
- 손은희(강원도 원산사범대학 어문학부 학생). “철령의 진달래야.” 『아동문학』. 2003.11.
- 송은미. “고향의 진달래:고향을 장문한 비전향장기수를 대신하여.” 『청년문학』. 2001.8.
- 심상호. “선군의 상징인 철령에 대한 시적 형상.”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3.
- 안향진(공화국영웅 안동수의 딸). “선군민족진달래로 붉게 피리라.”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2.
- 언어문학연구소 문학 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 엄호석. 『김소월론』.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장용환. “철령의 진달래야.” 『아동문학』. 2001.5.
- “바우와 진달래.” 『아동문학』. 2004.10.
- “진달래의 유래.” 『문화어 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2003.2.
- “철령의 철쭉이 전하는 이야기.” 『금수강산』. 평양: 오늘의 조국사, 2006.4.
- 『박팔양 시선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Abstract

## The Changing Image of Azalea in Literary Works and Its Implications

*Sang-Sook Lee*

Azalea provides a raw material for literary work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to Korea's modern day literature. While the image of azalea in modern poetry would begin with the <Azalea> by Kim So-wol, azalea had already been used as a raw material for classical poetry such as poetry written in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Korean verse, Sijo, with its unique meaning. Thus, analyzing the image represented by azalea is meaningful in terms of 1) its continued use as a traditional raw material for Korean poetry and 2) the changing image it represents. This paper examined how the image of azalea has been established and how it is used as a raw material in North Korean poetry.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image of azalea as a literary raw material in North Korean poetry displays a notable difference from South Korean poetry in terms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s. It was found that azalea in North Korean poetry is not a means for poetic depiction of myths or for the expression of the sorrow of separation. Rather, as a flower that heralds the emergent spring, it represents the image of a messenger and serves as a symbol of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tics. The literary raw material provided by azalea has turned into a political symbol and historical anecdote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change would constitute another dimension that reveals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Nevertheless, this kind of revelation is also necessary, as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contrasting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requires not only identifying homogeneity but also shedding light on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m.

**Key Words:** Azalea, North Korean Poetry, Chulryung, Sungun(military-first), Sungun 8 landscape, Traditional in subject.



#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김 학 성\*

- I. 문제제기
- II. 통일연구의 변천과정과 방법론적 특징
- III. 통일연구의 방법론적 주요 쟁점
- IV. 주요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의 선택
- V. 맺음말

## 국문요약

오래전부터 통일연구의 과학화 및 체계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 어떠한 구체적 방향이나 대안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접화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법론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방법의 모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분단이후 지금까지 통일연구의 방법 및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연구방법의 모색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사회과학 방법론의 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항상 마주치는 '설명과 해석'의 차이에 기인하는 쟁점이다. 둘째,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민족 대 반공'으로 상징되는 가치논쟁의 문제이다. 셋째, 철학의 존재론적 질문에서 연원하

는 행위주체와 구조의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 차이이다. 사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구분하고, 쟁점에서 언급했던 이론적 기반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규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연구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방법론적 적실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주제어:** 통일연구, 북한연구, 방법론, 한반도 문제, 실증주의

## I. 문제제기

올해는 건국 60주년인 동시에 분단 60주년이다. 민족의 분단은 한반도 문제를 낳았다. 한반도 문제는 지난 60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냉전이 남북한의

\*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부교수

체제경쟁과 대결 구도를 강화시킨 결과, 한반도 문제는 점차 국제정치, 남북한의 정치와 군사안보, 나아가 한민족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이 서로 뒤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로 정착되었다. 탈냉전시대가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의 그러한 구조적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분단 이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남북대화가 막혀있을 때 통일은 더욱 소리 높여 외쳐지곤 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연구도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을 법하지만, 지나온 시간과 논의의 밀도에 비해 연구의 축적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무엇보다 냉전시기 통일에 관한 논의나 해법추구는 거의 정부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으며, 정부의 반공주의적 시각을 벗어난 견해는 좌파 내지 친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 받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주로 정치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의 전유물이었고, 내용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화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통일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상황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구조의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통일연구의 대상과 범위도 더불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맥락에서 보면, 통일연구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밖에서는 탈냉전, 안에서는 민주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 욕구가 커짐에 따라 통일연구는 정치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분야로 확장되었으며, 그 귀결로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측면이 부각되고, 또 햇볕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과학적인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각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는 한참동안 한국의 주류 학문체계로 편입되지 못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비로소 통일관련 전공과정을 개설하거나 학제적 연구를 표방하는 학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통일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학술적 접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연구의 경우,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이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데 반해, 통일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

의 모색”이라는 주제아래 모인 통일연구 관련 기관의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통일 연구의 학제적이며 과학적·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sup>1</sup>

이러한 통일연구의 현 수준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안하기보다 방법론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방법의 모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분단이후 지금까지 통일연구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볼 것이다. 그리고 통일연구의 과학화·체계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이론적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이론적 맥락에서 통일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통일연구의 현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과제별로 방법론적 적실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II. 통일연구의 변천과정과 방법론적 특징

시대상황에 따라 분단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통일연구의 대상 및 범위와 연구방법은 시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왔다. 분단이후 그러한 인식전환을 야기했던 주요 사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남북 당국간 대화 시작, 1980년대 후반 세계적 탈냉전과 남한의 민주화,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다.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통일연구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방법론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통일연구의 불모기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적 체제대결이 강화되던 시기에 통일문제는 정치적이며 동시에 정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통일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 정치적인 구호 또는 사회운동의 대상으로서 통일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일은 드물었다.

당시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남한정부의 통일관은 승공통일이었다. 이러한 시각이 확고하게 자리잡는 과정에서 분단상황은 대외적인

<sup>1</sup>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움, 2006.5.18).



관계보다 대내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통일을 내세워 정권의 정치적 부패와 무능, 비민주성으로 약화된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다. 정부가 통일을 국가 및 정권안보의 맥락에서 활용하는 동안 야당이나 민간차원에서는 주로 사회운동과 저항의 맥락에서 통일이 부각되었다. 김구의 단독 정부수립 반대와 남북 연석회의 개최, 제1 및 제2공화국 시기의 진보당의 ‘평화통일안’, 그리고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혁신정당들의 동의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sup>2</sup> 특히 중립화통일안은 냉전시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주변부에서나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통일논의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통일연구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북한은 당시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되고, 냉전적 대결이 강화되던 시기 정부의 북한정보분석, 반공자료 등과 월남 내지 귀순인사들의 경험은 북한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북한연구의 중심이 되었으며, 당시의 연구는 각 인사의 개별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 체제, 공산주의역사 등에 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4</sup> 이들과 같은 소위 북한연구 1세대는 비록 체계화된 연구방법을 갖지 못했으나, 1970년대 북한연구의 학술적 체계화에 도움을 주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5</sup> 그렇지만 이러한 성격의 북한연구는 대체로 정치적 필요성과 연결되었던 탓에 당시 주류 학계는 북한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 2. 통일연구의 맹아기(1970년대~1980년대 후반)

1970년대 미·중 및 중·일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기존의 국제적 냉전질서가 변화했으며, 한반도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었다. 1960년대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을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체제경쟁에 자

<sup>2</sup> 1960년을 전후한 야당의 통일안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박순성·최진옥,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7-74.

<sup>3</sup> 정부와 주류 학자들은 중립화통일안의 실현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다. 초기 논의과정에서는 한국의 중립화가 가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립화가 가능하더라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다. 조순승, “한국중립화는 가능한가?: 김삼규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상계』, 제8권, 제12호 (1960), pp. 36-46;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 한반도 통일,”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참조.

<sup>4</sup> 강광식, “북한연구 방법론 고찰: 주요 쟁점의 현황과 과제,” 『북한학보』, 제19집 (1995), pp. 227-228.

<sup>5</sup>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 (1975), p. 69.

신감을 얻게 되자 긴장완화의 기류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를 문을 열었으며, 1973년 ‘6·23 선언’ 1974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평화통일외교와 남북화해를 위한 방침을 밝혔다.

평화통일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목표로 정해짐에 따라 분단에 관한 새로운 인식 체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미 정부는 1969년 3월 서독의 ‘전독문제성’을 모델로 삼은 국토통일원을 창설하여 통일정책 및 북한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했다. 국토통일원은 처음부터 행정부서라기보다 정책대안을 구상하는 연구부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예컨대 각종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술용역을 발주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 『국토통일』을 간행하여 학술적 관심을 제고했다. 또한 통일 및 북한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의 지원 하에 창설된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연구소』는 기성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연구의 체계적 방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썩트게 되었다.<sup>6</sup> 학술적·이론적인 차원의 통일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첫째, 비교공산주의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통일 및 북한연구이다. 1970년대 전 반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제기<sup>7</sup>는 기존의 전체주의 접근법을 대체하려는 서구의 비교공산주의 방법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특히 서구 사회과학계를 풍미했던 행태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방법론과 연구기술 및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것이 통일 및 북한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둘째, 국제정치학적 접근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미치는 긴장완화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기 시작했던 국제정치학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안보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안보적 접근은 당시 정부가 원했던 것이기도 했다. 어쨌든 정치적 필요성이 작용한 북한연구와 국제정치적 접근이 주종을 이루게 되면서 통일연구는 마치 정치학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체계적 방법론에 눈을 뜨기 시작

<sup>6</sup> 이와 관련한 초기의 논문으로서 구본태, “통일이론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제언,” 『북한』, 통권 제42호 (1975) 참조.

<sup>7</sup>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참조.

<sup>8</sup>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서울: 한울, 2003), pp. 10-11.

했던 소수의 북한연구 2세대 학자들<sup>9</sup>은 국제정치학자들과 달리 주류학계와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 시기 서독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비교분단국 연구<sup>10</sup>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기 시작했다.

셋째, 또 다른 특징으로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통일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남북통합과정에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신)기능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적인 두 체제 사이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근본적으로 기능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체제 경쟁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탓에 애초 (신)기능주의 이론의 주요 논점이 묵과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데 애용되었던 (신)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공동체를 향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중앙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및 사회체제의 유사성이다.<sup>11</sup> 한반도에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창출되기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 (신)기능주의를 남북한 통합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sup>12</sup> 햇볕정책도 기본적으로 (신)기능주의적 구상에서 나온 것이

<sup>9</sup> 1980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북한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자는 약 35명이었으며, 전공으로서 북한연구자는 약 20명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 연구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서울: 범문사, 1981) 참조.

<sup>10</sup> 이와 관련, 1970년대 한국과 서독학자들의 학술회의 결과물을 편집한 Gottfried-Karl Kindermann,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World peace promotion through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a Comparative Evaluation* (München: tuduv Verlag, 1976)이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1980년대에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뮌헨대학교 국제정치학 및 경제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독일분단의 비교연구 학술세미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과 서독에서 번갈아 가며 총 8회 개최되었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은 동서문제연구원이 연차별로 간행한 총 6권의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sup>11</sup>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pp. 9-10;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 No. 4 (1967), p. 32 참조.

다.<sup>13</sup> 어쨌든 남한정부는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명분상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을 감행하고 국내정치적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내세운 안보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통일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들 사이에 혼란과 뒤섞임을 초래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의 생산적 전개를 한참동안이나 방해했다.

### 3. 통일연구의 활성화 (1980년대 후반~2000년)

1980년대 후반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통일연구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의 확산,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통일논의의 사회적 확산, 그리고 독일통일과 독일의 통일후유증은 정부주도를 넘어 민간주도의 통일연구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 민간의 통일연구는 통일운동의 확산에 따른 사회운동권의 연구와 이에 대한 비판이 교차하면서 연구가 운동에 의존하는 ‘운동추수적 연구경향’이 두드러졌다.<sup>14</sup> 더욱이 통일연구는 북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증대와 더불어 급진성을 띠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방법론적으로 의미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당장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인식의 차원에서 반공주의적 통일연구의 편향성을 넘어서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학계는 과거의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되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이론이 꾸준히 축적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1988년 출판된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역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다섯 가지로 압축된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sup>15</sup>

<sup>12</sup>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분단국가 통합이론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6); 이용필, “기능 통합의 이론적 기초: 접근법과 적실성,” 양성철·이용필 공편, 『남북한 통합론: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서울: 인간사랑, 1992); 김도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국방논집』, 20호 (1992);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서울: 명인문화사, 2006) 등 참조.

<sup>13</sup> 혹은 햇볕정책을 단순한 신기능주의를 넘어 소위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5호 (2005), pp. 239-241 참조.

<sup>14</sup> 김용현,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1996), p. 27.

과학적·체계적 통일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이 설립되었다. 민주화된 정부는 당시 남북한 대화의 급진전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의 급증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과거의 홍보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정책연구 및 기반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에서는 1994년 동국대학교가 북한학과를 신설한 이후 연이어 몇 개 대학교에서도 북한학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학문체계로서의 통일연구, 즉 ‘통일학’이란 개념이 대두했다.<sup>16</sup> 연구 및 교육기반의 마련과 때 맞춰 1990년대 전반기 한반도 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짧은 시간내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연구과제를 쏟아내었다. 당시 연구의 대주제로는 분단 및 통일의 외국사례(독일, 중국, 예멘, 베트남), 북한 붕괴 가능성과 시나리오,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 국제관계, 통일 대비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들 수 있다.

외국사례 연구는 그 자체로서 정보제공의 의미를 띠기도 했으나, 대체로 다른 연구주제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독일 통일후유증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sup>17</sup>와 사회통합의 문제점<sup>18</sup>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1990년대 전반기에 가장 많이 추진된 주제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한이 붕괴하지 않자 북한체제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한편으로 여러 분석기법을 활용한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연구<sup>19</sup>와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진보성

<sup>15</sup>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이라는 현실보다 통일이라는 비현실에 집중함으로써 통일이론이 발전할 수 없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국제환경이 결정적인 독립변수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통일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일당위론이나 통일방책론은 (연역)이론적 기초를 갖지 않는 정치적 또는 선진적 성격의 작업들이었다. 넷째, 접근방법에 있어서 서술적 접근이나 처방적 접근이 분석(이론)적 접근보다 훨씬 많았다. 다섯째, 정치적인 것이 비정치적인 것을 압도했다. 양성철,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170-171.

<sup>16</sup> 유호열,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연계학술회의 기획세미나, 1996.12.5) 참조.

<sup>17</sup>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서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편익,”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등 참조.

<sup>18</sup>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6호 (1995);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이은숙,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학성, “독일통일 이후 내적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대학세미나, 전남대학교, 1998) 등 참조.

<sup>19</sup> 이와 관련한 대표적 초기 저작으로는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향의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울과 국내의 강정구, 이종석과 같은 학자들이 북한바로 알기의 맥락에서 북한사회를 자체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역설한 이후,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격렬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이 벌어졌다.<sup>20</sup> 논쟁은 개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넘어 학문외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문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뜨거웠던 논쟁만큼 그렇게 훌륭한 학술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그렇게 된 배경적 이유가 있다.

첫째, 송두울의 접근법 소개가 매우 미진했고,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은 1960년대 말 서독 정치학자 루츠(Peter Christian Ludz)가 동서독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울의 소개에는 루츠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한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송두울이 칸트의 인식론을 빌려왔다<sup>21</sup>는 점을 미루어보면, 그가 루츠의 저작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기보다 루츠의 이론을 소개한 해설서에 의존했다는 의심<sup>22</sup>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루츠는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을 경험적 사회연구와 지식사회학 및 해석학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고백<sup>23</sup>하고 있으며, 결코 칸트의 인식론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둘째, 1980년대 후반기 이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소위 제3세대 북한학자들은 방법론과 관련된 이론 연구에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논쟁을 통해 대안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종석도 고백했듯이 국내의 북한학자들은 송두울과 상관없이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내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성과 당위성 이외에 어떠한 인식론적 기반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sup>24</sup> 셋째,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을

<sup>20</sup>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저술로는 다음 글 참조.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호 (1988); 송두울,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강정구 편 (서울: 을유문화사, 1990);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26집 (1993);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sup>21</sup> 송두울,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의 재론,” 『역사비평』, 제28호 (1995년 봄), p. 225.

<sup>22</sup> 사회주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독일 학계의 저술들 가운데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의 인식론적 근거를 칸트의 ‘내재성’(Immanenz)과 ‘선형성’(Transzendenz)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해설서가 있다. Volker Gransow, *Konzeptionelle Wandlungen der Kommunismusforschung: von Totalitarismus zur Immanenz*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0).

<sup>23</sup> Peter C. Ludz, “Die soziologische Analyse der DDR-Gesellschaft,”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71), p. 13; Peter C. Ludz, *The Changing Party Elite in East German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2), pp. 22-24.

<sup>24</sup> 1998년 9월 26일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북한연구방법론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종석이 발

옹호하는 연구자들조차 다른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결과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는 연구성과를 내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방법론의 타당성이 제대로 논증되기도 어려웠다.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는 거의 모든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다루었던 연구 주제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화 현상을 강하게 부추기면서 한국적 안보연구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북핵문제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핵전략 및 안보연구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시켜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했다.

통일대비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관한 주제는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의 경험은 통일이 머지않거나 또는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실성 있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또 통일이후 통합과정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깨워 주었다. 또 이 맥락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당연히 전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주제는 1980년대 말 공표되었고 아직도 유효한 우리의 단계적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결되어 다양한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연구되었다.<sup>25</sup> 그중에서 특히 경제와 문화의 차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치적 통일이전에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경제공동체’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또 민족공동체의 관건은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일문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통일문제의 학제적 연구를 위해 각 학문분야를 연결시키는 범주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sup>26</sup>

언한 내용이다.

<sup>25</sup> 예컨대 1990년대 초반 민족통일연구원 개원이후 한민족공동체 형성문제가 주요 연구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윤덕희·김규륜, 『한민족공동체 구체화 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김국신·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등 참조.

<sup>26</sup> 이와 관련하여 초기 저술로는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상) & (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가 있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통일문화의 주제를 다룬 저술로는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2000)과 이에 대한 서평으로서 김학성, “분단의 문화현실과 통일담론의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 4. 통일연구의 체계화 (2000년~현재)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는 19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양적·질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는 학술적인 의미를 갖는 박사학위 논문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004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 및 통일연구 분야의 국내박사학위 논문 수는 총 37편이었던 데 반해, 1990년대의 10년간 총 178편,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101편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sup>27</sup>

질적으로도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다. 첫째, 소련 및 공산주의 연구를 위해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던 방법에서 점차 벗어나 북한의 원전을 통해 북한의 속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경향이 증가한다. 과거보다 북한원전이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손쉬워졌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나 북한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연구방법론의 체계화를 위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sup>28</sup> 둘째, 민간차원의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실현되면서 교육, 종교, 언어,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사회문화 연구가 증가했으며, 또한 희망과 기대 차원의 통일방안을 넘어 실천 가능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도 증대했다. 셋째,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의 변화는 국제정치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햇볕정책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연구자들도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서는 이론적 시각의 다양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기반의 연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sup>29</sup>

<sup>27</sup>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1990년대에는 정치·사상 분야가 45편, 대외관계 및 안보분야가 31편, 경제분야가 20편, 사회문화분야(교육 포함)가 31편, 통일대남 분야가 35편, 기타 법, 행정, 분단 및 한국전쟁 분야가 16편이었고, 2000년에서 2004년 6월까지의 정치·사상 분야가 12편, 대외관계 및 안보분야가 17편, 경제분야가 14편, 사회문화분야(교육 포함)가 26편, 통일대남 분야가 28편, 기타 법, 행정, 분단 및 한국전쟁 분야가 4편이었다. 김광익 외,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의 연구동향 리뷰』(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통일학 기획과제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 2004.11), p. 7 참조.

<sup>28</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는 다음 책 참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의 성찰』(서울: 한울, 2005).

<sup>29</sup>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2000. 10. 21)에는 이와 관련한 6개의 논문, 즉 양준희,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정진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김태현,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구갑우, 박건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이근,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가 발표되었고,



나아가 2000년대 한반도 문제에는 새로운 시대적 문제가 부가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소위 ‘남남갈등’이다. 남남갈등이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언론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여론 사이의 갈등을 남북갈등과 대칭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sup>30</sup>로서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내부의 여러 갈등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남남갈등의 등장으로 한반도 문제의 국내정치화 추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남남갈등은 2001년을 지나면서 치유하기 힘든 사회균열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 이면에는 한·미관계의 재인식과 안보 의식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2년 사상 초유의 반미촛불시위가 노무현 정부 탄생의 원동력이 되면서 남남갈등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시각과 안보를 우선하는 시각 사이의 대결로 부각되었다. 특히 2차 북한 핵위기를 거치면서 ‘민족 대 동맹’의 대결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연구에도 반영되었다. 연구자들 사이에도 시각 차이가 반영된 논쟁은 물론이고, 남남갈등의 구체적 실체 및 원인분석, 해소방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정치 및 비교사회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새롭게 평가되거나 주목받는 시대적인 문제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다자안보협력 및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한동안 정치적·사회적 시선을 피해왔던 북한 인권문제와 새터민 문제도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2003년 이후 6자회담을 둘러싼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변모하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로 등장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통일문제 연구의 중심 주제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햇볕정책의 추진과 함께 우리 정부가 애써 외면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항상 주목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구의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문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새터민 문제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적응은 향후 남북한의 사회문

또 다양한 이론들은 비교한 저술도 출간되었다.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sup>30</sup>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3-14 참조; 다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에 회자한 것 여부와 상관 없이 ‘남남갈등’이란 용어는 최초로 한겨레신문 1997년 8월 2일자에 이미 등장했다. 박홍원, “시선 끌기 위해 국론분열로 고장: 남남갈등 보도의 정치적 의미,” 『저널리즘비평』, Vol. 32, (2001), p. 63.

화통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주제로서 중요성이 배가된다.

### Ⅲ. 통일연구의 방법론적 주요 쟁점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연구는 시대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통일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의지 역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체계적 통일연구와 관련하여 북한연구의 방법론 논의들이 걸어온 길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대상이나 범위에서 통일연구와 북한연구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양자의 관계는 출발점 내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을 한반도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한연구는 자연스럽게 통일연구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을 오로지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북한연구는 독립적인 연구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연구로서 북한연구의 성과물도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연구에 기여하게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어쨌든 먼저 시작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을 염두에 두고 통일연구의 방법 모색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설명 vs. 해석

통일연구는 주로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사회과학 방법론의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마주치는 첫째 문제는 어떤 사회현상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할(descriptive) 것인지 또는 규범적(normative or prescriptive)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우리 학계의 현실에서 통일연구의 과학화 내지 체계화 요구는 규범적이며 ‘해석’에 의존했던 과거의 연구를 연역이론에 기반을 둔 과학적 ‘설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다르지 않으며, 이는 실증주의에 토대를 둔 방법론의 우월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증주의를 둘러싼 오래된 찬반 논쟁을 상기하면, 통일연구를 위해 실증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물론 실증주의의 방법론적 의미를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 가설에 입각한 연역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체계적·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실증주

의는 존중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증주의의 전제들에 내재된 방법론적 한계는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실증주의의 대전제인 객관주의 및 물질주의는 가치와 이념이 내재된 인간과 사회의 경험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진리(또는 실재)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도 문제시될 수 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과물이라는 후기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식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미 여러 철학적 논의에서 강조되어왔다.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Ludwig J.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이나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해석학은 인간의 언어 및 문화의 존성을 보여줌으로써 지식의 객관성 및 확실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전이(paradigm shift)’ 주장처럼 심지어 실증주의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sup>31</sup>

후기실증주의의 비판으로 실증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사회과학의 개별 영역에서는 실증주의가 아직도 인식론 및 방법론으로서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탓에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이라는 계몽주의적 개념이 왜곡되기도 한다. 즉 애초 “이성에 의한 지식탐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과학은 실증주의와 더불어 “특정 지식을 입증된 것으로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특정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sup>32</sup> 본래의 과학개념에 따르면, 인간과 사회의 현상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은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 또는 설명적이란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요컨대 과학적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도구가 담긴 도구상자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도구상자는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복잡할수록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sup>33</sup>

이러한 논쟁은 통일연구의 과학화 노력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실증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인정하면, 우선 한반도 문제의 범주에서 연역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를 구분하여 설명과 해석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유관국들 사이의 갈등과

<sup>31</sup>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0).

<sup>32</sup> 도날드 폴킹혼, 김승현 외 옮김, 『사회과학 방법론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서울: 일신사, 1998), p. 27.

<sup>33</sup> 위의 책, pp. 22-23.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방식의 대화와 협상이 전개되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사회과학에서 이미 개발된 갈등이론, 협력이론, 협상이론 등에 입각하여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설명적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의 확대는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여 실천 전략도 세련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통일에는 통합이라는 미래의 목표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통합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통합의 실천과 관련하여 물질적 측면(경제, 산업, 기술 등)에 관한 객관적·실증적 연구가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접근은 한반도 문제에 내재해있는 가치의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한국의 미래와 통합방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의 이견은 객관적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으로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남북한 및 주변유관국 사이의 대화 및 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지식의 형성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소위 통일문화의 실천은 규범적 타당성 논증과 동행한다.

이처럼 객관적 설명과 가치적 해석의 영역은 구분될 수 있지만, 그 구분은 사유와 분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삶이나 사회 현실에서는 양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과학적 접근은 양 영역간의 밀접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과제이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시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루츠의 내재적·비판적 접근(또는 비판적·실증적 접근)도 방법론적으로는 똑 같은 문제의식을 표방했다.<sup>34</sup> 독일이나 한반도를 막론하고 통일문제와 같이 매우 광범한 외연을 갖는 연구대상의 경우에 양 영역을 연계시키는 것의 어려움은 한층 더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방법론적 논의의 현 수준을 고려하면, 원론적인 동시에 조금은 세련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원론적으로는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의 영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각의 방법에 따른 연구를 할

<sup>34</sup> 루츠는 자신의 방법론을 “이론형성의 역사적·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논제를 과거 지식사회학에 서보다 세밀하게 정립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의식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사회과학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규범적·처방적 연구방법과 경험적·서술적 연구방법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Peter C. Ludz, *Ideologiebegriff und marxistische Theorie: Ansätze zu einer immanenten Kri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6), Vorwort.

성화시키는 한편, 상호 연계를 통해 이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적 시도들에 시선을 점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상호주관성에 주목하는 사회과학이론들은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 가치논쟁: 민족 vs. 반공

현재 우리의 통일연구는 남남갈등과 맥을 같이 하는 가치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특히 북한연구와 정책연구 분야에서 그러한 갈등은 두드러진다. 내재적 방법론이나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대표적 예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이론적 가정의 차이에 기인한다. 시각과 이론적 가정은 궁극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즉 북한을 형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으로 볼 것인지를 시각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며, 대북정책에서 힘의 논리와 협력의 논리에 대한 선호 차이는 각자의 세계관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의 차이는 ‘민족 대 반공(또는 동맹)’으로 상징되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치판단 및 논쟁의 문제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실증주의 비판의 주요 논거, 즉 지식의 존재피구속성 탓에 인간행위나 사회현상을 모두 가치중립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인식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만, 아직도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치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몽주의의 후예들이 있다.<sup>35</sup> 이들은,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주의자들과 달리, 비판이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행위(das kommunikative Handeln)를 통해 규범적(실천윤리적) 타당성을 추구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베버(Max Weber)는 자신의 사회과학 방법론<sup>36</sup>을 통해 가치와 경험의 문제를

<sup>35</sup> ‘현대성을 미완의 기획’이라고 단언하는 하버마스는 비판이성을 바탕으로 상대주의의 극복은 물론이고 새로운 실천윤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Jürgen Habermas,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IV* (Frankfurt a.M.: Suhrkamp, 1981), pp. 444-464.

<sup>36</sup> 막스 베버, 전성우 옮김,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1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Der Sinn der ‘Wertfreiheit’ der soziologischen und ökonomischen Wissenschaften”)』 (서울: 사회비평사, 1997) 참조.

상이한 차원에서 다루면서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사회과학(Sozialwissenschaft)과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을 구분한다.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특정한 가치판단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가치판단중립적인(werturteilfrei) 경험과학으로서 도구적 이성의 영역이며, 이에 비해 문화과학은 가치판단 및 논의가 이루어지는 비판이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과학의 유효 범위는 제한적이며, 문화과학은 가치선택이나 실천적인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확정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에 지대한 지적 자극(문제설정의 기초로서)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sup>37</sup>

도구적 이성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이 전략적(합리적) 행위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데 반해, 비판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의 후예들은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진리 추구 내지 상호이해와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8</sup> 물론 의사소통행위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즉 행위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직접 대화에 참여하며, 공동의 생활세계(Lebenswelt)를 공유하고,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sup>39</sup> 또한 의사소통행위는 행위자의 개인적 선호를 실현하려는 욕구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욕구에 의해 추동될 때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행위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적인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세계, 행위의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선호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인식을 바로잡으려 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행위의 기초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내지 완화를 위한 상황 변화의 촉진 기제인 공동지식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0</sup>

계몽주의의 실천윤리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통일연구에 적용된다면, 가치갈등은 물론이고 비생산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남남갈등

<sup>37</sup> 위의 책, p. 156.

<sup>38</sup>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 2 (Fankfurt a.M.: Suhrkamp, 1981).

<sup>39</sup> Harald Müller,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Zur Kritik der utilitaristischen Handlungstheorien,"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1. Jg, H.1 (1994), p. 27.

<sup>40</sup> Thomas Risse,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1 (Winter 2000), p. 12.

의 경우에는 이미 의사소통행위를 위한 기반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압력도 있다. 일반국민들 사이의 정치화된 갈등과 비교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행위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혼란이나 뒤섞임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서도, 비록 이상적인 의사소통행위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적어도 공동지식의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결코 간단하고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겠지만,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대북인식, 정책 및 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행위주체 vs. 구조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행위주체 대 구조의 대립은 이미 진부한 문제가 되긴 했으나, 방법론에 관한 논의에서 빠질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서 연원한다. 철학의 존재론적 질문들, 예컨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지(경험론), 아니면 이념이 인식을 결정하는지(관념론)의 문제가 사회과학에서는 행위주체와 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온 사회과학 내의 두 가지 존재론적 관점은 방법론적 차이를 야기했다. 즉 사회가 행위주체에 의해 재생산과 변화를 거듭한다는 개체주의(individualism)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고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한다는 구조주의 내지 전체주의(holism)이다. 이들 관점은 사회에 대한 상이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그것의 작동원리를 다르게 이해하고 설명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나 구조주의는 분석의 출발과 강조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양자 모두 1960년대 말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이 제시된 이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구조는 행위주체의 자기이해(정체성 형성 및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구성되며, 행위주체에 의해 재생산된 구조는 역으로 행위주체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인과적 결과를 초래한다.<sup>41</sup>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행위이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통일문제에서 개체주의는 특히 정책연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위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전략모색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행위주체

<sup>41</sup>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4), Ch. 1 참조.

의 전략적 행위에 관한 미시적 분석은 협력 및 갈등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사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란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반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회질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조 개념이 빈약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의 기여는 단지 특정 시점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정을 분석하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제한된다.

개체주의와 비교하여 구조주의는 통일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넓은 의미에서 맑스주의적 접근이나 냉전시기 세력균형의 국제정치시각은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통일연구에서 순수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방법론이 애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도입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는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 개념은 이론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sup>42</sup> 개체주의는 제도를 행위주체의 이익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구조주의는 제도를 구조의 속성으로 각각 이해하는 것과 달리,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에서 제도는 매개변수로 간주된다. 구조의 속성 또는 매개변수로 규정될 경우, 제도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도 항상 주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략게임은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존의 제도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그 결과로서 기존의 제도가 변화 내지 소멸하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 즉 제도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제도화는 대체로 기능적이며 진화론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장<sup>43</sup>에서 보듯이 제도는 항상 협력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천이기도 한다. 또한 제도는 단기적으로 어떤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타성 탓으로

<sup>42</sup> 제도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학성,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제2장 2절.

<sup>43</sup> Peter A. Hall & R. C.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Vol. XLIV (1996), p. 942; Colin Hay & D. Wincott, "Structure, Agency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Vol. XLVI (1998), p. 954 참조.



변화에 저항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걷기도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더욱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기존 제도의 역기능이나 타성에 주목하여 현상유지와 변경의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연적이며 급진적인 제도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급변 내지 위기상황이 돌출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IV. 주요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의 선택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대상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같이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시대상황에 따라 문제의 중점이 변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연구방법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성격상 연구과제의 규명을 위해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특정 시점에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공관(synopsis)함으로써 연구범위, 즉 대상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앞 장에서 밝혔듯이 존재론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행위주체로는 국가지도자, 정치·사회·경제분야의 엘리트, 학자 및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포함하는 개인, 기업과 (국내 및 국제)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 그리고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세 가지를 손꼽을 수 있으며, 구조는 (남북한의) 국내환경, 남북관계, 국제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의 세 가지를 서로 연관시키면,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공간적 접근에 따른 통일문제의 주요 이슈

주체 \ 구조	국내환경	남북관계	국제 환경
개인	①	④	⑦
사회	②	⑤	⑧
국가	③	⑥	⑨

<표 1>의 관계맺음에서 나타난 아홉 부분은 특정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적으로 보여주며, 이슈의 해결과 관련된 고민이 바로 연구 과제로 나타난다. 다만 사회체계의 특성상 이슈들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이슈가 항상 하나의 연구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각 부분의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내환경-개인

##### - 남한:

- 정치지도자(대통령)의 대북인식 및 통일관
- 각계 엘리트와 시민들의 대북인식 및 통일관과 남남갈등
-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 - 북한:

- 김정일의 리더십과 통일관
- 북한 주민의 체제 만족 수준: 식량난과 북한 탈출

#### ② 국내환경-사회

##### - 남한:

- 기업의 대북사업
-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vs. 반공 및 대북 압박

##### - 북한:

- 대남사업단체(민화협, 민경련, 아태위원회 등)의 역할과 자율성

#### ③ 국내환경-국가

##### - 남한:

- 대북 및 통일정책의 성격
- 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
- 경제적·사회문화적 통일역량의 수준

##### - 북한:

- 김정일 체제의 생존 능력: 정치·경제·사회·군사·외교의 각 측면
- 대남불신 수준 및 적화통일 의지

#### ④ 남북관계-개인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지도자 상호간의 공감대 및 신뢰 수준
-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남북 참여자 개개인의 인식 및 정서
- ⑤ 남북관계-사회
  -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및 남북 합작사업
  -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개발 지원 등)과 이를 통한 인적 교류
- ⑥ 남북관계-국가
  -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사안,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각 분야
  -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과 무력시위 및 충돌
  - 남북평화협정체결
- ⑦ 국제환경-개인
  - 국제기구의 외교관으로서 통일문제에 관여(UN, IAEA, WFP 등)
  - 외국 언론에 기고 또는 외국의 여론 주도층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환기
- ⑧ 국제환경-사회
  - 기업의 해외사업에서 북한 기업과의 협력: 북한 노동자 고용 등
  - 민간단체의 국제 NGO 동참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지원 참여
  - 남북한 사회문화단체들의 국제행사 공동참여
- ⑨ 국제환경-국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
  - 북·미 및 북·일 대화 및 관계 정상화
  -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ADB, IBRD, IMF, WTO 가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이상과 같은 각 부분의 이슈들은 그 자체로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되

어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범주화의 방식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애용되듯이 사회과학에서 익숙한 사회체계의 각 분야 — 예컨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 로 나누어 묶을 수 있으며, 또 국가 중심이나 현안 내지 목표 중심의 범주화도 가능하다. 어쨌든 범주화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연구과제 설정의 차이는 다루게 될 이슈들을 다른 방식으로 서로 연계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연구방법이나 분석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공간적 차원의 접근은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객관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드러난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의미, 즉 가치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문화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연역이론에 의존함으로써 성공여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바로 시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간적 차원은 가장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배열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과거에 속하는 연구과제로는 분단의 원인과 배경,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사건들,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현재의 연구과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과거에 속하는 연구과제들 중의 상당부분과 중첩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안을 예로 든다면, 앞의 공간적 접근에서 언급된 이슈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갈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의 연구과제 역시 현안의 발전된 모습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연구과제와 중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점은 대체로 통일한국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일이 초래할 통합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적 접근은 흐름과 변화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정태적 기준을 넘어 변화의 맥락에서 시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된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면, 연구과제 별로 비교를 통한 변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에서 미래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에서 미래로의 시간적 흐름과 불가분으로 연관된 중요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다름 아닌 통일대비 연구이다.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역사적) 경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방식의 연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러한 연구가 허황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분단관리 내지 통일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외국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며, 창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는 연구과제들은 그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요구하

고 있다. 대체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특정 시점에서 각각 바라볼 경우에 경험적 자료를 통한 설명의 방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되돌아 볼 경우에는 이해에 따르는 해석이 불가피하며, 미래에 대한 시선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연역이론적 예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험적 비교연구 방법이나 문화적 이해의 방법이 각각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어떠한 경우에도 매우 광범한 한반도 문제를 전체로 포괄할 수 있는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으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방법론적 적실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 V. 맺음말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통일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다양하게 조명되었듯이 한반도 문제 자체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분단 이래 한반도 문제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온 것이 하나의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현실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운 것과 직결된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지식탐구의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가치 및 실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리탐구의 방법보다 자유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법이 훨씬 주목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 문제는 공간적으로 매우 포괄적인 범위와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은 상호간에 복잡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국제환경, 남북관계, 남북한의 국내환경의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되는 한반도 문제는 이들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도 변화한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통일연구에서 공간적, 시간적 차원을 두루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 설명과 문화적 이해를 모두 포괄하는 방법론 내지 분석틀을 만들기란 매우 힘들다.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연구의 현 수준을 고려할 때, 당장 원대한 통일연구방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회

과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의 바탕 위에 통일연구의 과제별로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이론은 적어도 각각 현실의 특정한 일면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는 통일연구자들이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과 일반 이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통일연구방법의 모색과 관련하여 시도되는 하나의 이론적인 논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0월 2일 ■ 심사: 11월 15일 ■ 채택: 11월 19일

## 참고문헌

- 강광식. “북한연구 방법론 고찰: 주요 쟁점의 현황과 과제.” 『북한학보』. 제19집, 1995.
-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강정구 편.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26집, 1993.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의 성찰』. 서울: 한울, 2005.
- 구갑우·박건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10.21.
- 구본태. “통일이론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제언.” 『북한』. 통권 제42호, 1975.6.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서울: 명인문화사, 2006.
- 김광억 외.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통일학 기획과제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 2004.11.
- 김국신·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도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국방논집』. 20호, 1992.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김용현.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1996.
- 김태현.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

10.21.

-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5호, 2005.
- 김학성. “독일통일이후 내적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대학세미나, 1998.
- \_\_\_\_\_. “분단의 문화현실과 통일담론의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도날드 폴킵혼. 『사회과학 방법론』. 김승현 외 옮김. 서울: 일신사, 1998.
-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①』. 전성우 역.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상) & (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_\_\_\_\_.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홍원. “시선 끌기 위해 국론분열로 고장: 남남갈등 보도의 정치적 의미.” 『저널리즘비평』. Vol. 32, 2001.
- 북한대학원 연구.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2003.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움, 2006.5.18.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호, 1988.
- \_\_\_\_\_.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의 재론.” 『역사비평』. 제28호, 1995.
- \_\_\_\_\_.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 1975.
- \_\_\_\_\_.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 양성철.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양준희.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10.21.
-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 한반도 통일.”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 유호열.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연계학술회의 기획세미나, 1996.12.5.
- 윤덕희·김규륜. 『한민족공동체 구체화 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이 근.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 10.21.
-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 연구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서울: 법문사, 1981.

- \_\_\_\_\_.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분단국가 통합이론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서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 이온죽.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용필. “기능 통합의 이론적 기초 : 접근법과 적실성.” 양성철·이용필 공편. 『남북한 통합론: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서울: 인간사랑, 1992.
-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6호, 1995.
-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10.21.
- 정진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 2000.10.21.
-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편익.”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7.
- 조순승. “한국중립화는 가능한가?: 김삼규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상계』. 제8권 제12호, 1960.
-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2000.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서울: 한울, 2003.
-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4.
- Gransow, Volker. *Konzeptionelle Wandlungen der Kommunismusforschung; von Totalitarismus zur Immanenz*.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0.
- Haas, Ernest B.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 No. 4, 1967.
- Haas, Erne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 Habermas, Jürgen.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IV*. Frankfurt a.M.: Suhrkamp, 1981.
-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 2. Frankfurt a.M.: Suhrkamp, 1981.
- Hall, Peter A. & R.C.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Vol. XLIV, 1996.
- Hay, Colin & D. Wincott. “Sturcture, Agency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Vol. XLVI, 1998.
- Kindermann, Gottfried-Karl.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World*



*peace promotion through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a Comparative Evaluation.* München: tuduv Verlag, 1976.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0.

Ludz, Peter C. *The Changing Party Elite in East German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2.

Ludz, Peter C. "Die soziologische Analyse der DDR-Gesellschaft,"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71.

Ludz, Peter C. *Ideologiebegriff und marxistische Theorie: Ansätze zu einer immanenten Kri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6.

Müller, Harald.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Zur Kritik der utilitaristischen Handlungstheorien."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1. Jg, H.1, 1994.

Risse, Thomas.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1, Winter 2000.

Abstract

## Thinking about Methodology of the Unification Research : Evolution, disputed Issues and Subjects

*Hak-Sung Kim*

Although the necessity for scientizing and systematizing the unification research has been emphasized for a long time, discussions on its concrete guiding principles or alternatives do not have been yet activated. Therefore this paper, that aims for 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its methodology, focuses on thinking abou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searching for its methodology. In the first place method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research from the outset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up to now are summarized and analyzed. Thereafter I find out from the methodological debates in social science three major disputed issues, that would result from systemic approaches to its methodology; ‘explanation vs. interpretation/understanding,’ the value-conflicts symbolized by ‘nation vs. alliance,’ and ‘agent vs. structure.’ In fact methods of research are inseparably related to a question of what should be studied. In this context I try to examine the research subjects closely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theoretical discussions, while dividing them into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 It may be undeniable that diverse methods could be applied to the unification research.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exists always the question of choice, just because methodological appropriateness w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according to properties of each subject.

**Key Words:** Unification research, North Korea research, Korean Question, Methodology, Positivism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동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의 특전

- (우)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주실 분들께】

「통일정책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북한의 실태, 한반도의 주변정세, 통일정책에 관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심사위원의 심사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원고는 반드시 본 연구원의 '원고 집필요령'을 참고하여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서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하실 분은 먼저 담당자를 통해 투고 응모신청을 해주십시오.

### <원고보내실 곳>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901-2523(간사)  
(02) 901-2532(대표)  
Fax: (02) 901-2572  
E-mail: iskim@kinu.or.kr  
Homepage: http://www.kin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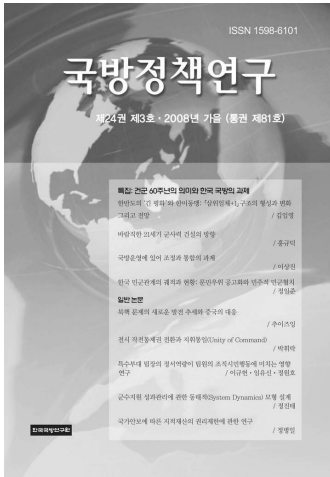
### 【원고집필 요령】

-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정도로 한다.
- 200단어 정도의 국·영문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s), 영문제목과 영문이름을 반드시 첨부·제출해야 한다.
- 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 속에 기재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 II, 2, 나, (2), (나), 2)
-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쓰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저서: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100.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 논문: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p. 135.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627~640.
  - 신문:  
*The Korea Times*, May 18, 1999.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18일.
  - 인터넷 자료:  
<www.kinu.or.kr/elec\_lib/library.html> (검색일: 2002.1.15)
- 앞에서 인용한 저서·논문을 재차 인용할 경우
  - 저서: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책, p. 102.  
*Ibid.*, p. 22.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p. 10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15.
  - 논문: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글, p. 137.  
*Ibid.*, p. 629.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p. 137.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635.
  - 신문:  
위의 신문, 1999년 5월 18일.  
*Ibid.*, December 25, 1999.
  - 인터넷 자료:  
위의 인터넷 자료  
*Ibid.*
-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각주와 같다. 출처와 각주가 반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에 따른다.
-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 『국방정책연구』를 계간으로 발간 배포합니다.



통권 제81호      제24권 제3호 · 2008년 가을

**특집 논문: 건군 60주년의 의미와 한국 국방의 과제**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 김일영  
 바람직한 21세기 군사력 건설의 방향 / 홍규덕  
 국방운영에 있어 조정과 통합의 과제 / 이상진  
 한국 민군관계의 궤적과 현황: 문민우위 공고화와 민주적 민군협치 / 정일군

## 일반 논문

북핵 문제의 새로운 발전 추세와 중국의 대응 / 추이즈잉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Unity of Command) / 박휘락  
 특수부대 팀장의 정서역량이 팀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규현·임유신·정원호  
 군수지원 성과관리에 관한 동태적(System Dynamics) 모형 설계 / 정진태  
 국가안보에 따른 지적재산의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 정병일

## 『국방정책연구』에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한글>로 작성하되,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자료의 경우 80매 이내, 서평의 경우 3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4. 기타 내용은 본지 말미 및 본원 홈페이지(www.kida.re.kr)의 기고 및 집필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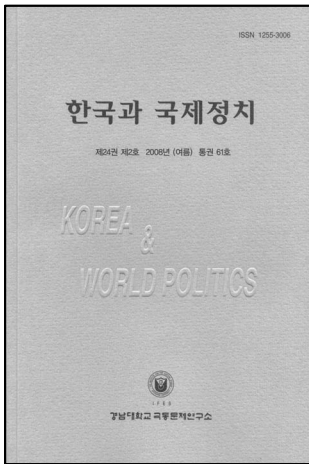
※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 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전화 : 02)961-1227 e-mail: jdps@kida.re.kr 팩스: 02)961-1195



#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 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 4회 『한국과 국제정치』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 한국과 국제정치 제 24권 제4호 2008 겨울호 (통권 63호)



### 목 차

-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수훈
- 박정희 시대의 야당 연구 / 김수진
-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회법개정의 방향: 민주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 김민전
-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 이지호
-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도변화의 논리를 중심으로 / 현재호
- 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 유형화와 그 변화 / 주장환
- 데칼로그 협상과 독일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함의 / 홍기준
- 유럽통합과 스웨덴 중립노선: 역사, 성격, 진화 / 김인춘 · 김옥



##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한국과 국제정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마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이하
- 원고 보내실 곳: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4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2(김혜경)  
이메일 접수: ifes@kyungnam.ac.kr

# 『국가전략』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심사제 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002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국가전략』을 보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 제14권 4호 2008년 겨울호 (통권 제44호) ▣



### 【논문】

- 신냉전 질서의 등장 가능성과 한계: 그루지야 전쟁을 중심으로 / 김열수
- 생산 요소의 이동성과 통상 정치: 199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치 / 정하용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 고경민 · 이희진
-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안: 외교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 박건영
- 한국에서의 정치참여: 접촉 및 항의활동 / 지병근 · 박종민
-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요인 분석: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이광훈·김권식

### 【서평】

- 러시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한구
- 새로운 미국혁명 / 송대성

## 『국가전략』 원고 공모

-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어떤 경우에도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 · 휴대폰 ·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1, 031-723-88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For over 17 years, KIN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ISSN 1229-6902) has allowed for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information among scholars and experts at home and international around the globe, sharing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North Korea,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issu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s candidate for KRF(Korea Research Foundation)-registered biannual journal, The Journal welcomes submission of manuscripts relevant to the issues of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Northeast Asian securit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Submission of a paper will be held to imply that it contains original unpublished work and is not being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l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are subject to review by relevant experts in the field before they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e provide honorarium for the articles that have been chosen for publication.

American-English as standard format, manuscripts should be double-spaced and footnoted with a full list of bibliographies quoted throughout the footnotes. The length required for articles should be 6,500-7,000 words in 12-font size, using Microsoft Word only. The deadlines for manuscript submission are as follows: April 15 for summer issue and October 15 for winter issue respectively.

Vol. 17, No. 2 (2008)

The Next U.S. Administration and its Policies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

*Wu Chunsi*

Obama's Asia Policy: A Look Back at the  
Presidential Race to Understand America's  
Next Steps in Asia

*Dennis Shorts and Vincent Min*

Prospects for the U.S.-DPRK Normaliz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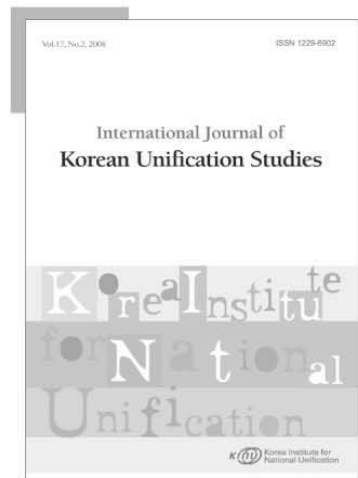
*Eul-Chul Lim*

New Geo-economic Thinking on North Korea in  
Japan

*Masahiro Matsumura*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Sang-Hyun Park*



**Please send your manuscripts or inquiries to the e-mail address listed be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75, 4.19(Saigun)-Gil, Gangbuk-Ku Seoul 142-728, Korea

(Tel) (82-2)9012 658 (Fax) (82-2) 9012 541

(E-Mail) [kimmik@kinu.or.kr](mailto:kimmik@kinu.or.kr) (Webpage) <http://www.kinu.or.kr>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통일연구원** [www.kinu.or.kr](http://www.kinu.or.kr)